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방보훈민원..... 5

- 1. 남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6
- 2.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11
- 3. 백령도 해군 항공기지 건설예정부지 위치 변경 17
- 4. 군 부대 주변 주민불편 해소요구 20

산업농림환경민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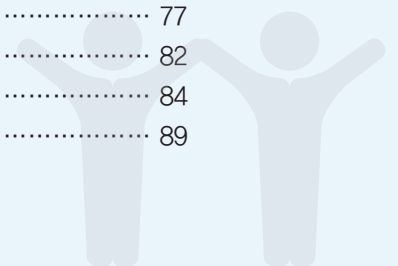
- 1. 철도 소음 및 진동 피해 26
- 2. 전북 정읍 내장초등학교 옆 축사 이전요구 31
- 3.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 보전 요구 37
- 4. 도로소음 저감 대책 요구 42
- 5. 지하수 오염 피해대책 마련 요구 47
- 6. 강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52

주택건축민원 55

- 1. 대체도로 조기개설 요구..... 56
- 2. 건축신고 반려 처분 철회 요구 61
- 3. 삼호임대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 65

도시수자원민원 71

- 1. 광교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72
- 2. 섬진강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정읍 산내 종성리 교통대책..... 77
- 3. 대구혁신도시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 82
- 4.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84
- 5. 강남보금자리사업지구 은곡마을 환경개선 89



Contents

6. 고양삼송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93
7. 가화천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95
8. 봉은역사공원 조성	100
9. 한강신도시내 국방부 재산의 조속한 양여승인 요구	104
10. 구)각산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구조 개선	106
11.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요구	111
12. 광양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대책 수립 요구	116

교통도로민원..... 123

1.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	124
2. 투명방음벽 설치.....	128
3.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134
4.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140
5. 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145
6. 지방도 717호선 조기건설 및 임실군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150
7. 중앙선 U자형 주포과선교 직선화	156
8.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161
9. 국도확장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구제.....	166
10. 소사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구제	172
11. 영동고속도로 구)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177
12.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	182
13. 고등학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188
14.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191
15. 남원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196
16. 전주 두현마을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등	200

고충민원특별조사..... 205

1.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206
----------------------------	-----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방보훈민원

1. 남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2.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3. 백령도 해군 항공기지 건설예정부지 위치 변경
4. 군 부대 주변 주민불편 해소요구

1

남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민원번호 : 2BA-1210-007129, 2AA-1211-243087 (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민원개요

6·25전쟁 당시 건립되어 軍 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항공기 주력기종 변경 등에 따라 헬기예비작전기지로 분류된 해당비행장은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폐쇄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軍이 비행장 폐쇄 합의로 약 3만 여 평에 이르는 토지가 비행안전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주민들이 축사 및 농기계 창고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60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및 상동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인데 이 마을 일원에는 남원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남원비행장 주변 일원에 축사 및 농기계창고 등을 건축하려하였으나, 軍에서 부동의 하는 것은 부당하니, 남원비행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집단민원 제기

2. 주요 쟁점사항

- 軍 비행장의 폐쇄 가능여부
- 軍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軍 비행장 이전

3. 갈등 분석

- 마을과 인접한 軍 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2. 10. 2.과 같은 해 11. 29. 지역주민 292명 군비행장 이전 또는 폐쇄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군(軍)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폐쇄 불가하지만, 전북 남원시가 대체지를 제공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 이에 전북 남원시는 대체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4. 갈등해결과정

-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전북 남원시는 軍 비행장의 폐쇄를 위해 00연대 일원에 군사시설(항공)을 조정하여 기부하고,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 軍은 전북 남원시가 00연대 일원에 군사시설(항공)을 제공할 경우 남원비행장을 폐쇄하여 양여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기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협의) 결과

- 전북 남원시는
 -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 8. 31.까지 103연대 주둔지 확장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시설(항공, 작전) 등 국방·군사 시설건립을 위한 사업방식과 제반사항 등을 협의·결정
 - 국방부에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00연대 주둔지 확장)’을 승인받아, ‘00연대 주둔지 확장사업’을 추진
- 軍은
 - 남원비행장 폐쇄 동의하고, 남원시장이 00연대 주둔지를 확장하여 군사시설(항공)을 건립하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남원비행장 폐쇄 건의, 협의체에 구성하여 세부사항 협의 추진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 軍 비행장 폐쇄 및 00연대 확장을 통해 평시 군사훈련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하는 결과 도출
 - ※ 2013. 2. 15. 조정회의 후 협의완료 후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00연대 주둔지 확장)을 승인 진행 중에 있으며, '15. 12. 완료 예정

전주 MBC

남원 군비행장 이전

2013년 02월 16일 유룡 기자



◀ANC▶

남원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던 공비토벌용 군 비행장이 60년 만에 이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군 부대와 남원시가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남원 시내 개발의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육군 35보병 사단장 등 군 관계자와 남원시장, 주생면 주민 대표 등이 군부대 비행장 이전에 합의하고 서명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8월까지 기존 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고 군부대는 비행장을 폐쇄한다는 조건입니다.

아파트가 바라다 보이는 시내 인근에 위치한 비행장은 지난 1970년대 이후 방치돼 남원 서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공장이나 농업시설 등 일체의 건물도 짓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도 제약이 되어 왔습니다.

군부대와 남원시가 이전에 합의한 것은 지역 주민 2백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60년 전 지리산 공비 토벌을 위해 주민의 토지를 수용해 만들어진 군 비행장 이전으로 남원시의 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국민일보

2013년 02월 18일
12A면 (사회)

빨치산 토벌 軍비행장 60년 만에 폐쇄

남원시 주생면에 위치... 주민들 재산권 행사 길 열려

한국전쟁 때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전북 남원시 주생면에 설치됐던 군(軍) 비행장이 60년 만에 폐쇄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현장중재가 폐쇄를 이끌어 내는 데 큰 힘이 됐다는 지적이다.

남원시는 지난 15일 주생면사무소에서 열린 '남원비행장 폐쇄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

를 통해 비행장 폐쇄가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이한주 남원시장, 정한기 육군 제35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군사작전은 종전과 같이 수행하되 남원비행장을 폐쇄하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에 남원시는 비행장을 대체할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군은 비행장 폐쇄에 필요한 절차에 동의하고 남원시가 대체시설을 건립하면 비행장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1953년 세워졌던 9만400㎡ 규모의 이 비행장(헬기에비작전기지)은 그동안 방치돼 왔으나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출입로가 통제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주민 300여명은 2006년부터 재산권 제한에 따른 대책과 비행장 폐쇄를 요구해 오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원=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서울신문

2013년 02월 18일
12면 (경제)

남원 軍 비행장 60년 만에 폐쇄

주민 "재산권행사 제약" 민원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조율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군 비행장이 건립 60년 만에 폐쇄된다. 이로

써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생면에 세워진 2만 7400평 규모의 군 비행장을 권익위의 중재로 폐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원비행장은 건립 당시 군 작전 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항공기 주력기종 변경 등에 따라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분류된 이후부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한돼 폐쇄 요청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군 측과 남원시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

지 않자 지난해 10월 남원 주민 30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지난 15일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비행장 폐쇄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국민권익위, 남원시 군 비행장 폐쇄 중재

2013-02-15 16:28 이윤승 기자 (love@yna.co.kr)



국민권익위, 남원시 군 비행장 폐쇄 중재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제약 받아 집단민원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제약 받아 집단민원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제약 받아 집단민원

(남원=연합뉴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전북 남원시 군(軍) 비행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현장중재로 폐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남원시 주생면사무소에서 이성보 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정한기 육군 35보병사단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사작전은 중전과 함께 수행하되 남원비행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60년 전에 주생면에 들어섰던 9만3천㎡ 규모의 군 비행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폐쇄되면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들의 욕은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남원비행장은 건립 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분류된 후 비행장의 사용빈도가 낮아지면서 폐쇄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재안에서 남원시는 비행장을 대체할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조치키로 했다.

군은 비행장 폐쇄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동의하고 시가 대체시설을 건립하면 비행장 폐쇄를 추진키로 했다.

주생비행장 폐쇄는 지난해 12월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건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주민을 비롯한 남원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60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

2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폐쇄 또는 이전 등

민원번호 : 2BA-1305-213276 (국방보훈민원과, 김문영 조사관)



민원개요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軍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 가끔 육군항공학교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위원회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에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여 40년 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지역 개발도 가능해짐

1. 민원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의 ①조치원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있고, 헬기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이 불편하며, ②사용하지 않는 연기비행장으로 인해 균형된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니, 비행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해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軍 비행장의 폐쇄 가능여부
- 軍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軍 비행장 이전

3. 갈등 분석

- 마을과 인접한 軍 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2. 4.과 2013. 5. 지역주민 2,600명이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

- 이에 대해 군(軍)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軍 비행장의 폐쇄 불가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체시설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4. 갈등해결과정

-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세종특별자치시는 비행장의 통합에 동의하고, 이를 대체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軍과 협의체를 구성·협의하고, 국방부에서 비행장 통합사업을 승인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 완화, 지정을 건의한다.
 - 軍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행장 통합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 완화,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가능성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는
 -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 12. 31.까지 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시설(항공, 작전) 등 국방·군사 시설건립을 위한 사업방식과 제반사항 등을 협의·결정
 - 국방부에 ‘국방·군사 시설관련 사업(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을 승인받아, ‘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사업’을 추진
- 軍은
 - 軍 비행장 통합 동의하고, 육군 제32보병사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사업’을 완료하면,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경유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및 지정 등을 건의하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칭 ‘연기 및 조치원비행장 통합’을 승인하면, 재산관리 부대장으로서 제반사항 조치하고, 세부사항은 협의 추진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17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 軍 비행장의 통합으로 평시 군사훈련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하는 결과 도출
- ※ 2013. 9. 27. 조정회의 후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18. 12. 완료 예정

YONHAP NEWS

2013년 09월 27일 (금)
포도뉴스

세종시 2개 軍비행장 하나로 통합 합의안 서명



(세종=연합뉴스) 세종시 소재 2개 군(軍) 비행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27일 세종시청에서 이성보(왼쪽에서 5번째) 국민권익위원장과 유한식(왼쪽에서 6번째) 세종시장 등이 1972년 연기군 연기면(옛 남면)에 조성한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3km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연서면)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3.9.27 << 지방기사 참고 >>
sw21@yna.co.kr
(끝)이은파

YONHAP NEWS

2013년 09월 27일 (금)
포도뉴스

세종시 연기비행장 방문한 이성보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압출 왼쪽 두번째)이 27일 오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소재 연기비행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3.9.27 << 국민권익위 제공 >>
photo@yna.co.kr
(끝)사진부공용

충청투데이

2013년 09월 30일 (월)
15면 30면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40년 숙원 풀었다

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에 통합-내년말까지 협의체 구성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전망-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세종시 2개 군 비행장이 조치원비행장 하나로 통합된다. 또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연서면 율하리, 연기면 주민 대표와 세종시장,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중재를 통해 2개 군 비행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1972년 연기군 연기면(옛 남면)에 조성한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3㎞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연서면)에 통합시키는 안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군 당국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행장 폐쇄, 조정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 시설 등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이 조치원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헬기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항공부대 이전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가면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2011년부터 '항공 부대 이전과 사용하지 않는 연기 비행장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11회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이날 지역주민, 세종시, 육군 제32사

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대상 군부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말까지 연기과 조치원 비행장의 통합에 필요한 사업반식과 재반식항을 절감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연기비행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비행장 부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치원비행장의 시설개선과 현대화 등에 투입해 군부대의 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군은 세종시장이 요청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국방부에 건의하게 된다.

비행장이 통합되면 조치원비행장은 현재의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한 단계 낮은 헬기 전용기지로 변경돼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0㎞에서 4㎞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항공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해당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 당시 군 작전 비행장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군의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다. 세종-이승돌 기자 dona90@kbs.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연서면 율하리, 연기면 주민 대표와 세종시장,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중재를 통해 2개 군 비행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세종시 제공

충남일보

2013년 09월 30일 (월)
01면 종합

세종시 군사시설 41년 만에 사라진다

연기비행장 폐쇄·고도제한구역 완화 등 오랜 숙원 해결
권익위·국무조정실 조율... 주민 “빠른 시일 완료” 촉구

연기비행장이 폐쇄되고 고도제한구역이 완화되는 등 그동안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중재해 41년 전 연기면에 세워진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폐쇄키로 했다.

이 비행장은 약 3km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진동, 고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 등 많은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되는 지역(조치원 비행장) 주민들은 “통합으로 인해 이 지역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권익위 등은 통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 것”을 촉구했다.

도시개발로 인해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 쓰고 있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 명은 2011년부터 지

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갈등 지원 업무를 맡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 후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지역주민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군사작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되 두 비행장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중재안에 따라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년 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은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 서준권 기자 sig0133@naver.com

3

백령도 해군 항공기지 건설예정부지 위치 변경

민원번호 : 2BA-1301-261350 (국방보훈민원과, 김영수 조사관)



민원개요

국방부(해군본부)는 신청인 소유 농지(인천 옹진군 백령면 연화1리 612-2 외 15필지 전 34,561㎡)에 해군항공기지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토지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당 3,400원) 이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항공기지 건설예정 부지를 조정 중재함

1. 민원내용

- 주민들의 농지에 서해 5개 도서 방어를 위한 해군 항공기지 건설계획으로 인해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항공기지 건설계획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 항공기지 건설을 반드시 필요
-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농지 수용 불가피
- 해군 항공기지 건설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여부

3. 갈등 분석

- 지역적인 여건상 농업 외 생업수단이 없는 주민들의 유일한 생업수단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니, 해군 항공기지 건설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1. 29. 지역주민 66명 해군 항공기지 건설계획 철회 요구

- 이에 대해 군(軍) 부대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항공전력을 백령도에 배치하기 위해 항공기지의 건설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어려운 주민들의 여건을 이해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인 항공기지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답변
- 기 계획된 해군 항공기지 건설예정부지의 대체지 확보 가능여부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해군 항공기지 예정부지와 인접한 육군 항공기지를 확장하여 육·해군 통합 항공기지를 건설하여,
 -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므로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국방부(해군본부, 육군항작사)는 해군 항공기지 건설 예정부지를 주민들의 농지에서 육군항공기지 내 및 일부 확장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병대사령관은 해군항공기지 건설을 위한 육군항공기지 인접토지(해병대 관리부지)의 사용에 동의한다.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새로운 대안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 기존에 계획된 해군 항공기지를 인근 육군 항공기지 내로 통합 건설하여 합동작전 능력을 증대하고, 부대 운영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경인일보

2013년 03월 22일
01면 (종합)생존이나, 안보나 백령도 헬기장
건설 民-軍 충돌 위기“3.3㎡ 당 1만원 보상 책정
어디로 가서 살 수 있겠나”다음주 천안함 3주기 행사
섬주민들 대규모시위 예고

군 당국은 “원칙따라 진행”

‘서해5도, 안보가 먼저냐 주민 생존
권이 우선이냐’우리군(軍)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
해 백령도 등 서해5도에 군사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
에 들어설 대형 헬기장 사업을 두고
군과 주민들이 충돌 위기에 놓였다.백령도 연화리 주민 50여명은 헬
기장 사업에 반대한다며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오
는 27일 천안함 3주기 행사에 맞춰 대
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국민권
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21일 웅진군과 백령도 주민들에 따
르면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은 백령
도 연화리 일대 논 3만4천561㎡를 수
용해, 코브라 헬기(AH-1S)와 대잠
작전 수행이 가능한 링스 헬기 등이
기동할 수 있는 대형 비행장 건설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연화리에는 코브라 헬기 4~5
대를 운영할 수 있는 헬기장이 있는데
국방부는 서해5도 군사력 증강 차원
에서 비행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가 수용할 땅은 연화리 주민
12명(3만4천561㎡)의 소유로 돼 있는
논과 밭이다. 군(軍)이 주민들에게 제
시한 토지·영농보상 금액은 3.3㎡당
1만~2만원선으로, 이 곳 주민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보상액이 현실적이
지 않다며 토지 수용 협의 자체를 거
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연화리 주민들은 논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 특성상 논과 밭이 모두

백령도 헬기장 건설 갈등 주요내용

군(軍)

서해5도 안보 강화와
군사력 증강차원에서
헬기장 확대 불가피

백령도 주민

주민 생존권 담보된
후에 헬기장 확대
논의해야

링스 헬기

대잠 헬기로 분류
되며 서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정
등을 탐지

코브라 헬기

공격형 헬기로,
서해5도를 대상으로 한
북의 고속부양정 침투
등 방어헬기장 면적
백령도 연화리 일대 논 3만4천561㎡수용되면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군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도시에 나
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국가 안보와 주민 생존권 문제가
충돌하며 빚어진 이같은 상황에서 관
할 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웅진군은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연화리 노대식 이장은 “처음엔 보
상 문제로 군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
제는 돈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농사
를 지으며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
이 우리의 요구”라며 “군(軍)이 섬 특
성을 생각하지 않고 안보 논리만 내
세워 헬기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
는 “민간 부문과 관계된 보상 문제는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주민과의 협의내용 등 더 자세한 부
분은 보안상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
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boq79@kyeongin.com

4

군 부대 주변 주민불편 해소요구

민원번호 : 2BA-1305-243346 (국방보훈민원과, 오행조 조사관)



민원개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근방에 부대 숙소건물과 주민들 주거지가 연접하여 마찰을 빚어오다 최근 부대 재배치 공사를 계기로 공사소음, 비산먼지, 경관훼손 및 사생활침해 등 피해가 있어 부대 숙소건물을 부대 내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 부대 경계 철조망을 담장으로 변경, 부대가 보이지 않게 수목 식재, 전선 지중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군 작전 및 부대 재배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대 숙소이전, 담장설치, 수목식재, 전선 지중화 등을 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2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민원지역은 국립공원인 북한산 둘레길 인근으로 부대 숙소건물과 신청인 주거지가 연접하여(직선거리 9m) 20여년간 마찰을 빚어오다 최근 부대 재배치 공사를 계기로 공사소음, 비산먼지, 경관훼손 및 사생활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집단민원 제기

2. 주요 쟁점사항

-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숙소건물 이전
-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담장설치, 수목식재, 전선지중화 추진

3. 갈등 분석

- 민가와 인접한 군 부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부대 공사로 인해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13. 5. 24. 지역주민 65명 부대 숙소건물 이전, 담장 설치, 수목 식재, 전선 지중화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군(軍) 부대는 피신청인 등은 설계변경 및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공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부대 재배치 공사를 통해 군 숙소건물을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설치, 수목식재, 전선지중화 추진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협의) 결과

- 군 부대는 기존 병영시설을 신청사로 이전하고, 부대 내 노후 전주 및 저압선로를 지중화 하며, 수목식재를 통해 부대관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 거주지와 부대 사이에 설치된 노후된 철조망 울타리 약 50m 구간을 담장으로 변경·설치
- 관련 지자체는 부대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요청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군 부대와 지역주민 사이를 중재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 부대 재배치 공사를 통해 평시 군사훈련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하는 결과 도출

※ 2013. 8. 1. 조정회의 후 부대 재배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4. 8. 완료 예정

news1

2013년 08월 02일 (금)
온라인

권익위 "민간인 주거지 9m거리 군숙소 이전"

2013.08.01 15:26:34 박응진 기자 (pej86@)

(서울=뉴스1) 군부대 숙소가 주거지에서 9m 거리에 있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년만에 불편을 해결하게 됐다.

이곳은 1992년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4층 높이의 빌라가 지어지면서 지난 20년간 마찰을 빚었고 최근 숙소 인근 공사로 소음, 먼지 등 문제가 발생해 빌라 거주민 66명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군부대 숙소를 부대 안쪽으로 이전하고 경계철조망을 담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설계변경과 예산확보 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1일 오후 3시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부대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숙소를 이전하고 철조망을 담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은 ▲군은 기존 병영시설을 부대 내로 이전하며 ▲민원인 주거지와 부대 사이에 설치된 노후된 철조망 울타리를 담장으로 변경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외부에서 부대가 잘 들어다 보지 않도록 해 군의 작전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NEWSis()

2013년 08월 02일 (금)
온라인

권익위, 우이동 군부대 인근 주민 거주불편 해결



2013-08-01 17:37

【서울=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가운데)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군 부대 숙소가 주거지에서 9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던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해 기존의 병영시설을 부대 내로 이전하도록 합의시킨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3.08.0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산업농림환경민원

1. 철도 소음 및 진동 피해
2. 전북 정읍 내장초등학교 옆 축사 이전요구
3.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 보전 요구
4. 도로소음 저감 대책 요구
5. 지하수 오염 피해대책 마련 요구
6. 강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1

철도 소음 및 진동 피해

민원번호 : 2AA-1301-24164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조사관)



민원개요

경의선 개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경의선 개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피해 주장구간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 초과 여부
-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청

3. 갈등 분석

-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건축물 피해에 대한 피해저감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 철도 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측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 시행
 - 정확한 측정과 대책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현황 측정 요청

5. 조정 (합의) 결과

- 전수 조사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점 수를 선정하여 측정
- 소음은 기준이내이나 진동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대한의 진동저감 대책을 수립·시행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최대한의 진동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시행하여 철도 개통 후 소음·진동으로 고생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관리기준 적합을 넘어 최대한의 진동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

연말뉴스

2013년 07월 22일 (월)
03면 (종합)

제천 보례마을 진출입로 민원 중재 한 권익위 이성보위 원장



2013-07-19 16:16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U자형' 도로로 생길 예정인 마을 진출입로를 직선화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출입로 끝부분을 국도와 연결해 직선화하기로 했다. 2013.7.19 << 권익위 제공 >>

경인종합일보

2013년 07월 22일
03면 (종합)

“경의선 인접 주택 철도진동피해 해결”

권익위, 철도시설공단 진동저감 시설 설치 '중재'

지난해 12월 개봉된 경의선 철도 구간 중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인근 골짜기에서 열차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시달려온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공사 전 주민설명회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경의선 개통 이후 민원

인 거주 지역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하여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심해져지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1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 방향 약 400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에서 통과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지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한국소음진동기술회사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를 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동은 건축물 실내 또는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3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한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세부 중재안은 ▲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저감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하고 ▲ 세부대책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진동저감 대책을 수립 후 올해 말까지 진동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 향후 시설 설치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뉴스통신>

중부매일

2013년 07월 22일 (월)
12면 중책

이성보 위원장이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모습.

봉양마을 복선화 교량 '설계변경' 중재

제천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집단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19일 제천시 봉양읍 보례마을 인근 4개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과정에서 재설치 예정인 교량을 설계 변경토록 조정했다. 보례마을 인근 4개지역 주민들은 지난 8월 17일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

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원주~제천 간 고속 전철화 사업의 철도건설로 인해 도로를 보례동 마을 인근 4개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철길을 건너서通行할 수 있는 직선도로"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공단에서 신설하는 진입로가 U형 급곡선 고가도로로

설계돼 있다"며 "고가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은 비가 오거나 동결기에 눈이 와서 결빙이 되면 급곡선으로 인한 미끄럼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가 설계대로 개설될 경우 손수레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600여m를 우회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직선화 시 도로구배가 16%로 설계기준에 위배된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기준에 위배

가 안됨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시설공단 측이 안정상의 이유로 안된다며 민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권위 측은 "공단측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출입로를 직선화할 경우 부득이 인근에 고가형태로 높게 설치되어 있는 국도 38호선을 넘어가는 형태로 개설해야 하는데, 이 역시 도로의 급경사를 피할 수 없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난색을 보이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집단민원이 접수되자 권익위는 지난 19일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최명현 제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로 끝부분을 구 국도 38호선에 연결해 도로를 직선화할 것 ▶제천시는 해당도로가 준공된 후 공단측이 요구 시 유지관리를 맡도록 했다.

모양을 개선한 설계변경안이 마련되면 설치공법 및 경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주민들과 제천시가 같이 논의해 설치키로 하고, 공단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모양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병철 / 제천



권익위, 경의선 인접 주택 철도 진동 피해민원 중재

2013.07.20 14:37:02 김정일 기자 (jikim@egreennews.com)

국민권익위는 올해내 진동저감 시설 설치토록 중재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현율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공사 전 주민설명회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민들은 경의선 개통 이후 민원인 거주 지역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돼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 약 400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에서 통과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먼저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를 했다"며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동은 건축물 실내 또는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율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소음·진동 측정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피신청기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라며 "향후 권익위는 이러한 중재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

전북 정읍 내장초등학교 옆 축사 이전요구

민원번호 : 2BA-1304-134506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조사관)



민원개요

전북 정읍시 소재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과 교내 학생, 교직원의 건강 등도 해치는 등의 폐해가 있어 축사를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내장초등학교 인근 소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과 교내 학생, 교직원의 건강도 해치고 있는 등 폐해로 축사에 대한 이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축사 이전 시 이전 비용지급 여부
- 기존 부지에 축사 재 설치 금지

3. 갈등 분석

-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학습권 침해, 건강 위협 등으로 축사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
-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축사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축사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
- 축사 소유자 또한 적정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축사의 조기 철거 및 이전에 협조할 것을 약속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민원 축사를 2013. 10. 31.까지 철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액(7,00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 부지에 더 이상 축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자체와 축사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악취로 고생한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축사소유자가 만족할 보상금을 재정내에서 지급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권익위, 경의선 인접 주택 철도 진동 피해민원 중재

2013.07.20 14:37:02 김정일 기자 (jilim@egreennews.com)

국민권익위는 올해내 진동저감 시설 설치토록 중재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현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공사 전 주민설명회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주민들은 경의선 개통 이후 민원인 거주 지역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돼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 약 400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에서 통과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먼저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를 했다"며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동은 건축물 실내 또는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소음·진동 측정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피신청기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라며 "향후 권익위는 이러한 중재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NEWSis.** ()
 2013. 05. 23
 2013. 05. 23

정읍, 초등학교 옆 축사악취 분쟁 권익위 중재 성사

2013-05-23 17:34 김종호 기자 (seun6685@newsis.com)

【정읍=뉴스시스】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축사와의 악취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정현을 권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민원을 제기한 내장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해 축사 소유주 A(55)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곳 초등학교는 담장하나는 사이에 두고 있는 한우축사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었다.

특히 학교 급식실과 10m 위치에 있는 축사의 악취 때문에 학생들이 식사 중 구토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여름철 수업 중에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반면 농장주인 A씨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선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A씨는 학교 측의 피해가 적도록 축사의 소들을 모두 옮겨놓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 상태로 1년여가 넘도록 학교 측과의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그동안 시와 정읍교육지원청에 축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다.

하지만 축사이전에 따른 보상액을 둘러싸고 시와 A씨의 이견이 커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곧바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통을 파악한 뒤 관계 기관과 축사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상액에 대한 이견과 정읍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소극적 자세가 더해져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이날 중재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는 축사이전에 따른 신축이전비용 중 7000만원을 시가 A씨에게 지급하고 A씨는 신축이전 때 추가되는 3000만원을 자부담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거둬진 민원제기로 소의 입식이 불가능해 발생했던 피해 부분은 A씨가 감내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중재합의안에 따라 A씨의 축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철거해 이전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 상황이 종결될 전망이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을 권익위 상임위원은 "자치단체에서 향후 축사에 대한 허가나 지원을 검토할 때 악취에 민감한 시설이 주변에 있는 지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안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읍교육지원청에도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을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권익위의 중재과정 막판까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news1 파이낸셜뉴스 메디컬투데이

"내장초교 학생들 악취 고통에서 벗어나"

2013.05.23 15:01:16 박제철 기자 (jcpark@)

(정읍=뉴스1) 개교 이래 약 3년 동안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겪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후 3시 전북 정읍시청 부속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정읍시 내장초등학교(교장 이준상) 학부모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현울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내장초등학교와 인접한 축사를 올해 내로 이전하는 중재안을 합의시켰다.

민원이 제기된 축사는 내장초등학교가 개교한 시기와 같은 해인 2009년 대규모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가축 사육수가 대폭 늘어 악취가 심하게 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근에 있는 부설 유치원과 교실들은 여름에도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축사와 채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식사를 하다가 악취 때문에 구토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그동안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에 축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전 보상액을 둘러싸고 축사 소유자와 정읍시장의 이견이 커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실사를 통해 학생들의 고통을 파악한 후 즉시 관련기관과 축사 이전 협의를 했으나 관할 교육기관의 소극적 자세, 축사 이전 보상액 이견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이날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축사 소유주는 오는 10월말까지 축사를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 정읍시는 축사 이전 보상액을 일부 증액한 후 축사 소유주가 이전을 완료하면 올해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현울 권익위 상임위원은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단체도 향후 축사에 대한 허가나 지원을 검토할 때 악취에 민감한 시설이 주변에 있는 지를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NEWSis.** () 국내 최대
언론 뉴스통신사
2001년 설립

정읍, 초등학교 옆 축사악취 분쟁 권익위 중재 성사

2013-05-23 17:34 김종호 기자 (seun6685@newsis.com)

【정읍=뉴스시스】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와 인접한 축사와의 악취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정현을 권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민원을 제기한 내장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해 축사 소유주 A(55)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논의했다.

이곳 초등학교는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우축사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었다.

특히 학교 급식실과 10m 위치에 있는 축사의 악취 때문에 학생들이 식사 중 구토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여름철 수업 중에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반면 농장주인 A씨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선 축사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A씨는 학교 측의 피해가 적도록 축사의 소들을 모두 옮겨놓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고 이 상태로 1년여가 넘도록 학교 측과의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그동안 시와 정읍교육지원청에 축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다.

하지만 축사이전에 따른 보상액을 둘러싸고 시와 A씨의 이견이 커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곧바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통을 파악한 뒤 관계 기관과 축사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상액에 대한 이견과 정읍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소극적 자세가 더해져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이날 중재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는 축사이전에 따른 신축이전비용 중 7000만원을 시가 A씨에게 지급하고 A씨는 신축이전 때 추가되는 3000만원을 자부담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거둬진 민원제기로 소의 입식이 불가능해 발생했던 피해 부분은 A씨가 감내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중재합의안에 따라 A씨의 축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철거해 이전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 상황이 종결될 전망이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을 권익위 상임위원은 "자치단체에서 향후 축사에 대한 허가나 지원을 검토할 때 악취에 민감한 시설이 주변이 있는 지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안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읍교육지원청에도 "학교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권익위의 중재과정 막판까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3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 보전 요구

민원번호 : 2BA-1304-162707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최현 조사관)



민원개요

현대영농조합법인을 수매처로 하여 단풍미인쌀을 납품하여왔으나, 이 민원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미지급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급토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2004년부터 신청 외 현대영농조합법인을 수매처로 하여 단풍미인쌀(정읍시 추진 지역 쌀 브랜드)을 납품하여왔으나, 2010년 이 민원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민원 법인을 선정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차액을 보전토록 조치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받지 못한 수매대금의 지급요청
- 쌀 구매 계약 및 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하자있는 행정행위 부존

3. 갈등 분석

- 현대영농조합법인을 수매처로 쌀을 납품하였는데 2010년 이 민원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한 당해 연도 수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충 민원
-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민원 법인을 선정한 지자체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
- 쌀과 관련한 벼 출하 계약 및 결제는 지자체가 간여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특별하고 명백하게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수매대금 지급 불가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쌀 수매대금 피해 보전에 대한 합의 도출

5. 조정 (합의) 결과

-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 (153,109,751원)의 일부를 피해농가 54가구에 2013년 12월말까지 지급
-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보전요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향후 지역 쌀 브랜드화 사업에 적극 협조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자체와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일부나마 수매대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수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 문제 해결 태도로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

공감언론 **NEWSis.** () 국회 최대
언론 뉴스통신사
2007.02.11.

정읍, 수매대금 떼인 농민들 권익위 중재 · 해결

2013-06-11 16:37 김종효 기자 (seun6685@newsis.com)



【정읍=뉴스시스】 민간법인 미국처리장의 부도로 쌀 수매대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일부 보전이 이뤄지도록 자치단체와의 협의회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11일 전북 정읍시청에서 정현율 상임위원 주재로 김생기 시장과 신태인을 양귀리 영농회 정을수 대표를 비롯한 시 관계자 및 영농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미국처리장(RPC)의 부도로 쌀수매대금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피해액 1억5000여만원 중 50%를 정읍시가 보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권익위의 중재가 성사됐다.

앞서 영농회 회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을 납품하기 위해 시의 지정을 받은 지역 민간 RP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한 벼를 납품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8월 이 RPC가 부도처리되고 업주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총 1억5300만원의 쌀 수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해당 RPC가 시에서 지정한 업체이므로 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미지급분을 시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읍시의 경우 해당 행정행위 일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설사 농민들을 위해 시가 보전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가 미지급분을 보전할 의무는 없지만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시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합의된 세부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정읍시는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50%인 7600여만원을 보전하고 이를 피해농가 54가구에 올해 말까지 피해금액 비율로 지급기로 했다.

또한 영농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시에 보전청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중재합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영농회 정을수 대표는 "수년간 이 문제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며 "권익위원회와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만큼이라도 현실적 해결을 이루게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마음 같아서는 시가 전액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현행법상 미지급분 보전에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법이 없어 고심이 많았다"며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신 권익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업주가 하루 빨리 잡혀 나머지 부분도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울 권익위 상임위원은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전에 대한 협상과정에 난항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읍시의 민원해결 의지와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news1 파이낸셜뉴스

"부도 민간 미곡처리장 쌀수매 대금, 지자체가 보전해야"

2013.06.11 15:21:00 박제철 기자 (jcpark@)

(정읍=뉴스1)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납품했다가 업체의 부도로 수 년동안 쌀 수매대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수매대금의 일부를 받게됐다.

11일 오후 2시, 권익위는 정읍시청 부속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피해농가 민원인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의 참석한 가운데 정현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측간 중재를 성사시켰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1리 영농회 소속 54가구는 20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로 납품하기 위해 정읍시가 지정한 벼의 건조, 저장, 검사 등을 자동화 하는 미곡종합처리(RPC)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지정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1억5300여만원의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원인들은 이 법인을 지정한 정읍시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읍시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비록 정읍시가 피해농가에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지만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했고 정읍시 또한 피해농가와 해당 민간 법인과 계약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이날 권익위 중재에 따라 ▲정읍시는 민간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50%인 7600여만원을 보전하고 ▲이를 피해농가 54가구에 올해 말까지 피해금액 비율로 지급키로 했다.

이번 조정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와 법률 전문가 의견조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됐으며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현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중재안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을 피해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며 "정읍시의 민원해결 의지와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낸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고 밝혔다.

4

도로소음 저감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BA-1304-260664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조사관)



민원개요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 국지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57번 국지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 마련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피해 주장지역의 소음 대책 마련요청
- 소음방지 시설 설치 책임자 결정 및 선정

3. 갈등 분석

- 도로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에 대한 피해저감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 소음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
- 소음방지 시설 설치 시 과도한 비용 부담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 · 중재안 도출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관련자료 제출하여 방음시설 설치 가능여부 진단
 -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마련과 그 재원확보를 위한 조정 진행

5. 조정 (합의) 결과

-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와 공사가 분담하여 마련하고 용역을 착수·시행
- 소음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실행협약을 지자체와 공사가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신청인에게 통보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시행하여 소음으로 고생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다수 피신청인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함



성남 판교원마을 소음피해 4년 만에 해결 합의

2013.07.18 (16:25) 홍석우 기자

인근 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4년 만에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소음 해결 방식은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로 결정됐고, 성남시와 LH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원마을 3단지 주민 230가구는 2009년 10월 입주 이후 단지 옆 지방도 57호선의 차량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판교 3단지 지방도에 친환경 방음터널

2013-07-18 18:25

경기도 성남시와 LH, 판교신도시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도로 관리기관인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해 판교원마을 3단지 옆 지방도에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을 시공하게 됩니다.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은 방음 터널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법입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남 판교원마을 소음피해 4년 만에 해결 합의

2013-07-18 15:40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성남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4년 만에 교통소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교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1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다.

소음 해결 방식은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 시공으로 결정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 LH는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며, 도로 관리기관인 성남시는 친환경 방음터널 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방음터널 설치와 비용분담에 관한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조정안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조율을 거쳐 마련됐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판교원마을 3단지 아파트 230가구 주민은 2009년 10월 입주 이후 바로 옆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방음시설 설치를 성남시와 LH에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과 함께 국지도 57호선 판교원마을 구간도 방음터널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판교원마을 교통소음 '방음터널'로 댈는다

2013-07-18 17:16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is.com)

【성남=뉴스시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 입주민들이 입주 4년만에 교통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교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1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분당~안양간 국지도 57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다.

권익위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가 현 도로소음을 환경기준까지 소음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도로 관리기관인 시는 방음터널 시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방음터널 설치와 비용분담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판교원마을 3단지 아파트 230가구 주민들은 2009년 10월 입주 뒤 단지 옆 57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시달리자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5

지하수 오염 피해대책 마련 요구

민원번호 : 2BA-1307-032521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병학 조사관)



민원개요

원주~제천간 복선 전철 공사구간 중 고모터널 공사로 신청인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해 상수도 설치 및 대체 취수원 개발토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원주~제천간 복선 전철 공사구간 중 신청인 마을에서 시행되는 고모터널 공사로 신청인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 공사 전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거나 대체 취수원 개발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상수도 본관 설치 책임자 선정
- 상수도 설치 및 취수원 개발 시점

3. 갈등 분석

- 복선 전철 공사로 인한 생활용수 고갈에 대한 피해저감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상수도 설치 계획보다 먼저 마을의 지하수 영향을 고려하여 상수도 설치
 - 고모터널 공사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이행

5. 조정 (합의) 결과

- 터널 공사로 인한 예상 피해 가구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가구에 대해 상수도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로 인해 지하수 피해가 발생 시 가구 이용 취수원을 개발
- 주민들은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고모터널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용수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다수 피신청인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함

권익위, 제천 고모동 주민 식수 걱정 '해결'



【제천=뉴스시스】유경모 기자 =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고모동 마을 지하수 오염 피해 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2013.09.12.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공사 전 상수도 설치 중재

【제천=뉴스시스】유경모 기자 =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 전철 공사 구간 중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마을에 신설하는 터널로 인한 주민 고통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모리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이 참석한 현장조정위원회를 열어 터널 공사 전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하는 조정·중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 전철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 중간에 12~15m 깊이의 굴착 터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3~5m 깊이의 얕은 지하수를 파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고모리 주민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량도 부족할 것이 명백하다며 터널 공사 전 마을 전체에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가구에 제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원을 분담해 공사 전 상수도 설치를 완료하라고 조정했다.

지하수 영향이 덜한 가구에는 지하수 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체 상수원을 개발하라고 중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안전한 음용수 확보는 국민 행복의 최우선 요소"라며 "국민 불편이 생기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fuccomo@newsis.com

忠 淸 日 報

2013년 09월 13일 (금)

사회 04면

권익위, 철도 건설현장 주민 식수문제 해결

제천 고모동 지하수 오염민원 조정회의... 상수도 설치키로

제천~원주간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의 터널 공사로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주민들이 마을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예상되며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은 12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모동 마을 대표와 이동훈 한국철도시설공단 강

원본부장, 최명현 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터널 공사 전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마을 전체가 암반 지대로 고모동 주민들은 3~5m 깊이의 얇은 지하수를 파 생활용수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중

간에 12~15m 깊이의 굴착 터널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을 통해 제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원을 분담, 터널 공사 전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터널 상류지역의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 문제가 나타나면 철도시설공단이 대체 상수원을 개발토록 했다.

/제천=박정규기자

충청매일

2013년 09월 13일 (금)

충북 07면

제천 봉양 지하수 고갈 민원 해결 전망

국민권익위, 터널 공사 전 상수도 설치 등 중재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의 터널 공사로 마을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될 위기에 놓였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마을 대표와 이동훈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최명현 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터널 공사 전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고모동 마을은 전체가 암반 지대로 주민들은 3~5m 깊이의 얇은 지하수를 파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중간에 12~15m 깊이의 굴착 터널이 추진되자 지하수 고갈과 오염될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이 터널이 설치되면 터널 상·하류의 지하수가 영향을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

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이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을 통해 제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원을 분담, 터널 공사 전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터널 상류지역의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 문제가 나타나면 철도시설공단이 대체 상수원을 개발하도록 권고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딘 찾아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현기자

충청투데이

2013년 09월 13일 (금)

지역 19A면

제천 봉양읍 지하수 고갈 위기 해결

국민권익위, 중앙선철도 복선화 피해 주민민원 중재 성공

터널공사 전 마을 상수도 설치...시·철도시설공단 재원 분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마을 지하수가 고갈될 위기에 놓인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고모동 주민의 민원을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중재를 통해 해결했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마을 대표와 이동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최명현 제천시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터널 공사 전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제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원을 분담하고 터널 공사 전에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조정했다.

또 터널 상류 지역의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나타나면 철도시설공단이 대

체 상수원을 개발하도록 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들은 최근 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중간에 12~15m 깊이의 굴착 터널이 추진되자 지하수 고갈과 오염 우려가 있다며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7월 권익위에 냈다.

박 부위원장은 "안전한 식수 확보는 국민 행복의 최우선 요소"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디든 찾아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gidah@etoday.co.kr

6

강화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적지 보존 요구

민원번호 : 2CA-1211-244650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박대근 조사관)



민원개요

창원황씨 문중에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제척요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부도로 이전설치 및 분묘 이전비 특별지원, 배수지 이전 등으로 조정 증재하여 민원 해결

1. 민원내용

-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황형장군 사당인 장무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케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편입을 제외하거나 유적지 보존대책을 세워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신청인은 산업단지 편입제외 및 진입도로 노선 변경, 별제공 묘소 보호를 위한 배수지 이전 요구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전면 재검토 불가, 내부도로 이설은 공기지연으로 수용 곤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별제공 묘소 이장 불가피함

3. 갈등 분석

- 강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황형장군 사당인 장무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케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창원황씨 문중에서 고충민원을 제기
- 사업시행자인 인천상공강화산단(주)는 ‘수차에 걸쳐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무사 유적지를 산업단지 편입부지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문중대표가 바뀌었다고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신청인들은 2009년부터 산업단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중재안 도출
 -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합의 중재 (4회)
 - 진입도로 노선변경 및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1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도48호선 공사감독관)

5. 조정 (합의) 결과

- 내부도로 5m 이설하여 황형사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배수지를 다른 곳 또는 신청인들이 반대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 신청인은 별제공 묘소 이장에 협조하며, 제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장무사 등 주변 유적지 정비 및 문화유산 보전 노력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안보관광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4차에 걸친 현장조정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진입도로 노선변경을 협의하여 2009년부터 4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원을 해결
 - 진입도로 노선변경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6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
- 8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강화군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원 확보 기반 확보
 - 8개월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물리적인 충돌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주택건축민원

1. 대체도로 조기개설 요구
2. 건축신고 반려 처분 철회 요구
3. 삼호임대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

1

대체도로 조기개설 요구

민원번호 : 2BA-1302-177773 (주택건축민원과, 류지호 조사관)



민원개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5-1 일원에 시행 중인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공사를 위하여 지반을 약 1m 이상 성토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이 민원 주택단지 내 너비 약 4m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불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니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너비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달라.

1. 민원내용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 사용하던 현황도로로의 통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대체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
- 진입도로의 안전사고에 대비

3. 갈등 분석

-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이하 ‘이 민원 주택단지’ 라 한다) 공사를 위하여 지반을 약 1m 이상 성토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이 민원 주택단지 내 너비 약 4m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하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불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니 이 민원 도로를 대체하는 너비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
- 이 민원 주택단지는 2007. 1.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2009. 12.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 민원 주택단지의 조성 공사에 따른 공정 등을 감안할 경우 2013. 9. 준공 예정인 대체도로를 조기 개설은 어려움.

- 대체 도로에 인접한 일부 사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될 경우 관련 규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할 계획임.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교통사고 및 비산먼지 등을 최소화를 위한 공사에 만전을 기함.

5. 조정 (합의) 결과

-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2013. 9.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된 대체 도로(B=10m, L=252m)의 기층공사를 2013. 5. 31.까지 완료하기로 함.
- 진입도로에 대한 현장 안내원 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차량에 대한 세륜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 원주시장은 LH공사가 2013. 5. 31.까지 대체 도로의 부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체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을 강화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인하여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교통사고 및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하여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함.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연암뉴스

2013년 04월 15일 (월)
윤리인

국민권익위, 원주 주택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중재

(원주=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 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2일 오후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흥업면 흥업리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이호원 LH공사 강원지역본부장과 윤주섭 원주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 끝에 오는 5월까지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당초 오는 9월까지 완료하려던 마을 진·출입로 대체도로(폭 10m, 길이 252m)의 기층공사를 5월까지 조기 완료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체도로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장 안내원 등을 기존 도로에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차량에 대한 세척시설 마련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주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가 주택단지 조성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토사유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장마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LH공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흥업면 흥업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주력해 왔다"며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결돼 다행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한 LH공사 관계자와 원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신문

2013년 04월 15일 (월)
윤리안

원주 흥업주택단지, ...교통불편 해소

원주시 흥업면 일원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오는 5월 대체도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전·출입로가 주택단지 조성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토사유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장마가 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 해부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125-1번지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에 착공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12일 오후2시,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이호원 LH공사 강원지역본부장과 윤주섭 원주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LH공사는 ▲ 오는 9월까지, 완료하려면 마을 전·출입용 대체도로(폭=10m, 길이=252m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기층공사를 5월까지 조기 완료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도로가 생길 때까지는 현장안전원 등을 기존 도로에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차량에 대한 세척시설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주시는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한 LH공사 관계자와 원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04월 13일 (토)
08면 3면

원주 흥업 아파트공사 불편 해소

〈국민 임대아파트 조성〉

원주 흥업국민임대아파트 조성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LH공사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오후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경기장 상임위원 주재로 이호원 LH공사 강원지역본부장과 윤주섭 원주시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마을 진출입용 대체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권익위 "내달까지 마을 진출입 대체도로 완공"

LH, 교통사고 예방·비산먼지 억제도 약속

것으로 중재를 이끌어냈다.

흥업면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착공한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에 마을 진·출입로가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수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거쳐 이날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LH는 당초 오는 9월까지 완료하려던 마을 진·출입용 대체도로를 오는 5월까지 조기 완료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5월전까지 현장안내원 등을 도로에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

방커로 했다.

또 공사차량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발생도 최대한 억제키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대체도로 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장 상임위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한 LH공사 관계자와 원주시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원주/백오인 105in@kado.net

江原日報

2013년 04월 13일 (토)
13면 3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체도로 조기 개설

권익위 중재로 흥업면 인근 주민들 불편 해소 기대

【원주】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대체도로가 조기 개설되며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2일 흥업면 흥업리 원주흥업국민임대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경기장 상임위원 주재로 이호원 LH 강원지역본부장과 윤주섭 원주시 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LH는 국민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당초 오는 9월까지 완

료하려던 마을 진·출입용 대체도로의 기층공사를 5월31일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 대체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 안내원을 기존 도로에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세척시설을 마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LH가 약속한 기간 내 대체도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2009년 9월부터 흥업면 125-1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가 주택단지 조성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토사유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부터 LH와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경기장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해결돼 다행이고 민원 해결에 협조한 LH와 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news.co.kr

2

건축신고 반려 처분 철회 요구

민원번호 : 2AA-1305-257042 (주택건축민원과, 김대중 조사관)



민원개요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필지에 지상 1층 주택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같은 동 토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도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한 사례

1. 민원내용

- 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건축신고 반려 철회

2. 주요 쟁점사항

- 「건축법」 상 도로의 인정 여부
- 건축신고 반려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 지상1층 99.35㎡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같은 동 토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진입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 함
- 이에 피신청인은 ‘진입로 개설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관련법상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니 건축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답변
 - ※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
- 관계기관은 ‘이 민원 진입로는 도로구역 외 지역이며 이 진입로와 연결한 국도의 확장계획은 없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사실관계 파악,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 도출
 - 이 민원 진입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신고서 수리
 -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업무에 적극 협조

5. 조정 (협의) 결과

- 이 민원 토지와 접하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하여 이 민원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민원 도로를 포함하여 지정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전광역시장과 협의
- 피신청인은 도로구역(호남고속국도)과 도시계획선을 일치시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함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선으로 40년 넘게 집을 신축하지 못했던 시민의 불편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한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

연애플러스

2013년 08월 27일 (화)
지역

권익위, 개발제한 묶인 주택신축 민원 해결

권익위, 개발제한 묶인 주택신축 민원 해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주택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40년 넘게 집을 신축하지 못했던 한 시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한 허모(50)씨와 유성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했다.

허씨가 사는 유성구 장대동 168-1번지 일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지난 2006년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허씨 집의 일부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선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주택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씨의 토지와 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냈다.

jkhan@yna.co.kr
(끝)

중도일보

권익위, 개발제한 묶인 주택신축 민원 해결

권익위, 개발제한 묶인 주택신축 민원 해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주택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40년 넘게 집을 신축하지 못했던 한 시민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한 허모(50)씨와 유성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했다.

허씨가 사는 유성구 장대동 168-1번지 일대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지난 2006년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허씨 집의 일부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선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주택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씨의 토지와 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냈다.

jkhan@yna.co.kr

장대동 '40년 흙벽돌' 집 신축 가능

권익委 “불합리한 개발제한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중재

주택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40년 넘게 흙벽돌집을 신축하지 못하던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노후주택의 개발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 168-1번지 일원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의 신축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지역으로, 2006년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민원인의 토지 일부를 포함한 일부 구간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선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주택의 신축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기참상임위원 주재로 대전시 유성구 온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당 민원인을 비롯한 대전시 유성구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민원인의 토지와 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노후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토지처럼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도로공사의 의견을 들어 도로구역(호남고속국도)과 도시계획선이 일치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토록 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도록 했다.

/진보라 기자 jbr@sudailbo.com

권익위, 대전 장대동 40년 넘은 흙벽돌집 개발제한 해제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27일 도시계획선에 따라 개발제한 해제구역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토지 중 일부가 제한해제에서 제외됐다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노후 주택을 소유한 A씨 등이 "장대동 일대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토지 일부 구간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으로 신축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낸 민원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도시계획선에 의해 개발 제한 해제를 받지 못한 일부 토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중재로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을 받아온 장대동 일대의 40년된 흙벽돌집 등 노후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토지 일부가 개발제한 해제에서 제외돼 해당 토지에 진입도로를 낼 수 없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선이 일치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전광역시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토지의 일부분이 개발제한 해제에서 제외돼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 남은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뿐 아니라 앞으로 절차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원 기자 zml@lawtimes.co.kr

3

삼호임대아파트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

민원번호 : 2AA-1304-215349 (주택건축민원과, 서승관 조사관)



민원개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삼호아파트 105동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용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을 차지하고, 고압수전방식에 비해 매년 3,000만원 정도 과다납부하고 있는 공용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05년부터 피신청인에게 공용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10여년 만에 입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공용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을 차지하고, 고압수전방식에 비해 매년 3,000만원정도 과다납부하고 있는 공용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아파트 지하에 전기실 마련을 위한 공간이 없음
-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절감액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음

3. 갈등 분석

- 공용전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 2013. 4. 18. 이 민원아파트 입주민 214명이 민원 제기
- 이에 대해 SH공사는 ‘이 민원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 관계기관인 한국전력은 ‘공용전기 설비 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계약전력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다.’ 고 답변
- 전기실 마련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용전기만 별도로 고압수전 가능여부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수차례 현장 조사와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 피신청인(SH공사)는 옥외에 고압수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 추정 공사비 및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하고,
 - － 관계기관(한국전력)은 공용전기만 별도로 수전가능한지에 대하여 본사와 다각적인 검토하도록 하여
 - － 옥외에 공용전기만 고압으로 수전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대 공사를 완료하기로 협의하여 공용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합의) 결과

- 전기수전 방식을 각 세대는 기존대로 저압수전(호별계약)을 유지하고, 공용전기만 고압수전방식으로 변경하고, 피신청인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4. 5. 30.까지 고압수전을 완료토록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피신청인이 2014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4. 4. 30.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2012. 12. 16.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에도 보도된 사항이나 해결되지않아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근절하는 결과 도출



임대아파트 267세대 전기요금 연간 3천만원 절감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13-08-30 11:05

뉴스 기사 권익위 "공용전기 옥외용 전기설비 설치" 중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2005년 이후부터 입주민들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없으며,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 저압의 공용전기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되어있는 부하 설비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고압방식에서 저압방식으로 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등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기존 한전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전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옥외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토록 중재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라 한전은 아파트 세대의 주택용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용부위만 고압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SH공사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변압기 두 대 중 공용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10시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SH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공용부위 전기를 저압방식에서 고압방식으로 변경하는 옥외용 전기설비의 설치에 합의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해온 입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공용전기 옥외용 전기설비 설치’ 중재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2005년 이후부터 입주민들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4분의 1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없고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 저압의 공용전기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전 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돼 있는 부하 설비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고압방식에서 저압방식으로 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기존 한전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전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옥외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토록 중재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전은 아파트 세대의 주택용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용부위만 고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SH공사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기존 변압기 두 대 중 공용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도시수자원민원

1. 광고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2. 섬진강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정읍 산내 종성리 교통대책
3. 대구혁신도시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
4.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5. 강남보금자리사업지구 은곡마을 환경개선
6. 고양삼송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7. 가화천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8. 봉은역사공원 조성
9. 한강신도시내 국방부 재산의 조속한 양여승인 요구
10. 구)각산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구조 개선
11.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요구
12. 광양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대책 수립 요구

1

광고 신도시 학교시설 확충

민원번호 : 2AA-1208-183802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



민원개요

광고택지지구내 상업·업무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규모 오피스텔 난립으로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시설 과밀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학생유발요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1. 민원내용

- 광고택지지구내 상업·업무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규모 오피스텔 난립으로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시설 과밀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학교시설을 확충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조치 여부
- 학령인구 산출을 위한 학생수용계획 재검토 여부

3. 갈등 분석

- 광고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광역행정 및 대규모 주거단지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6월 28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
- 2010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으로 광고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등 49필지에 오피스텔이 허용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의 오피스텔이 난립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2012. 8. 22. 지역주민 704명)

- 관할 교육지원청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2014년 시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사업시행자는 내부 검토결과 오피스텔 규모상 학령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학교과밀 등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
- 정확한 학생수용계획 산정을 위한 용역 여부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난립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하기 위하여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거쳐 실시계획 변경(오피스텔 불허) 승인절차 이행
 - 학생 유발요인 검토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결과에 학교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

5. 조정 (합의) 결과

-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대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즉시 착수하고 용역 추진사항 및 중간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등이 요구할 경우 안내하고 요구사항이 타당할 경우 용역결과에 반영하고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학교시설 설립절차 등을 이행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 학생수용계획 수립자 및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간의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주택 입주가 임박한 세대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익을 보호하는 해결방안 마련
- ※ 2013. 6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학교위치 선정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학교시설 설립 등의 행정절차 추진 예정



광고에듀타운, 오피스텔 난립에 '학교 대란'

2013-01-08 21:00



교육행정의 도시, 일명 에듀타운으로 설정된 구역에 정작 다닐 학교가 부족하거나 모든 학급이 포화상태라면, 어땠겠습니까? 경기도 수원市的 광고 에듀타운 입주인 700여명이 추가 학교의 개설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현장을 방문해 주민과 경기도시공사간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시작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광고 신도시. 그 중에서도 교육과 주거용 시설이 밀집된 에듀타운입니다. 곳곳에는 아파트 단지들과, 공사 중인 오피스텔들이 눈에 띄지만, 정작 학교나 학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에듀타운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고작해야 너댓곳이 전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등에 오천오백여세대 자녀들의 몸이 묶여버린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올해안으로 모두 만삼천구백여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이지만 학교건립계획 수립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고려하지 못한 만큼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윤주 / 광교에듀타운]

"배차간격 47분 버스 한 대를 이용해서 3km가 넘는 통학거리를 매일 등하교 하고...(중략)...저희 어린이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겪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광교 신도시의 학군 배치는 이미 2007년 끝나버린 상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전입돼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 700여명의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혜영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

"현재 1만3천여 세대에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고 59㎡이상만 1천세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이 입주할것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난데"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과 시공사간 입장을 좁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학교의 개설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에듀타운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채현입니다.



권익위, 광고 신도시에 학교 추가 설립 추진 중재

2013.01.08 (15:38) 은준수 기자

광고 신도시에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이 나오는 대로 추가 개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신도시 입주 예정자 700여 명은 지난 2007년 도시계획 승인 당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될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신문

2013년 01월 08일
15면 (지역)

수원 광고신도시 '학교대란' 걱정 덜었다

오피스텔 늘어 주민들 '학교수 부족' 민원

권익위 "초·중학교 추가 설립" 현장조정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립으로 학교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 수원 광고신도시 입주주민들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붙였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광고신도시 가림마을과 호반마을 입주 예정자 정코씨 등 70명은 지난해 12월 9일 광고신도시를 조성한 경기

도시공사의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추가 학교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 등은 "광고신도시의 학군배치는 2007년 급났지만, 당시 학교설립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해 학교 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학생 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 증가는 2010년 6월 주

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이 준주거주택으로 분류돼 가족거주가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 시행령은 또한 오피스텔 건립시 50%까지 국민주택기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부 조치에 힘입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도수일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빚었다.

광고신도시 역시 오피스텔 건립 붐이 일어 2013년까지 450여 가구 추가 입주할 전망이다. 이들 오피스텔 입주가 완료되면 1만

여명이 추가로 입주해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고신도시는 2007년 도시계획 승인 당시 주택 3만 1000 가구를 기준으로 한 학생 수요만 고려돼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최근 건축법 변경으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학교 부족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에서 학생수용계획을 다

시 수렴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

미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연동구 광고도시공사에서 이상보 위원장, 염대영 수원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신도시에 학교가 추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권익위는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고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

는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광고신도시의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 것에 대비, 초·중학교를 각각 1개씩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광고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학부모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권의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tech@kbs.co.kr

2

섬진강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정읍 산내 종성리 교통대책

민원번호 : 2BA-1302-187677 (도시수자원민원, 김성도 조사관)



민원개요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986 일대에서 거주 및 영농하고 있으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통행로가 상시 침수되어 교통단절이 되니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1. 민원내용

- 댐재개발사업으로 댐운영 수위 상승으로 기존 마을로 진입하던 진입로가 상시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위상승의 정도와 그에 따른 기존 진입로 침수 예측
- 상시 침수가 예측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마련 방안

3. 갈등 분석

- 댐재개발사업에 따른 댐운영수위 상승으로 기존 마을 진입로의 상시 침수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2. 10. 29. 지역주민 20명 진입로 침수에 대한 대책 요구

- 이에 대해 댐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수립을 담당하는 관련 자체단체는 ‘도로개설 등 관련 대책은 국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 관련 기관인 댐운영 담당 공사는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댐운영 수위 조절 및 토지이용 필요하다면 협조가능하다’고 답변
-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산 확보 가능여부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진입로 침수는 댐 수위가 EL 191.5m일 경우 발생되었으나, 댐 운영수위가 EL 196.5m로 높아짐에 따라 기존 진입로의 상시 침수가 예상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 이에 대한 적정 대책 마련하기로 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합의) 결과

- 진입로 단절에 따른 교통대책과 보상대책을 검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적정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조치를 하며, 댐운영기관은 교통대책 추진시 토지사용 및 수위조절 협조하도록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단절이 예상되는 현황도로의 기능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기능 폐지시 예상되는 잠재 민원 해소
 - ※ 보상대책과 교통대책 비용을 비교하여 교통대책이 타당함에 따라 관련 비용(약10억원)에 대한 사업비(국비) 반영요청하고, 예산수립후 사업비 배정시 진입로 높이 상향하는 공사 예정(14년)

奎北日報

2013년 03월 20일
11면 (전북)

섬진강댐 재개발 마을 진출입로 침수 대책 마련

구조물 이용 170m 성토 국민권익위 중재 협약식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댐 수위 상승에 따라 마을 진출입로가 침수될 처지에 놓인 정읍시 산내면 중성리 황토마을 성황당섬(986번지 일대)의 침수대책이 마련됐다.

이곳 성황당섬 주민과 토지주 등 20여명은 1963년 준공된 섬진강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2003년 시작했던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위가 종전보다 5m이상 상승해 마을 진·출입로가 침수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토마을 성황당섬은 총 13만평(사유지 6만4000여평과 국공유지 6만6000여평)면적에 실거주민은 1세대로 매년 홍수때면 70일정도 진출입로가 침수되어 마을과 단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19일 오후 2시 30분 산내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의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전라북도 박형배 건설교통국장, 정



섬진강댐 재개발로 수위가 상승해 침수될 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읍시 최영만부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세 섬진강댐관리단장은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수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정읍시는 통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 대책과 보상방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후 오는 6월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청 및 댐 사용권자와 협의해 교통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토지 사용 및 공사를 위한 댐 운영수위 조절 등을 협조키

로 했다.

정읍시는 국비 11억원이 확보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암거박스)을 이용해 170여m의 진출입로를 성토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창 상임위원은 “섬진강댐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위기에 있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조정방안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정훈기자 hoonyou@



댐 공사로 사라질 마을 위기 벗어나

2013-03-19 16:52 최영수 기자 (kan@yna.co.kr)

권익위, 정읍 산내주민 민원 중재

(정읍=연합뉴스) 섬진강댐 건설로 댐 수위가 올라가 마을 진입로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던 전북 정읍시 산내면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가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조율, 새 진출입로 설치 또는 보상안을 중재한 덕분이다.

권익위는 19일 정읍시 산내면사무소에서 정기찬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댐 인근 마을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산내면 중성리 성황당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은 2003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댐 수위가 기존 191.5m에서 5m 이상 상승, 마을 진출입로가 침수되곤 한다며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관계기관 사이에 합의된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정읍시가 통행 대책과 보상 방안을 검토해 6월까지 주민에게 설명하고 전복도와 예산확보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와는 교통대책 마련에 필요한 토지 사용과 댐 수위 조절 방안을 강구하도록했다.

권익위 김성도 조사관은 "새 진입로를 만들거나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장조정으로 주민 불편이 원만히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정읍 섬진강댐 인근 주민 불편 해소

2013-03-19 17:08 김종효 기자 (seun6685@newsis.com)



【정읍=뉴스시스】 전북 정읍 소재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댐 수위 상승으로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질 뻔했던 정읍시 산내면 중성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대책이 마련됐다.

19일 오후 정읍시 산내면사무소에서는 시와 전북도,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앞서 수차례의 실무조정 협의 및 현장조사를 비롯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된 중재안에 따라 정읍시는 통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대책과 보상방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후 오는 6월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전북도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청 및 댐 사용권자와 협의해 교통대책 마련에 필요한 토지사용 및 공사를 위한 댐 운영수위 조절 등에 협조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큰 불편이 예상됐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조정방안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독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 산내면 중성리 986번지 일대 주민들은 1963년 준공된 섬진강댐의 기능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 때문에 수위가 종전보다 5m이상 높아져 마을 진출입로가 침수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무조정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날 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3

대구혁신도시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

민원번호 : 2BA-1211-222144 (도시수자원민원과, 장경수 조사관)



민원개요

대구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이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었는바, 간이상수도 시설 지장물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가입비·옥내 설치비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해결

1. 민원내용

- 대구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이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었는바, 간이상수도 시설 지장물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가입비·옥내 설치비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책정된 지장물 보상비 이외의 추가보상 가능 여부
- 지자체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

3. 갈등 분석

-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비로 〇〇백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달라고 마을주민이 민원 제기
- 사업시행자는 책정된 지장물 보상비 이외의 추가보상은 어렵다고 주장
- 지자체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 －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상수도 가입비 및 설치비 부담
 - － 지역 주민은 옥내 상수도 설치 시공
 - － 지자체는 상수도 신속 시공 및 지역 주민의 옥내 상수도 설치 지원

5. 조정 (합의) 결과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마을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 간이상수도원 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 －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상수도 가입비 및 설치비 부담
 - － 지역 주민은 옥내 상수도 설치 시공
 - － 지자체는 상수도 신속 시공 및 지역 주민의 옥내 상수도 설치 지원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지자체 상수도 설치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재개
-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4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요구

민원번호 : 2BA-1205-013353 (도시수자원민원과, 이명호 조사관)



민원개요

서울 강서구 일원 방화대로 전체구간 5,800m 중 17사단 101연대와 저촉되는 250m 구간이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도래함에 불구하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향후 교통대란 등의 지역발전 장애요소를 조속히 제거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작전성 검토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후보지 입지 선정, 이전재원 마련을 위한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 협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1. 민원내용

- 1971년에 결정한 방화대로는 전체 구간 5,800m 중 군사시설 등에 저촉되는 490m 구간은 현 군부대 주둔지의 이전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 군부대 주둔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이 민원 도로의 개설을 조속한 추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여부
- 작전성 검토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 선정 여부

3. 갈등 분석

- 군사시설 이전과 방화대로 개설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높음
 - 군부대 이전과 방화대로 개설을 위하여 관계기관들이 1998년도부터 수십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방안 난항
- 현 군부대 주둔지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끝없는 갈등
 - 국방부의 정책기조 변경에 따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논란 지속 (「기부 대 양여 방식」 과 「특별회계 방식」)

- 군부대 존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계획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불가
 - 현 군부대 주둔지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군부대 존치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어려움
- 우회 교통량 증가 및 교통정체 가중으로 서울 서남부권 교통대란 우려
 - 장기 협의 지연으로 방화대로 전체 연장(5,800m) 중 490m 미개설로 나타나는 부정적 파급효과 확대
- 이전 후보지 주변 주민지원대책 부재로 집단민원 유발 가능성 증대
 - 이전 후보지 지원대책 수립은 필연이나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론할 수 없는 상황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방화대로의 개설이 지연될 경우 우회 교통량 증가로 서울 서남부권의 교통대란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기관들은 상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11차례의 협의, 3차례의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 입장에서 끈질긴 조율을 거치고, 전문가적인 대안 제시

5. 조정 (협의) 결과

- (국방부)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 및 작전성 검토 후 부지 결정,
- (서울시·강서구) 이전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이전 예정지역 보상 및 민원처리 업무 강서구 위탁 수행)
- (SH공사·강서구) 개발계획에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확보 위한 협약 체결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군사시설의 이전과 방화대로의 전구간 개설의 계기를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은 교통대란을 피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보안 및 작전성이 저하된 군사시설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 2018년 까지 군사시설 개발계획을 통한 이전 후보지 재원 마련후 군사시설 이전 완료, 방화대로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



권익위 중재로 서울 방화대로 개통 추진

2013.05.27 (10:44) 은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오는 2016년 서울 방화 대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와 서울시, 강서구, SH 공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개설된 방화대로는 서울 서남부권의 주요 교통로지만 대로 안에 위치한 군 부대 이전 문제 때문에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권익위는 강서구가 군 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작전성을 검토한 뒤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OW한국경제TV

성공을 부르는 습관

방화대로 전 구간 개설.. 마곡개발 속도내나

2013-05-27 10:13 박현각 기자 (neo78@wowtv.co.kr)

군부대 이전협약 체결에 따라 방화대로 전 구간 도로개설이 가시화됐습니다.

서울시는 국방부와 강서구, SH공사,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화대로 조기개설 조정서 협약식' 을 갖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 부천시 오정동 오정대로 삼거리와 한강의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왕복 8차로의 방화대로가 201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마곡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방화대로 전면개통과 함께 강서, 마곡지역을 아우르는 서남권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부대로 단절된 방화대로, 2015년에 완전 개통

2013-05-27 11:27:11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군부대 때문에 단절된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전 구간이 2016년까지 완전히 연결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5.8km길이의 방화대로 구간 안에 있던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중재로 서울시와 국방부 등이 군부대 이전에 합의한 결과다.

1999년에 개설된 왕복 8차선 방화대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이지만 대로안에 있는 군부대 때문에 250m구간이 개설되지 못했다. 마곡지구 준공이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군부대 이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27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소재 SH공사 마곡사업단 3층 회의실에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지역주민 970여명의 대표와 백승주 국방부차관, 문승국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중재에 성공했다. 해당 민원이 지난해 5월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만이며,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업한 지 6개월만이다.

쟁점이 된 중간부 250m에 해당하는 토지는 1950년대부터 군부대가 있었던 곳으로, 1999년도에 방화대로가 처음 개설됐을 때부터 부대 이전 협의를 추진했지만 이전방식과 비용 총당 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는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 보안과 작전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 강서구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해준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 후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강서구는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이전부지의 토지 등의 보상 및 민원처리 업무를 맡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 서울시와 같이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강서구는 SH공사와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정산관련 협약 등도 체결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서남부권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중재하고 관계기관들이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3년 05월 28일
15면 (지역)

250m에 막혔던 방화대로 2018년 완전히 뚫린다

공사구간 관통하는 군부대
14년만에 이전 추진 합의

군부대 시설에 막혀 단절된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전 구간이 2018년 까지 완전히 연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은 방화대교 남단에서 2.6km 지점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화대로는 서울 방화대교와 경기 부천시 오정동 오정대로 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울 서남부권과 2016년에 입주를 마무리하는 마곡지구, 부천 지역의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한다. 1999년부터 폭 40m(왕복 8차로), 길이 4.8km로 공사를 해왔다.

도로 중간 부분 250m가 101부대 일부를 관통하게 되면서 군부대 이전이 필수요소가 됐지만 공사 초기

방화대로 2018년 완전 개통



부터 이전 방식과 사업비 부담 등에서 의견 차를 보이면서 이 구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는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군사시설 전체를 먼저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5월에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14년을 끌어온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서울시, 강서구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추진한다. 군부대가 있는 토지의 매각과 지구단위계획, 이전 예정지의 토지보상 등은 강서구청장이 국방부 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은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늦어도 2018년에는 방화대로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월에는 방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부터 0.8km에 이르는 방화대로 구간 공사가 마무리된다. 남부순환로 인근과 부천 오정대로 삼거리까지 1.23km가 2014년에 완공되면 이 지역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5

강남보금자리사업지구 은곡마을 환경개선

민원번호 : 2BA-1301-131867, 2CA-1212-041593 (도시수자원민원과, 최수관 조사관)



민원개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은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32명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강남보금자리사업지구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오수시설 개선, 전기·통신 지중화,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일부 전기·통신주 지중화, 사업준공후 마을 진출입로 양방향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보장 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고충민원 해결

1. 민원내용

- 강남구 은곡마을은 보금자리지구 가운데 위치하여 공사시 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오수시설 개선, 전기·통신 지중화,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주체 결정

3. 갈등 분석

- 강남보금자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내 은곡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있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1. 15. 은곡마을 지역주민 132명이 환경개선 요구

-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환경개선 시설 설치 사업비 부담은 ‘법적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전가함에 따라 향후 입주자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배수설비는 피신청인 부담으로 추진함이 타당, 지중화 사업도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우·오수 분류배출공사 등 4개 요구사항의 시행을 위한 공사방식 및 공사범위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사업비 분담은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적정 분담하여 사업시행 하고,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개선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우·오수 분류배출공사는 LH공사 80%, 관계기관(강남구청) 20%하는 협약을 LH공사와 관계기관이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전기·통신주 지중화 사업은 지구계가 접한 도로(중로3-1)에서 첫 번째 기존 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사업지구에 포함 시행
- 중앙 진입로 양방향 개선사항은 이 민원사업 준공후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교통평가심의회에 재심의 요청
- 마을 앞 간선도로 개선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보·설치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강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은곡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원만한 고충민원 해결로 서민주택보급 사업인 보금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종합민원 **NEWSis.** () 국내 최대
민원 서비스업체인
2001년 설립

세곡동 민원현장 방문한 박재영 부위원장

2013-05-29 17:58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 첫번째)이 29일 오후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사업지구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민원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신문 NEWSis.() 2013. 05. 29. 2013. 05. 29.

기념촬영하는 박재영 부위원장

2013-05-29 17:58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오후 강남구 세곡동 소재 은곡마을 주민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우수·오수시설공사, 도로교통체계 개선 등의 중재안을 성사시킨 후 민원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국매일

2013년 05월 30일
09면 (서울)

“우수·오수시설 공사비, LH 80%·강남구 20% 분담”

권익위, 은곡마을 환경개선 조정회의 주민제기 민원중 조정안 의결 통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강남구 자곡동 LH강남직할사업단 회의실에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은곡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은곡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4개 항의 민원 중 우수·오수시설 공사비를 LH공사가 80% 강남구청이 20%를 분담하라는 조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은곡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조정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곡마을 주민대표, LH공사 직할 강남사업단장, 강남구 부구청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정에서 전선주 지중화 사업은 사업지구에 인접한 일부 전선주만 LH공사가 하도록 하고 전체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은곡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교통환경개선 사업 등은 추후 LH공사,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해 처리토록하는 결정을 내리고, 향후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까지 민원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6

고양삼송택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원번호 : 2CA-1305-021340 (도시수자원민원과, 최수관 조사관)



민원개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신청인이 단독택지와 삼송초등학교 및 삼송역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최초 이주자택지 공급안내 책자를 통해 배포하였고 공정위, 언론 등에서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2013년말까지 도로개설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개발사업의 추체이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고양시에 제안하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말까지 도로개설을 하여 고충민원 해결

1. 민원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 단독택지지구와 통일로(삼송역 및 삼송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2013년말까지 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도로개설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적 기간 필요

3. 갈등 분석

- 고양삼송지개발사업 단독택지지구와 삼송역 및 삼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안될 경우 단독택지구내 주민들과 학생들의 이동권 침해가 있고 또한 입주자들의 재산권 손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5. 2. 지역주민 9명이 도로개설 요구

-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은 하겠지만, ‘도로개설 구간이 사업지구 외고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위한 절대적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민원 도로를 금년말까지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 하지만, 관련 지자체는 ‘도로개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도로개설에 따른 관계기관과 특별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고, 인허가 절차 이행 등에 대해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피신청인은 도로개설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과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관계기관(고양시)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에 적극협조
 -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관계기관(고양시)는 2013.12월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피신청인은 2014.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실시 및 도로개설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권이 확보되고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2014.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통한 학습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7

가화천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

민원번호 : 2AA-1304-109659 (도시수자원민원, 진종권 조사관)



민원개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741 일대에서 남강댐 방류수계내 가화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바,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관리청 변경 후 하천사용료가 과다하니 이를 조정해 달라

1. 민원내용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용리 등 7개 마을 143명이 남강댐 수계 가화천 주변 국유지를 경남 사천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받아 30여년 이상 경작해 왔던바, 토지관리주체가 경남 사천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된 후, 부과된 사용료의 인상율(300~500%)이 과다하니 조정해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토지는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밖의 토지로 하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
- 남강댐 방류시 간헐적 침수가되는 지역으로 하천법 적용하여 감면대상임

3. 갈등 분석

- 하천 점·사용료 부과 관리청이 변경되어 2012년 사용료가 과다하니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4. 9. 지역주민 154명 사용료 부과 취소 요구

-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사용료 부과가 아니고 국유재산을 이관받아 국유재산법에 따라 새로이 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으로 적법한 사용료이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 기존 관리청인 경남 사천시에서는 이 민원 토지가 제방이 없는 무제부로 남강댐

방류시 간헐적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하천으로 판단하여 1985년경부터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함

- 관련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년 9월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하나 예산 등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 구역 및 지목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 고 답변
- 어떤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와 법적 검토 필요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선정 등에 따르는 제반절차 협의, 이행에 적극적인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한다.
 -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점·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천시장의 점용료 산정·부과 현황을 승계하여 이 민원 토지를 계속점용으로 인정하여 점용료를 조정·부과하고 신규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인수당시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 민원 토지 인수 후 2011년도 미부과 점용료와 2012년도 기부과 점용료는 상계 정산하는데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기관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토대가 마련됨
- 남강댐 주변의 하천 정비시 유사 사례가 발생될 경우 잠재 민원 해소



사천 가화천변 국유지 점·사용료 조정해 농민고충 해소

2013-07-18 16:05

권익위, K-water-사천시와 협업 연 5%까지만 인상토록 중재

○경남 사천시 축동면 등 가화천(加花川)변 일대에서 수십년간 농토를 경작해온 7개 마을 주민들의 국유지 사용료가 4배이상 오르면서 발생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현장조정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사천시 축동면 반룡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154명은 가화천 방류수계 내에서 당초 관리청인 경상남도 사천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 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이들이 내는 하천 점·사용료는 「하천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80년대부터 지가 상승률에 관계없이 매년 5%이내 인상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토지의 관리기관이 '11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되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새로운 점용허가'로 산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농민들이 하천 점·사용료를 과거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부담해야 하자 지역주민들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8일 오후 15시 국민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사천시 축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사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의 세부 중재에 따라 ▲ 수자원공사는 경남 사천시의 점용료 산정·부과 현황을 승계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계속 점용'을 인정하여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5% 이내에서 조정·부과 하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속히 정비해 추진키로 했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회의로 인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기관간 협업을 통한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간 업무이관시 관계기관이 심사숙고하여 국민의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약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OhmyNews

사천 가화천 부지사용료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소

13.07.19 09:30 강무성기자 (mianhee)



사천시 축동면 가화천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측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타결됐다. 권익위는 3배 이상 폭등한 국유지 점사용료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수자원공사와 사천시의 협업을 통해 연 5%까지만 인상 가능토록 조정했다. 권익위 민원제기 6개월 만에 주민과 기관간 원만한 합의로 갈등이 조정된 사례다.

정부는 1969년 남강댐 조성 당시 홍수조절을 위해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보조방수로 개념으로 가화천(국가하천)을 조성했다. 그러면서 축동면 가산리와 곤양면 가화리에 최대 홍수위를 대비해 하천부지를 확보했다. 이 하천부지를 사천시 축동면 반룡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수십 년간 점유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사천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가화천 부지에 대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마찰이 생겼다. 남강댐관리단은 2012년 343필지에 대해 45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는 그 이전 369필지 1200여만 원에 비해 300% 가까이 인상된 것. 개별 부지에 따라서는 500% 인상된 곳도 있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새로운 점용허가로 산정된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고, 주민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연속성 있는 행위인데, 관리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주민 154명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8일 오후 3시 축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사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에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권익위는 "수자원공사는 경남 사천시의 점용료 산정·부과 현황을 승계했으므로, 마을주민들의 계속 점용을 인정하여 점용료를 전년도 대비 5% 이내에서 조정·부과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민원인, 남강댐관리단, 부산지방국토청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밝혀 조정이 완료됐다. 2011년 미부과 분과 2012년 이미 부과된 점 사용료는 상계정산기로 했다.

민원인 대표 정국명씨는 "대화를 통해 저희들의 어려움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중재를 위해 힘쓴 권익위와 관계기관 모두 고맙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영호 국장은 "내년 예산에 가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강댐관리단 김태열 단장은 "권익위로 가기 전에 해결됐어야 했는데... 심려끼쳐 죄송하다"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간 업무이관시 심사숙고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8

봉은역사공원 조성

민원번호 : 2BA-1205-033421 (도시수자원민원과, 이승희 조사관)



민원개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이래 종교시설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법 가건물이 양산되고 종교활동이 제약되는 등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을 해제하거나 제대로 된 전통사찰로 복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봉은역사공원이 시민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제공되고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

1. 민원내용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종교용지가 1971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이래 종교시설 신축이 불가능하며 종교 활동(템플스테이 등)이 제약되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공원 해제시 도심내 대체 공원 확보 가능여부
- 타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3. 갈등 분석

- 서울 도심에 위치한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이래 종교활동(템플스테이 등)의 제약, 종교시설 신축 불허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
-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20여 년간 공원총량제 운영으로 공원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공원을 해제할 경우 형평성 등의 특혜시비가 우려되며 공원해제를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관계기관과의 12차례의 협의,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끈질긴 조율과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2012. 1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2013. 3. 8.) 등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함

5. 조정 (협의) 결과

- 신청인은 역사공원(전통사찰)과 보유문화재 등의 문화유산을 보수·복원·보존·유지발전하기 위한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수립 하도록 합의

※ 공원구역을 유지하면서 문화재(사찰)를 재정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1971년 공원지정된 이래 종교시설 신축이 불가능하여 불법 가건물이 양산되고 종교 활동이 제약되는 등 25만 신도의 감정악화와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 봉은사가 시민휴식,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권익위, 봉은사 종교시설 신·증축 민원 해결

2013.08.23 (11:54) 은준수 기자

서울 삼성동의 전통 사찰인 봉은사가 제기한 종교 시설 신·증축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봉은사의 지상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상에 전통사찰을 복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진화 봉은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봉은사 측은 지난해 5월, 40년 넘게 종교 활동에 필요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일보

2013년 08월 24일 (토)
11면 사회

봉은사, 역사공원으로 바뀐다

42년 만에 신·증축 제한 풀려... 전통사찰 복원

서울 강남에 있는 천년 고찰 봉은사가 옛 전통사찰로 복원된다. 도시공원 지정 후 42년 만에 신·증축 제한이 풀리면서 불교계의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봉은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진화 봉은사 주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봉은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조감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은사는 입구의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시설을 갖춰 옛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 역사교육관 등을 조성한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종교건물 신·증축, 시민 휴식공간 건설이 제한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신도들은 지난해 5월 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종교건물 신·증축을 허용해 달라며 2만8,500명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월 패소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조정을 통해 역사공원 안에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성보 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강남 봉은사 ‘힐링 전통사찰’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종교시설 신·증축이 가능해져 전통사찰 모습이 재현된 역사공원으로 변모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며 추가 종교건물 신·증축이나 시민 휴식공간 건설에 제약을 받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지난해 5월 봉은사는 공원 지정을 해제해주거나 종교건물 신·증축을 허용해달라며 신도 등 2만8500명의 서명부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도시공원정비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3월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봉은사에서 주지인 진화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희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다. 현장조정회의에서 강남구는 봉은사가 이미 수립한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한 봉은사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서울시는 시의 도시공원위원회·문화재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이후 심의 등의 행정절차에 협력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한국경제

2013년 08월 24일 (토) 12면 12면 중판

봉은사 건축규제 42년 만에 풀린다

권익위 중재로 서울시 '신·증축 허용'... 전통사찰 역사공원 변신

인사이드 Story

서울 강남에 있는 현인 고당 봉은사가 42년 만에 신·증축 제한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봉은사는 불교계의 숨원을 풀면서 옛 전통사찰의 모습을 재현한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23일 봉은사에서 이성보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희 강남구청장, 진화 봉은사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회의에서 광화구 광인 강남구는 봉은사가 마련한 '봉은사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후 심의 등 행정절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통일신라 시대인 784년 연희 국사가 창건했다. 봉은사는 스님을 선발하는 승과고시를 실시하던 곳으로 서산대사, 자암대사 등 유명 고승들도 봉은사에서 수학하는 등 유서 깊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1969년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파괴되면서 이후 재건됐다.

봉은사에 대한 각종 규제는 강남 개발 이후 본격화했다. 1971년 강남 개발 당시 구획정리사업용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서 종교건물 신·증축이나 시민 휴식공간 건설에 제약이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부터), 진화 봉은사 주지스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신원희 강남구청장, 최승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 23일 서울 시청동 봉은사에서 '봉은사 전통사찰 복원을 위한 봉은사역사공원 조성 원상조립회'를 마련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봉은사는 사실상 불탑 건축물인 가련을 지어 부족한 종교시설을 대체해 사용하는 등 불만을 겪었다. 봉은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등 종교 활동과 25만여명에 이르는 신도의 종교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공원에서 해제해줄 것을 서울시와 강남구에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봉은사는 지난해 5월부터 규제완화공례를 받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종교건물 신·증축을 허용해 달라며 광익위에 신도 등 2만8500여 명이 서명

한 시민부를 전달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해 8월에는 '사찰 부지에 종교시설 중을 짓게 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패소했다.

민원을 접수한 광익위가 조정에 나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역사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봉은사는 2009년 도시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

환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봉은사는 일구에 있는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시설 등을 갖춰 예전 모습을 재현한 전통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체험관, 역사교육관 등도 조성된다.

이 위원장은 "사찰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규정 개정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만의 해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남매일(강남매일) 기자 kkn1025@kookilnews.com

9

한강신도시내 국방부 재산의 조속한 양여승인 요구

민원번호 : 2BA-1309-062916 (도시수자원민원과, 임순옥 조사관)



민원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추진중인 “기부 대 양여사업”이 국방부의 재산양여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양여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가 2013. 11. 30.까지 기존의 감정평가(방공1여단 2011. 7. 18, 해병2사단 2011. 10. 12.)결과에 따라 양여 대상재산(해병2사단의 경우 토지 110,347㎡ 및 지상건물·공작물, 방공1여단의 경우 토지 21,580㎡ 및 지상건물·공작물·입목죽)에 대하여 양여승인절차에 따라 양여승인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

1. 민원내용

-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추진중인 “기부 대 양여사업”이 국방부의 재산 양여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양여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양여대상 재산에 대한 재감정평가 여부

3. 갈등 분석

-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국방부 양여대상 재산에 대한 조속한 양여 승인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2013. 9. 5.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 이종현 외 15명)
-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후에 양여신청하였기 때문에 양여대상 재산에 대해 재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부재산의 기부채납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국방부의 양여승인이 지연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양여재산에 대한 재평가는 불합리하며, 불필요한 재감정평가 비용 지출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법률검토 등을 통해 재감정평가없이 조속하게 양여승인하는 내용의 조정·중재안 도출
 - 사업준공 이전(2013. 12.)에 조속하게 국방부의 양여대상 재산에 대한 양여 승인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5. 조정 (합의) 결과

- 국방부가 2013. 11. 30.까지 기존의 감정평가(방공1여단 2011. 7. 18, 해병2사단 2011. 10. 12.)결과에 따라 양여 대상재산(해병2사단의 경우 토지 110,347㎡ 및 지상건물·공작물, 방공1여단의 경우 토지 21,580㎡ 및 지상건물·공작물·입목죽)에 대하여 양여승인절차에 따라 양여승인하도록 합의·조정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국방부의 양여재산에 대한 승인이 지연될 경우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2만4천세대 6만5천여명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집단 피해보상 소송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준공일정(2013. 12.) 이전에 신속한 중재·조정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
- 정부정책사업(2기 신도시 조성·주택공급계획)의 일정 차질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 사회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재·조정

※ 2013. 11. 27. 국방부 양여대상 재산에 대한 양여승인 완료

10

구)각산지하차도 지상화 및 주변 도로구조 개선

민원번호 : 2AA-1308-073578 (도시수자민원과, 김성도 조사관)



민원개요

대구 동구 소재 구)각산지하차도와 대구혁신도시 진입도로의 연결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높이가 낮아 여름에는 침수가 잦고, 겨울에는 눈길 사고의 위험과 함께 평상시에도 보행자와 차량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구)각산지하차도를 지상화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해 달라

1. 민원내용

- 과거에도 급경사였던 도로가 혁신도로 진입로 개설로 인해 더 경사가 심해지고, 차량이용이 빈번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관련 대책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경사도 규정과 현지 상황 비교
- 사업추진 및 비용부담 주체 선정

3. 갈등 분석

- 기존 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가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로 인해 과거 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관련 대책을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8. 8. 아파트입주민 2,500명 진입로 개선 대책 요구

- 이에 대해 도로계획을 담당하는 자체단체는 관련 대책은 원인자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한 관련 공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 관련 공사는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관할 사업구간 밖의 대책을 위한 공사를 직접하기 곤란하다고 답변
-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 선정 및 비용부담 문제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아파트 진입을 위한 연결부의 종단경사는 17%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경사 최대 범위(13%)를 초과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혁신도시사업 추진 공사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하는 지역공사에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협의) 결과

- 자치단체는 지역 공사가 201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인가를 추진하고, 지역 공사는 도로구조 개선 공사 시행하며, 혁신도시사업 추진 공사는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비용 일부 부담하도록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지하철도를 지상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도로개선대책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 ※ '13년 말 도로사업을 위한 사업인가가 완료되었으며, '14년 말까지 도로 구조개선공사 완료 예정

한국일보

2013년 10월 25일 (금)
12면 지역

45년된 대구 舊각산지하차도 지상화한다

통행·안전 크게 위협...동구청·대구도시공사·LH 3자 조정해 국민권익위 역할

45년된 대구 동구 각산동 구(舊)각산지하차도가 급경사로 주민안전을 위협해오다 마침내 지상화한다.

김문수 대구 동구 부구청장과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자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은 24일 대구 신서동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위원회를 연 후 이같이 결정했다.

1969년 준공된 구 각산지하차도는 길이 48m, 폭 4m, 높이 3.8m 규모로 인근 태영대시아파트 839세대 입주인 2,500여명이 이곳을 통해 대구역 신도시 등을 왕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접속부의 종단 경사는 17%로 법정 최대 종단경사 13%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주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크게 위협해왔다.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이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경사 끝부분에는 네거리가 있어서 신호대기하다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십상이다.

여름정마철이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겨울에는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이 전면



내년이면 지상화될 대구 동구 각산동 구 각산지하차도 전경. 대구 동구청 제공

폐쇄되는 등 차도 기능도 정통방식에 불과했다. 20m 떨어진 각산지하차도는 지난해 4월 지상화됐으나 구 각산지하차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효

용이 떨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 각산지하차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 이날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각산동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구 각산지하차도를 우선 시공하고, 동구청은 내년 상반기 도로개설사업 인가 협조, LH도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동구청 건설과 김광조 토목담당장은 "대구도시공사가 구 각산지하차도가 있는 대구선 패전 일부에 도로를 건설하고 분양도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상화될 계획이었다"며 "새로 조성될 차도의 폭은 8~10m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각산지하차도가 지상화하면 주변 지역 미관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재철 태영대시아파트 관리사무장은 "구 각산지하차도가 교통안전이 좋지 않은데다 눈비라도 내리면 아예 다니지를 못하는 절름발이 도로"라며 "허루빨리 확공해서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 요소를 없애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hjun@hk.co.kr

NEWSis()

2013년 10월 24일 (목)
충남

기념촬영하는 박재영 부위원장



【서울=뉴스is】전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가운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대구 신서동 소재 LH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대구 각산동에 45년 전 만들어졌던 구 각산지하차도의 급경사 때문에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지하차도를 지상화하기로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0.24.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경상매일

2013년 10월 25일 (금)

사회 05면

대구 각산지하차도 ‘지상화’

권익위, 집단민원 중재...급경사 개선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동구 각 산지하차도와 혁신도시 전, 출입로간 급경사 개선을 중재한다.

이번 중재는 각산동에 45년 전 만들어진 구(舊)각산지하차도가 대구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에 생긴 급경사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또한 아파트 진입을 위해 구(舊)각산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동구 각산태영대시아파트 입주 839세대, 2500여명은 해당 구간을 통해 대구혁신도시를 드나드는 이용자들이 급증하는데, 도로경사가 급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개선해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

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구간 접속부의 종단 경사가 법에서 규정한 최대 종단경사인 13%를 훨씬 넘는 17%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실무조정을 통한 협의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4일 대구 신서동 소재 LH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김문수 대구 동구 부구청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각산동 도로개설 사업 전체 구간 중 해당 구간 공사

를 우선적으로 시공한다. 이어 동구청에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공사가 구(舊)각산지하차도의 지상화 사업을 포함한 각산동 도로개설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 등을 적극 협조한다.

또 대구혁신도시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해당 공사비 일부를 대구 동구청장과 협의해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은 “지난 1969년 준공된 구(舊)각산지하차도가 지상화되면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들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경북매일

2013년 10월 25일 (금)

주식 07면

45년된 동구 각산지하차도 지상화하기로

권익위 중재로 결정

45년 전 대구 동구 각산지하차도가 지상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동구 각산동에 들어선 각산지하차도가 대구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에 생긴 급경사 때문에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LH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중재한 결과, 지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진입을

위해 각산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대구 동구 각산태영대시아파트 입주 839가구, 2천500여명은 해당 구간을 통해 대구혁신도시를 드나드는 이용자들이 급증해 지난 8월 제기한 민원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구간 접속부의 종단 경사를 살펴본 결과, 법에서 규정한 최대 종단경사인 13%를 훨씬 넘는 17%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실무조정을 통한 협의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이날 지역주민들과 김문수 대구 동구 부구청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각산동 도로개설사업 전체 구간 중 해당 구간 공사를 먼저 시공하기로 했다.

또 대구 동구청에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공사가 각산지하차도의 지상화 사업을 포함한 각산동 도로개설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bmaeil.com

이데일리

2013년 10월 24일 (목)

정치

권익위, 45년된 대구 舊각산지하차도 지상화 중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구 동구 각산동에 45년 전 만들어졌던 구(舊) 각산 지하차도가 대구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에 생긴 급경사 때문에 발생한 지역주민 집단민원을 중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진입을 위해 구 각산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대구 동구 각산태영대시앙아파트 입주 839세대(2500여명)는 해당 구간을 통해 대구혁신도시를 드나드는 이용자들이 급증하는데, 도로경사가 급해 차량·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를 개선해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대구도시공사는 각산동 도로개설사업 전체 구간 중 해당 구간 공사를 우선 시공할 것 ▲대구동구청은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공사가 구 각산지하차도의 지상화 사업을 포함한 각산동 도로개설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 등을 적극 협조할 것 ▲대구혁신도시 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해당 공사비 일부를 대구 동구청장과 협의해 부담할 것 등을 중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969년 준공된 구 각산지하차도가 지상화되면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들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합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구영남매일

2013년 10월 24일 (목)

지역

대구 동구 각산지하차도 지상화된다

권익위, 중재로 민원 해결

대구시 동구 각산지하차도가 대구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만나는 구간에 생긴 급경사 때문에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진입을 위해 각산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대구 동구 각산태영대시앙아파트 입주 839세대, 2500여명은 해당 구간을 통해 대구혁신도시를 드나드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 도로경사가 급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구간 절속부의 중단 경사가 법에서 규정한 최대 중단경사인 13%를 훨씬 넘는 17%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차례의 현지 조사와 실무조정을 통한 협의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이날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LH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김문수 대구 동구 부구청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는 각산동 도로개설사업 전체 구간 중 해당 구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한다.

대구 동구청은 내년 상반기에 대구도시공사가 각산지하차도의 지상화 사업을 포함한 각산동 도로개설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 등을 적극 협조한다.

김지익 기자 kce7378@naver.com

11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요구

민원번호 : 2BA-1310-163949 (도시수자원민원과, 서현우 조사관)



민원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귀포 강정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에 인접한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이라 한다)를 확장(6m → 15m)하면서 기존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고압선로 등 전기설비를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쪽으로 이설한다고 하는바, 신청인은 고압선로가 주택에 인접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 민원 사업지구 쪽으로 이설하거나 지중화를 요구

1. 민원내용

-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고압선로가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쪽으로 이설한다고 하는바, 이를 사업지구 쪽으로 이설하거나 지중화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전기 및 통신설비를 이설함에 있어서, 사업구역 내로 가공이설(지상으로 이설)하거나 지중이설(땅속으로 이설)하는 방안 등 이설공사 방법을 선정
- 전기 및 통신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주체

3. 갈등 분석(피신청인 등 입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사업에 따라 확장(6m → 15m)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로와 통신선로를 이 민원 사업 지구 밖에 위치한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쪽으로 가공이설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위 전기 및 통신설비는 이 민원 사업 지구로 공급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지중이설에 대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기는 어려움.

- **한국전력공사** : 이 민원 도로에 있는 전기설비를 신청인 거주 공동주택 방향으로 이설하는 계획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우나, 이 민원 사업 지구 내로 가공이설 하거나 지중이설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설비용은 피신청인 1이 전부 부담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 이 민원 사업 개발계획 승인조건에는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의 전기 및 통신설비를 지중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의 전기설비도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 설치할 경우 지중화 하여야 한다. 또한, 이 민원 사업 지구 내로 전기설비를 가공이설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움.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하여 피신청인들간의 의견을 조율함에 따라, 조정(안) 협의
 - 전기 및 통신설비의 지중이설 등 이설공사 방안 협의
 - 전기 및 통신설비의 이설비용 부담주체 협의

5. 조정 (합의) 결과

-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고압선로 이설 반대가 장기화되고 침례화할 조짐을 보였으나, 제3자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조정해결

※ 지중이설 완료(2014. 2. 27.)

KBS 제주

2018년 11월 18일 (수)

제주

고압선로 이설 갈등 지중화로 봉합

고압선로 이설 갈등 지중화로 봉합

서귀포시 강정택지지구 고압선로 이설을 놓고 빚어진 서귀포시 신시가지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갈등이 지중화로 봉합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대 주민들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등 관계기관은 권익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선로 지중화에 합의했습니다.

신시가지 일대 200여 가구 주민들은 강정택지지구 도로를 확장하며 고압선로를 기존 주택가 쪽으로 옮
기려던 토지주택공사의 계획에 반발해 지난달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용두 기자

제주 MBC

2018년 11월 18일 (수)

제주

국민권익위 중재로 고압선로 지중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가
고압선로를 공동주택 반대방향의
땅 속으로 이전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주민 500여 명은
최근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고압선로가 주택가 인근으로 옮겨지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지난달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연암뉴스

NEWSis()

2013년 11월 13일 (수)

포토뉴스

2013년 11월 13일 (수)
종합

권익위, 서귀포 강정 주택 인근 고압선로 지중화 중재



【서귀포=뉴스is】 강제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으로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예정이던 2만2900V의 고압선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택가 반대 방향 땅속으로 매설될 수 있게 됐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정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기존 도로위에 있던 2만2900V 고압선로를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인근의 주택가에 인접해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지난 10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이날 오후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고압선로를 주택가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구역 방향으로 지중이설 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고압선로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 지중화 변경 ▲한국전력공사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 조속히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협조 등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강정동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03세대 539명의 주민들은 고압선로가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하게 이설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압선로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

연남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뉴스

2013년 11월 13일 (수)

지역

<논란 일었던 강정택지지구 고압선로 땅속으로>

<논란 일었던 강정택지지구 고압선로 땅속으로>국민권익위 중재로 합의안 도출

(서귀포=연남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으로 2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던 2만2천900V의 고압선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택가 반대 방향의 땅속에 매설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귀포시 제1청사 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강정택지개발지구 고압선로 이설요구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원 신청인인 공동주택 대표 2명과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2만2천900V 고압선로를 주택가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구역 방향으로 지중에 옮겨 설치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의 고압선로를 공동주택 반대방향으로 지중화하도록 계획을 변경, 이른 시일 안에 이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게 됐다"며 "고압선로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민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여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인접도로의 폭을 현재 6m에서 15m로 확장, 종전에 설치된 2만2천900V 고압선로를 공동주택쪽으로 이설하겠다고 하면서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bjc@yna.co.kr
(끝)

12

광양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대책 수립 요구

민원번호 : 2BA-1308-018573 (도시수자원민원과, 임순옥 조사관)



민원개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수어천 해수유입 차단을 위한 보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3개 기관(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이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 구성, 용역비를 분담하여 공동조사요역을 수행하여 공동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정·중재하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의 전기 마련

1. 민원내용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하여 수어천 해수유입 차단을 위한 보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농작물 피해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대책 수립이 불가하고, 원인규명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3. 갈등 분석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2013. 8. ○○농협 원예작목회 회장 ○○○ 외 205명)
-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하천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며, 수어천의 위치 특성상 지하수 염분농도 상승이 염수피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댐 건설과 농경지 염수 피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어댐 준공이후 해수에 의한 지하수 염해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비용분담하에 피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는 내용의 조정·중재안 도출
 - 공동조사 용역비는 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의 비율로 분담하되, 공동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

5. 조정 (합의) 결과

-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비용분담(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하에 피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는 내용의 합의·조정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신청인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피해원인조사를 통하여 피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충민원 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정확하고 투명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KBS 순천

2013년 12월 05일 (목)
광주/전남

권익위, 광양 염수피해 원인 '공동 조사'

바닷물 역류 피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양시 진상면의 농경지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수자원공사와 광양시가 참여한 가운데 수어천 농경지 염수 피해 공동 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주민 2백여 명은 지난해 전라남도가 수어천 바닥의 흙을 퍼 올리는 공사를 한 이후 청암읍 농경지로 바닷물이 역류해 애호박 등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끝
백미선 기자

CBS

2013년 12월 05일 (목)
광주/전남

권익위 수어천 염수 피해 조정

전남CBS 고영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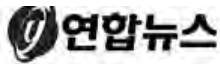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양 수어천 농경지의 염수 피해에 대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중재 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은 5일
광양 진상면 수어천 염수 피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다.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등은 이어 광양 진상면사무소에서
수어천 염수 피해에 따른 대책 수립 회의를 통해
"전남지사와 광양시장, 수자원공사가 함께
'농경지 염수 피해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하게 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수어천 농작물 피해 원인 규명 공동 용역에
전라남도가 40%, 광양시가 40%
한국수자원공사가 20%의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newsman@cbs.co.kr



2013년 12월 05일 (목)
지역

"광양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규명 용역 진행"

"광양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규명 용역 진행"권익위, 현장 조정회의서 관계 기관 간 합의 끌어내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 3월부터 해수의 농경지 역류로 농작물에 염수피해를 입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동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정기창 상임위원,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후 광양시 부시장, 신승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지사,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의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전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 대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청암동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민원인들은 인근에 있는 수어댐의 방류량이 감소하고 전남도가 2012년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천 바닥의 흙을 깊게 파 올린 이후로 청암동 농경지로 해수가 역류해 농작물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염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자 진상면 주민 206명이 염수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피해 원인 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장기화할 수도 있는 민·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경향신문

2013년 12월 05일 (목)
종합

국민권익위,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남 광양지역의 고질 집단민원 가운데 하나인 ‘수어천 농경지 염수 피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5일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신승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중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은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씩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용역을 진행토록’ 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기로 중재했다.

이날 중재 장소에는 오광록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휴 광양시 부시장, 신승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양시 진상면 청암들 주민 206명의 민원은 지난 3월부터 바닷물이 농경지로 역류해 농작물 염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고질로 남아 있었다. 국민 권익위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어 농작물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암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광양시 진상면 청암들 민원인들은 청암들 인근에 위치한 수어댐의 방류량이 감소하고, 전남도가 2012년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천 바닥의 흙을 깊게 파올린 이후 바닷물 역류로 농작물의 피해를 겪어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염수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 원인 조사에 동참함으로써 해결의 물꼬를 트게했다”며 “피해 원인도 모른 채 장기화될 수도 있는 민·관 갈등과 피해 예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05일 (목)
사회

국민권익위,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해결방안 '중재'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 규명 위한 공동조사용역 진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남 광양지역의 고질 집단민원 가운데 하나인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5일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정기창 상임위원, 오광록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휴 광양시 부시장, 신승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은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씩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용역을 진행토록 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 대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광구기로 중재했다.

광양시 진상면 청암동 주민 206명의 민원은 지난 3월부터 바닷물이 농경지로 역류해 농작물 염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 고질로 남아 있었다.

국민 권익위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어 농작물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암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해 해결의 물꼬를 텄었다.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교통도로민원

1.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2. 투명방음벽 설치
3.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4.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5. 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6. 지방도 717호선 조기건설 및 임실군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7. 중앙선 U자형 주포과선교 직선화
8.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9. 국도확장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구제
10. 소사교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구제
11. 영동고속도로 구)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12.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
13. 고등학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14.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15. 남원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16. 전주 두현마을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등

1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

민원번호 : 2BA-1212-151602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조사관)



민원개요

교룡산 정상에서 만복사에 이르는 교룡산성 능선 구간을 개방형으로 시공하여 30여 년간 시민들이 정서적 아픔과 환경파괴를 감내하고 지내온 것을, 교룡산의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환경 복원을 위해 교룡산성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남원시민의 숙원이었던 교룡산의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환경이 복원되고, 그 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

1. 민원내용

- 한국도로사가 1984년 경 영호남 화합을 명분으로 고속국도를 신설하면서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정기가 서린 남원의 영산인 교룡산 정상에서 만복사에 이르는 교룡산성 능선 구간을 개방형으로 시공하여 30여 년간 시민들이 정서적 아픔과 환경파괴를 감내하고 지내온 것을, 교룡산의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환경 복원을 위해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예산부담 주체 및 예산확보

3. 갈등 분석

- (한국도로공사) 연결통로의 주 기능이 남원시민들의 등산로 및 관광지 연결로이므로 남원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 (남원시)당초 88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단절된 것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 한국도로공사는 연결통로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설계변경 승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조물 설치
 - － 남원시는 교통산성 연결통로 구조물 상부에 조정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

5. 조정 (합의) 결과

- 신청인과 한국도로공사, 남원시는 적기 준공과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민원합의
 - － 한국도로공사는 연결통로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및 설계변경 승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조물 설치
 - － 남원시는 교통산성 연결통로 구조물 상부에 조정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남원시민의 숙원이었던 교통산의 역사·문화·생태·풍수지리적 환경이 복원되고, 그 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국민권익위,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중재

2013-03-20 15:37 이윤승 기자 (love@yna.co.kr)



30여년간 단절된 산성 능선 복원 '실마리'

(남원=연합뉴스) 88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30여년간 단절된 전북 남원시 교통산 정상에서 만복사에 이르는 교통산성 능선 복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남원시청에서 시민,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담양 함양건설사업단장, 이환주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방안을 중재했다.

지리산 끝 자락에 위치한 교통산은 남원의 영산으로 전북도 기념물인 교통산성, 은적암, 만복사 등 문화유산이 있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하지만, 1984년 영호남 화합을 명분으로 88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30여년간 지맥이 단절된 상태다.

연결통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원시,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서로 미루어졌다.

남원시민은 교통산성 능선 연결 및 교통산의 역사·문화·생태적 환경 복원을 위해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1만여명의 서명운동을 벌인 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중재안에서 도로공사는 8월까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 승인후 연결통로 구조물을 시공하고 남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구조물 상부 안전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중재는 오랜 기간 남원시민의 숙원이었던 교통산의 역사·문화·생태적 환경이 복원되고 그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

투명방음벽 설치

민원번호 : 2BA-1212-185555, 2BA-1303-034390 (교통도로민원과, 유택종 조사관)



민원개요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재설치되는 방음시설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방음시설의 재질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원후마을의 조망권 침해를 고려하여 원후마을측 방음시설에 대하여 불투명 방음벽의 범위를 기초 포함 3m로 하고, 나머지 6m는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하며, 그 설치 길이는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200m로하고, 축사측 방음시설에 대하여 불투명 방음벽의 범위를 기초 포함 4m로 하고, 나머지 8m는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하며, 그 설치 길이는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250m로 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재설치되는 방음시설이 마을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방음시설의 재질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현 설계 방음시설이 마을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
- 방음시설의 재질을 변경할 경우 소음도는 기준치 이내가 되는지

3. 갈등 분석

-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재설치되는 방음시설이 설계와 같이 설치될 경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은 상당한 조망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길이 250m까지 투명형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고, 원후마을측 방음시설은 기초 포함 불투명 방음벽의 높이를 2m로, 나머지 상부를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 주며, 원후마을 맞은편 축사측 방음시설은 기초 포함 불투명 방음벽 높이를 3m로, 나머지 상부를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 주고, 방음시설의 높이를 12m에서 9m로 낮추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2. 12. 26. 지역주민 98명 방음벽 재질 변경 요구

- 피신청인은 당초 원후마을과 축사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원후마을측은 6m 높이의 흡음형(불투명)과 3m 높이의 투명형 방음시설이, 축사측은 8m 높이의 흡음형(불투명)과 5m 높이의 투명형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되었다며,
-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을 고려하여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200m까지 원후마을측은 불투명 방음시설의 높이를 3m로, 투명형 방음시설 높이를 6m로 하는 것과 축사측은 불투명과 투명형 방음시설의 높이를 각각 6m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존 불투명 방음시설의 높이가 3m인 점과 방음시설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불투명의 높이를 신청인들의 요구대로 낮추는 것과 방음시설의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
- 조망권 피해와 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필요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주민 및 피신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조정안 확정

5. 조정(합의) 결과

- 마을의 조망권 침해를 고려하여 원후마을측 방음시설에 대하여 불투명 방음벽의 범위를 기초 포함 3m로 하고, 나머지 6m는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하며, 그 설치 길이는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200m로 한다.
- 축사측 방음시설에 대하여 불투명 방음벽의 범위를 기초 포함 4m로 하고, 나머지 8m는 투명방음벽으로 시공하며, 그 설치 길이는 원후마을을 중심으로 250m로 한다.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마을 주민들의 의견대로 조망권을 확보하는 계기 마련
- 피신청인은 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인은 요구가 반영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2014. 3. 현재 위원회 조정안대로 방음벽 설치 완료

공감언론 **NEWSis.** () 국회 기자
언론 노동조합
2007-2011

국민권익위, 안산 원후마을 조망권 민원 중재

2013-05-08 14:00 이승호 기자 (jayoo2000@newsis.com)

【안산=뉴스시스】경기 안산시 장하동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원후마을 주민들의 방음벽 신규 설치에 따른 조망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8일 안산~일직간 서해안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이 곳 주민 97명이 제기한 방음벽 조정 민원을 중재했다.

이 곳은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방음벽이 기존 4m 높이에서 9~12m로 새로 설치되지만, 방음벽 6~7m 높이가 불투명하게 설계돼 주민들의 민원을 샀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마을 앞 250m 구간의 방음벽을 지상에서 4m 높이까지만 불투명하게 시공하고 나머지 6~8m 높이는 모두 투명하게 설치하게 했다. 주민과 도로공사는 이 대책안을 수용했다.

연합뉴스 news 1 MT 머니투데이

권익위, 안산 원후마을 투명 방음벽 설치 중재

2013-05-08 14:10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안산=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장하동 원후마을 앞 고속도로 투명 방음벽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8일 오후 안산~일직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원후마을 앞 250m 구간 방음벽 상부 6~8m를 투명하게 시공해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중재했다.

주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도로공사가 마을 앞에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려 하자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이같이 중재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중부매일 메디컬투데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불편 해소

2013년05월08일 15시07분 신영철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방음벽이 높아져 조망권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원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착공되어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방음벽보다 9~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현재 이 마을에 설치된 방음벽은 흡음형(불투명)으로 높이는 3m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이 방음벽이 높이 9~12m로 높아지면서 이중 6~7m 정도가 불투명 방음벽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8일 오후 2시 안산시 수암동 소재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투명방음벽 설치 방안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세부 중재방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 마을 앞 구간에 해당하는 총 길이 250m구간에 해당하는 방음벽에는 지면에서부터 최대 4m까지만 불투명 시공을 하고 ▶ 방음벽 상단부 6m~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해주도록 중재했다.

이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일보

국민권익위, 교통 소음서 주민보호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불편 해소

원후마을 주거환경 개선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방음벽이 높아져 조망권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원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

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여기에 지난 2010년 7월부터 착공돼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방음벽보다 8~12m가 높아진 새 방음

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8일 오후 2시 안산시 수암동 소재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투명방음벽 설치 방안을 중재해 합의

를 이끌어 냈다.

세부 중재방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마을 앞 구간에 해당하는 총 길이 250m 구간에 해당하는 방음벽에는 지면에서부터 최대 4m까지만 불투명 시공을 하고, 방음벽 상단부 6m~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해주도록 중재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경만 기자 jkm@seoulilbo.com

2013년 05월 09일
07면 (경기)

충부일보

원후마을 조망권 갈등 투명방음벽으로 해결

〈안산시 장하동〉

“고속도로 소음 방음벽 불편”

주민 97명 대책마련 등 민원

권익위, 설치방안 중재 합의

전준식기자 jason@bangbo.com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방음벽이 높아져 조망권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원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특히 2010년 7월 착공돼 오는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방

음벽보다 8~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됐다.

이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안산시 수암동 소재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

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투명방음벽 설치 방안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세부 중재방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마을 앞 총 길이 250m 구간에 해당하는 방음벽은 지면에서부터 최대 4m까지만 불투명 시공을 하고, 방음벽 상단부 6~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

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 마을에 설치된 방음벽은 흡음형(불투명)으로 높이는 3m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이 방음벽이 높이 8~12m로 높아지면서 이중 6~7m 정도가 불투명 방음벽으로 설계돼 있다.

2013년 05월 09일
07면 (충북)

경기신문

2013년 05월 09일
08면 (지역)

안산 원후마을 방음벽 갈등 '해소'

권익위, 상단 투명 시공 조망권 확보 '중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앞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투명 방음벽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한 원후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5년 12월 완공 예

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방음벽보다 9~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

한 가운데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 앞 250m 구간 방음벽 상단부 6~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해주도록 중재했다.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인천일보

2013년 05월 09일
08면 (경기)

안산 원후마을 조망권 침해 해소

권익위 중재...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 투명방음벽 사용안 합의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방음벽 설치로 조망권 피해를 주장해 온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정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8일 시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착공돼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방음벽보다 9~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원후마을 주민 97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원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 이 마을에 설치된 방음벽은 흡음형(불투명)으로 높이는 3m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이 방음벽이 높이 9~12m로 높아지면서 이중 6~7m 정도가 불투명 방음벽으로 설계돼 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8일 오후 2시 안산시 수암동 소재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투명방음벽 설치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된 세부 중재방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조

망권 보호차원에서 마을 앞 구간에 해당하는 총 길이 250m구간에 해당하는 방음벽에는 지면에서부터 최대 4m까지만 불투명 시공을 하고 방음벽 상단부 6m~8m는 투명하게 시공키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인명선기자 ban@times.co.kr

3

마을 앞 통로암거 변경 설치 등

민원번호 : 2BA-1304-162788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조사관)



민원개요

신청인이 거주하는 울대고개마을은 현재 평면교차로에서 신호에 의해 진출입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개설공사로 인하여 진출입 통로암거는 마을입구에서 120m정도,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정도 이격되게 되고, 마을 주민들과 공원묘지 이용객 등 통행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통로암거를 마을 앞쪽까지 확장 · 이설하여 주고, 버스 정류장도 마을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마을 주민들의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국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멀어지게 된 통로암거를 확장 · 이전해 주고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로 이설하여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통로암거 확장 · 이전 및 버스 정류장 이설 방안 마련
-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예산확보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 도로공사로 인해 울대고개마을 앞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로암거를 마을 앞으로 확장 · 이전해주고, 버스정류장도 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4. 12. 마을 주민 220명이 마을 피해 대책 요구

-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년도에 마을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동의를 받아 시행 중인 사항이고, 통로암거 설치를 위한 시공 등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수용이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마을의 경관 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청인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관련 경찰청은 ‘관리청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답변
- 설계 변경 여부와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통로암거의 확장·이전하고, 버스정류장을 마을 앞으로 이설하는 등의 마을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교통사고 위험 등의 대책 마련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관리청은 통로암거를 확장·이전하여 시공하고, 버스정류장은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이설하기로 하고, 지자체는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따른 토지를 확보하며, 경찰청은 버스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이설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하는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향후 100년 이상을 사용할 도로와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공공사업인 철도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권익위, 경기 양주시 울대고개 마을 교통 불편 해소

2013-05-24 15:20 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과정에서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마을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장흥-송추를 잇는 국도 39호선은 '2005년 착공해' 2015년 완공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해 마을 앞에 통로암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2005년 최초 설계 시에는 암거 폭이 6m로 설계되었지만, 공원묘지를 오가는 대형버스들의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폭을 10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받아낸 바 있었다.

하지만,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보강토 옹벽 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부득이 통로암거의 위치를 마을입구와 1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으로 예정된 데 이어 조망권 피해까지 예상되자, 주민 220여명은 지난달 권익위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양주시, 양주경찰서는 모두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인정하지만,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4일 오후 2시 양주시 소재 장흥면 부곡리 현장사무소에서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과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끝나는 '2015년 12월 전까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를 마을 입구 가까이로 옮긴 후 확장공사를 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도 규정에 적합하게 옮기며, ▲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이에 따른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고립감과 통행자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던 구간이 개선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경인일보

2013년 05월 27일 (월)
19면 지역

현삼시 양주시장(앞줄 오른쪽)과 권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기관장들이 장흥면 울대리 국도39호선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양주 울대고개 교통불편 '권익위가 해결'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 통로암거·정류장 이동 '중재'

양주시 장흥면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현장사무소에서 박기왕 이장 등 마을 주민과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시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민원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울대리 주민들은 2005년 착공,

2015년 원공 예정인 장흥~송추간 국도 39호선 산설공사 과정에서 최초 6m로 설계된 통로암거 폭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폭을 10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보강도 용벽사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의 위치를 마을입구와 12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도 마을 입구에서 18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 하자 마을주민

220여명은 지난달 권익위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양주시, 양주경찰서는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인정하지만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민요구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입장을 조율하고 이날 장흥면 부곡리 현장사무소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간 합의 서명식을 갖게 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끝나는 2015년 12월

전까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를 마을 입구 가까이로 옮긴 후 확장공사와 함께 버스정류장 위치도 규정에 적합하게 옮기며,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이에 따른 업무협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10여년간 계속된 울대고개 주민들의 마을 단절에 따른 고립감 해소는 물론 동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이 조정돼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성환기자 lsh@kyeongin.com

현대일보

2013년 05월 27일 (월)
01면 종합

양주 울대고개 통로박스 '마을단절'... 권익위 중재로 해결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0시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양주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 공장폐수처리 문제 등 10여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 즉답으로 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 법률, 건축 상담 등 50여건의 상담내용을 접수, 11개분야에서 각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로부터 300여명의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상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오전 10시 시민과 함께하는 소

통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2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과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민원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과정에서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마을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

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던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통로암거 폭 확장·위치 변경과 정류장을 이전토록 요구한 민원을 중재, 마을주민대표와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으로 부터 조정합의서에 서명을 받아 양주시 울대고개 마을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전국매일

2013년 05월 27일
16면 (사회)

‘마을단절·사고위험’ 양주시 울대고개 마을 불편 해소

장흥~송추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통로암거 설치로 주민불편 민원 국민권익위, 폭 확장·위치 변경·정류장 이전 관계기관 중재 해결

국도 39호선 신설공사 과정에서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를 전언했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장흥~송추를 잇는 국도 39호선은 지난 2005

년 착공, 2015년 완공 예정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를 마을 앞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 도로는 최초 설계 당시 암거 폭이 6m로 설계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공원묘지를 오가는 대형버스와 교통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암거 폭 확장요

구’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암거 폭 30m 이상 확장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담아낸 바 있었다.

하지만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보경로 일대 사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통로암거와 버스정류장을 마을입구에서 120~180여m나 멀리 떨어진 곳에 변경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조양관 협회 문제가 또 다시 제기돼, 인근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권익위에 2차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양주시·양주경찰서는 그동안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인정하지만,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최근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끝나는 2015년 12월 전까지 국도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

를 마을 입구 가까이로 옮긴 후 확장 공사를 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도 당초에 맞게 옮겨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이에 따른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할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있던 구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주/김한구 기자
<kgkim36@naver.com>

유영식기자
<ywngsk@joonmae.co.kr>

4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민원번호 : 2BA-1212-106123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조사관)



민원개요

전철 복선화사업과 관련한 터널시공으로 인해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피해에 대하여 함안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그 동안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 고통 및 불안감 해소

1. 민원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전철 복선화사업과 관련한 터널시공으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산익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상수도가 설치되어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물 공급 및 공급시설 부담 주체
- 지하수 고갈 원인 주체

3. 갈등 분석

- (함안군) 터널을 시공하면서 이 민원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된 것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식수 등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마을 지하수 고갈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고, 대체관정을 설치하였는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식수 등에 대해서는 00시가 공급하는 것이 타당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 함안군은 산익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때까지 산익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식수 및 생활용수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담수 용량 10톤 규모의 스테인레스 재질인 물탱크 1개를 산익마을에 추가 설치

5. 조정 (합의) 결과

- 신청인과 함안군, 한국철도시설공사는 물 공급을 위해 민원합의
 - － 함안군은 산익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때까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식수 및 생활용수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담수 용량 10톤 규모의 스테인레스 재질인 물탱크 1개를 산익마을에 추가 설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피해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함안군과 공사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그 동안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 고통 및 불안감 해소

news1

2013년 05월 30일 (목)
온라인

권익위, 함안군 산익마을 비상급수 합의 이끌어내



(경남=뉴스1) 전철공사로 물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함안군 산익면 산익마을에 비상급수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전 10시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산익마을 주민들과 하성식 군수,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중재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함안군은 6월부터 산익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급수차량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급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함안군에 지불하고, 산익마을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10t 용량의 물탱크 외에 하나를 더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산익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식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경전선 마산~함안간 복선 전철사업에 산익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관정이 편입됐다.

이에 시공사는 이를 대체할 관정을 개발했으나 수량이 부족해 주말에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news1

2013년 05월 30일 (목)
윤라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식수 등을 공급해 오던 시공사마저 다음달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서 철수할 예정으로 주민들은 식수공급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산악마을 주민들은 함안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던 이곳 산악마을 2백여명의 주민들은 함안군이 2015년 6월부터 이 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할 때까지 식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산악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동안 물 부족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고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시대일보

2013년 05월 31일 (금)
13면 지역

함안군 산익마을에 비상급수

권익위 “함안군이 물 공급, 비용은 철도시설공단 분담” 중재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던 경상남도 함안군 산익면산익마을 2백여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식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산익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경전선 마산~함안간 복선 전철사업에 산익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관정이 편입되었다.

이에 시공사는 이를 대체할 관정을 개발했으나 수량이 부족해 주말에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공사가 급수차량으로 식수 등을 공급해 왔으나, 6월에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

료되면서 시공사마저 내달 철수할 예정으로 주민들은 식수공급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산익마을 주민들은 함안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30일 오전 10시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산익마을 주민들과 하성식 함안군수,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 함안군은 오는 6월부터 산익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급수차량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급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함안군에 지불하고, 산익마을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10톤 용량의 물탱크를 하나 더 추가 설치키로 했다.

참고로, 함안군에서는 '15년 6월부터 이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산익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 동안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고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금석기자 younks@sidaeilbo.co.kr

수도일보

2013년 05월 31일 (금)
15면 사회

함안군 산익마을에 비상 급수

권익위 “함안군이 물 공급, 비용은 철도시설공단 분담”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던 경상남도 함안군 산익면 산익마을 2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식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산익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 식수 및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경전선 마산~함안간 복선 전철사업에 산익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관정이 편입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를 대체할 관정을 개발했으나 수량이 부족해 주말에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공사가 급수차량으로 식수 등을 공급해 왔으나, 6월

에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서 시공사마저 내달 철수할 예정으로 주민들은 식수공급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산익마을 주민들은 함안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30일 오전 10시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산익마을 주민들과 하성식 함안군수,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산익마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

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함안군은 오는 6월부터 산익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급수차량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급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함안군에 지불하고, 산익마을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10톤 용량의 물탱크를 하나 더 추가 설치키로 했다.

함안군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이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산익마을에 수도물이 공급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동안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고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5

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민원번호 : 2BA-1212-130228 (교통도로민원과, 이용범 조사관)



민원개요

경북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 등 7개 마을로 진출입하는 교차로가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니 마을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교차로를 이전해 주고, 교차로 인근 경로당 앞 마을길의 병목구간인 도로 폭을 확장하여 마을주민의 통행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갈지1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방안을 중재 합의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꽉 막힌 마을 진입로가 열리고, 그동안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 마련

1. 민원내용

- 지방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된 마을진입 교차로를 이전하고, 교차로 인근 마을안길 일부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7개 마을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확보 등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차로 이전을 요구하는 위치는 가감속차로 최소 길이 확보가 불가하여 이전 곤란
- 도로 폭 확장 요구 구간은 2016년 군도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병목구간 해소될 것으로 판단

3. 갈등 분석

- 마을 진입로가 급한 경사와 좁은 도로 폭으로 차량 교행이 안되고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을 요구

* 2012. 12. 18. 경산시 남산면 7개리 주민 200명이 집단민원 신청

-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개선안이 이미 설계에 반영되었고,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위치는 가감속차로 최소 길이를 확보할 수 없어 이전이 곤란하다.'고,

- 경북 경산시는 ‘도로 폭 확장 요구하는 면도구간은 2016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병목구간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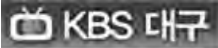
- 현장 조사와 현장 조사 시 제시된 주민과의 협의안에 대한 설계 및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 경상북도, 경산시,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조정·중재안 도출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위원회 조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합의) 결과

- 최대한 이전가능한 위치까지 교차로를 이전하고 교차방법을 변경하여 설치하며, 예산 사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병목구간 확폭을 즉시 시행할 수 없으나 국지도 69호선 교차로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수차례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및 관련 전문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경산시 남면 안심리 등 7개 마을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꽉 막힌 마을 진입로가 열리고, 그 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



[뉴스9] 권익위가 나서야 했나

2013-06-05 (21:00) 권기준 기자



〈앵커 멘트〉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법령과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약 1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행정 기관이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해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 마을로 들어오는 260m 길이의 이 길은 경사가 심한데다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대구와 경산시내로 나가려면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 경상북도와 경산시에 진입로를 넓혀주고 교차로 위치도 마을 방향으로 더 가깝게 옮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관계법령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규를 감안하고 도로의 안전, 편리성 측면에서 기존 위치가 옳다.

〈인터뷰〉 최영조 경산시장 사실 경산이 그동안 예산문제로 힘들었어요

에만 태우던 주민들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최삼현 주민 대표 작년 7월 도에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2월 중순 권익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경산시, 그리고 주민들과의 중재를 통해 교차로를 마을과 40m 더 가깝게 이전하고, 진입이 쉽도록 경사도를 줄이면서 병목구간도 넓혀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앞으로 도와 경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시행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상호 양보와 조정이 있었으면 이미 해결됐을 민원이 행정기관들의 불성실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KBS NEWS 권기준입니다.

경도일보

2013년 06월 07일
03면 (종합)

道, 민원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섰다

경산 7개 마을 진출입로 개선

경북도는 5일 경산시 남산면사무소에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지1교차로 개선과 관련한 고충민원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철도과장을 중심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해 가감속차로



의 확보 등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를 현재의 설계위치에서 마을과 가깝게 40m정도 이전하고 감지교차로에서 마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별도의 차로를 개설해 주민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 감지1교차로 개선을 통해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 등 7개 마을 300여세대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경사가 높아 겨울철이면 통행이 어려워 남산면

사무소 방향으로 우회하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조정회의에 참가한 주민대표 최삼현 안심1리장은 "마을로 진출입하는 주도로의 환경이 열악해 지금까지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민원이 해결 됐다"며 "6개월여 동안 노력해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안상수 기자

NEWSis()

2013년 06월 07일 (금)
온라인

권익위, 경산시 7개 마을 진출입로 안전개선 중재



【경산=뉴스is】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가 경북 경산시 7개 마을 진출입로 안전개선을 중재했다.

권익위는 5일 오후 경산 남산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주낙영 경북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갈지1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방안에 대한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경산시 남산면 7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고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진출입로 개선 민원을 넣은 바 있다.

중재안에 따라 경북도는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해 가·강속 차로의 확보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를 현재의 설계 위치에서 마을과 가깝게 40m를 이전한다.

또 갈지고 방향에서 마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별도차로를 만들고 차로의 중단경사는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안길 병목구간 확장은 경산시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군도 16호선 송내~연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해 시공한다.

특히 교차로 이전 공사와 연계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구간에 우선해 시공키로 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전문가 판 의견조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바 있다.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하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6

지방도 717호선 조기건설 및 임실군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민원번호 : 2AA-1211-022105 (교통도로민원과, 유택종 조사관)



민원개요

지방도 717호선을 조기에 건설해 주고, 국도 27호선에서 수암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임도)를 만들어 주며, 진입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선박을 운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지방도 717호선을 장기계획사업에서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 임도를 개설하고, 임시로 선박을 운행 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지방도 717호선을 조기에 건설해 주고, 국도 27호선에서 수암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임도)를 만들어 주며, 진입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선박 운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방도 계획이 있는데 별도의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 지방도 717호선 조기 개설이 가능한지

3. 갈등 분석

- 섬진강댐 건설 당시 옥정호 주변으로 순환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옥정호 주변 지역이 고립되어 낙후되었는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지방도 717호선을 조속히 건설해 주고,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소재 수암마을은 1965년부터 진출입로가 상실되어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접근하였으나, 이마저도 옥정호 및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선박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수암마을로 자유로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수암마을에서 운암리(국도 2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임도)를 개설해 주고,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수암마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선박을 운행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08. 8., 2009. 12. 및 2012. 11. 5. : ○○○ 외 수암마을 등 주민 720명 집단 민원신청

- 전라북도는 ‘현재 지방도 717호선은 전라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2016년 이후 사업시행) 사업에 해당하고, 도로를 개설할 시급한 사유도 없으므로 조기개설(단기계획으로의 변경)은 곤란하다’고,
- 전라북도 임실군수는 ‘수암마을은 운암리와 문방리 수방마을 가운데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운암리에서 문방리 수방마을까지는 지방도 717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도 노선 선정기준상 도로로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도노선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운암리에서 수암마을까지의 임도개설은 불가하나, 수암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암마을로의 도로(임도)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답변
- 40여년간 육로가 단절된 수암마을 주민 및 임실군 발전을 위해 지방도 조기개설 및 임도 개설 필요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주민 및 피신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조정안 확정

5. 조정 (합의) 결과

- 지방도 717호선을 장기계획사업에서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 임도를 개설하고, 임시로 선박 운행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수암마을로의 육로를 확보하는 계기 마련
- 임실군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및 신청인 요구 반영으로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지방도 717호선을 장기계획사업에서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

전주 MBC

[뉴스9] 권익위가 나서야 했나

2013-06-05 (21:00) 권기준 기자



◀ANC▶

섬진강이 건설되면서 진입로가 수몰돼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고립됐던 마을이 있는데요. 물을 건너려다 주민들이 익사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VCR▶

푸른 물빛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옥정호, 옥정호 상류에는 육지 속의 섬마을인 수암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마을 진입로가 수몰돼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고립됐습니다. 특히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동력선 사용이 금지돼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사기 위해 3킬로미터의 거리를 노를 저어 이동했습니다.

◀INT▶

시장을 가려해도 너무 답답하다.

뱃길로 1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바깥 일을 보러 나갔던 주민 40여 명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이 뱃길을 대신해 만든 인접마을로 가는 산길도 허가를 받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열악하자 천4백 가구에 이르렀던 세대 수는 14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육로 건설 요청이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암마을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 7백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6개월간의 현지 조사와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임실군이 내년까지 마을 진입로를 만들고 지방도도 전라북도가 조기에 착공하도록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I N T ▶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결정으로 소외된 마을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일보

2013년 06월 27일 (목)
10A면 사회

임실 옥정호 섬마을 48년 만에 육로 개설기로

국민권익위 현장중재로 성사

섬진강댐 건설로 생긴 전북 임실의 옥정호 내 섬마을에 '육지'로 바로 통하는 길이 48년 만에 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재에 따른 것으로 주민 700여명의 편의는 물론 옥정호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임실군 운암면 민원 중개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임실군이 협력해 조만간 운암면 수암마을 진입로를 개설토록 중재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도 27호선과 이어지는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5.8km) 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도는 717호선

이 장기계획사업으로 고시돼 10년 후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5년 내 추진하는 단기계획 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임실군은 강진면 수방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 1km 정도의 임도를 내년부터 개설키로 했다. 또 임도가 완공될 때까지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선(배)을 운행키로 했다.

수암마을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육지안 섬이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소형선박을 타고 옥정호를 건너 육로로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배편으로 옥정호를 건너다 숨진 주민이 40여명이나 된다.

임실=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연립뉴스

2013년 06월 27일 (목)
온라인

'임실 옥정호 섬마을' 48년 만에 길 열린다



2013-06-26 17:04 이윤승 기자 (love@yna.co.kr)

(임실=연합뉴스) 성진강댐 건설로 생긴 옥지 내 섬마을인 전북 임실군 운암면 수암마을 진출입 육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재로 조기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운암면 민원증개소에서 이성보 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임실군이 협력해 내년까지 수암마을 진입로를 개설토록 중재했다.

수암마을은 1965년 성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워 48년간 소형선박을 이용해 옥정호를 건너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나와 육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댐 건설 이후 현재까지 배편으로 옥정호를 건너다 숨진 주민은 40여명에 달한다.

이번 중재로 주민 7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육로가 생기고 국도 27호선을 잇는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건설사업도 조기 추진되게 됐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임실군은 수방에서 수암마을까지의 임도를 2014년까지 개설하고 임도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응급 또는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선(배)을 운행한다.

전북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사업으로 고시돼 10년 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5.8km)을 5년 내 추진하는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정으로 50여년간 불편을 겪어온 수암마을 주민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으나 접근할 도로가 없어 낙후되었던 옥정호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3년 06월 27일 (목)
11면 정책

임실 연합뉴스

‘육지의 섬’ 수암마을 통행 육로 조기 추진 섬진강댐 건설로 생긴 육지 속 섬마을인 전북 임실군 운암면 수암마을의 통행 육로 개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중재로 조기 추진된다. 권익위 이성보(왼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이 26일 운암면 민원증개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해 전북도와 임실군의 협력으로 내년까지 수암마을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중재했다.

전북도민일보

2013년 06월 27일
10면 (지역)

섬진강댐 건설로 섬된 ‘임실 수암마을’ 숙원 해결

“48년만에 육로 다시 열려 감개무량”

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중재
700명 소형선박이용 통행
배로 건너다 40여명 숨겨
도로개설, 산지관리법 제동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우리 마을에도 도로가 개설될 수 있어 꿈만 같습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지사님, 임실군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6일 지방도 717호 조기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건설 현장 조정회의 현회가 잘 이뤄진 자리에 참석한 주민대표 최일권씨의 눈물어린 소감이다. 지난 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48년째 육지내 섬에서 살아온 임실군 운암면 수암마을 주민 700여 명을 위해 마침내 진출입을 위한 육로가 생기고, 국도 27호선을 잇는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건



26일 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돼 불편을 겪은 수암마을 도로개설을 위한 권익위 조정회의에서 이성보 위원장이 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설사업도 조기 추진될 전망이다. 수암마을 숙원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전라북도와 임실군과 협력해 섬사시진 민원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 이날 중재안이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그동안 수암마을 주민들은 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도로가 수몰되면서 차참으로는 더이상 마을을 드나들 수

없고, 이후에는 소형선박으로 육점호를 건너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나와 육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소형선박으로 육점호를 건너던 주민이 전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주민들은 임실군 등 관계기관에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만 심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5년 이후 배편으로 육점호 횡단 중 사고로 인해 총 40여명 사망)

그러나 해당 지역이 향후 10년 후 추진 예정인 지방도 장기계획사업에 포함돼 관계기관으로부터 도로개설을 거절당했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육점으로 주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예 소형선박 운행마저 불가능해졌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주민들은 사유지 임야에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마을을 출입했지만, 이마저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1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전라북도 및 임실군의 입장을 조율한 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은 내년까지 수암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진입 육로를 개설하고, 지방도 717호선을 조기 건설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7

중앙선 U자형 주포과선교 직선화

민원번호 : 2AA-1306-141988 (교통도로민원과, 이용범 조사관)



민원개요

중앙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보례마을 등 4개 마을로 진·출입하던 마을길인 군도 9호선을 폐쇄하고 우회도로인 U자형 주포과선교를 설치할 예정인데, 주포 과선교의 종단경사와 회전반경이 급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U자형 주포과선교를 직선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U자형 주포과선교를 선형변경하여 직선화하는데 조정합의를 이끌어내어 복선전철화사업의 적기 준공과 마을진입로 이용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1. 민원내용

- 4개 마을로 진·출입하던 마을길인 군도 9호선을 폐쇄하고 설치 예정인 주포 과선교의 종단경사와 회전반경이 급하여 마을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니 주포과선교를 직선화해 줄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U자형 주포과선교의 직선화는 종단경사가 급해져 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3. 갈등 분석

- 마을길인 군도 9호선을 폐쇄하고 우회도로인 U자형 주포과선교를 설치할 예정인데, 주포 과선교의 종단경사와 회전반경이 급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자 U자형 주포과선교를 직선화해 줄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U자형 주포과선교를 직선화할 경우 인근의 고가도로인 국도38호선을 입체로 횡단해야 하므로 종단경사가 16.2%로 급해져 동절기 결빙 등을 우려하여 수용 불가하다.'고,

- 충북 제천시는 ‘현재 설계된 U자형 주포과선교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직선형 주포과선교 모두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상 문제로 도로가 준공되더라도 관리전환에 부정적적이다.’는 입장

4. 갈등해결과정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천시, 신청인 등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 U자형 주포과선교를 선형변경하여 직선화하는데 조정합의

5. 조정 (합의) 결과

- U자형 주포과선교를 국도38호선 고가 상부를 횡단하여 구 국도 38호선에 연결하고 주포과선교를 위와 같이 직선화로 설치를 하되, 현재의 U자형 선형을 개선한 설계변경안이 마련되면 설치공법 및 종단경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천시와 신청인 모두의 참여아래 사전 상호 협의하여 설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지형 및 철길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던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등 인근 마을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

MBC

2013년 07월 22일 (월)
방송

국민권익위원회 도로 개설 민원 합의 조정



2013-07-20 허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어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합의 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례마을 등 4개마을 850여 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제기한 중앙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U자형 도로 직선화 요구에 대해, 해당 도로를 국도 38호선과 연결해 끝을 직선화하고, 제천시가 도로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회전반경이 30미터에 불과한 U자형 도로 개설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직선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연말뉴스

2013년 07월 22일 (월)
본리안

제천 보례마을 진출입로 민원 중재한 권익위 이정보위원장



2013-07-19 16:16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보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U자형 도로로 생길 예정인 마을 진출입로를 직선화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출입로 끝부분을 국도와 연결해 직선화 하기로 했다. 2013.7.19 << 권익위 제공 >>

충북일보

2013년 07월 22일 (월)
04면 종합

권익위, 국민 위한 해결사 노릇 '톡톡'

‘마을 진출입로 직선화’

제천 봉양읍 집단민원 해결

“주민숙원 도로환경 개선

지역발전 단초 마련 의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제천시 봉양읍 4개 마을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마을 진출입로의 급경사와 회전반경 문제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보례마을 등 약 350여세대 850여명이 거주하는 인근 4개 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한다.

집단민원은 지난 2011년 7월 시작된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현재 이들 4개 마을 주민들은 읍내와 마을을 드나들기 위해 인근의 철길을 횡단한 후, 경사가 13.17%나 되는 급경사의 군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진출입로 일부를 폐쇄

하는 대신 경사를 7.6%로 낮추고, 철길을 교량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공단의 설계안대로 도로가 만들어지더라도 다른 도로에 비해 여전히 경사가 급하고, 회전반경이 30m에 불과한 U자형으로 설치돼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이 크게 개선되지 않라며 직선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천시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시 당국은 공단의 설계안은 위험하고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입장은 다르다. 공단 측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출입로를 직선화하면 부득이 인근에 고가 형태로 높게 설치돼 있는 국도 38호선을 넘어가는 형태로 개설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도로의 급경사를 피할 수 없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집단민원을 접수, 지난 19일 오후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와 이동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최명현 제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조정안은 공단 측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로 끝부분을 옛 국도 38호선에 연결해 도로를 직선화하고, 제천시는 해당도로가 준공된 후 공단 측이 요구할 때 유지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또 모양을 개선한 설계변경안이 마련되면, 설치공법 및 경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주민들과 시가 함께 논의키로 했다.

공단 측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모양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안)은 오랜 기간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던 장평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숙원으로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8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민원번호 : 2AA-1304-040170 (교통도로민원과, 유택중 조사관)



민원개요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현동교차로는 경사가 급하고, 급커브의 곡선구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의 안전과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가가 인증한 공인된 교통전문기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능여부, 회전교차로의 안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동교차로를 설치하며, 신설 국도31호선에서 울진방향과 소천면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현동램프-E의 차선향을 확장하여 현동우회도로(국도36호선)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소천면 진입도로의 우회전 차선향 일부를 확장하여 소천면에서 시동마을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겨울철 빙판길 사고 방지를 위해 현동램프-E에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교차로의 경사가 급하고, 급커브의 곡선구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의 안전과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신설 국도31호선 설계의 적정성
-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회전교차로 설치의 적절성

3. 갈등 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동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나, 설계도면과 같이 현동교차로가 건설될 경우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안전한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3. 4. 지역주민 321명 현동교차로 구조 개선 요구

- 피신청인은 현 현동교차로의 구조는 급경사이고, 급커브여서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용자들이 차선을 오인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로 그 구조를 설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현동교차로의 구조를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 현 설계 현동교차로의 안전성 및 회전교차로 설치의 적절성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주민 및 지자체, 피신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조정안 확정

5. 조정(합의) 결과

- 국가가 인증한 공인된 교통전문기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능여부, 회전교차로의 안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동교차로를 설치하며,
- 신설 국도31호선에서 울진방향과 소천면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현동램프-E의 차선폭을 확장하여 현동우회도로(국도36호선)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 소천면 진입도로의 우회전 차선폭 일부를 확장하여 소천면에서 시동마을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겨울철 빙판길 사고 방지를 위해 현동램프-E에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사고 위험이 높던 현동교차로를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로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자체의 의견과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NEWSis()

2013년 07월 29일 (월)
온라인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현장조정회의



2013-07-26 18:54:13 박동욱 기자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 신영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불편을 초래했던 현동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토록 총재안을 마련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07.26.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대구신문

2013년 07월 29일 (월)
08면 대구/경북

봉화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권익위 중재로 '급경사 급커브' 해결 방안 찾아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봉화군 소천면 소재 현동교차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로 건설된다.

봉화 현동교차로는 국도31호선과 국도36호선, 소천면 진입로 및 구 국도31호선이 교차하는 평면 4지 교차로로, 노루재터널 하부에 있어 경사가 급하고 활저럼 휘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이용자가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 많은 위험과 불편이 있는 곳이다. 소천면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과 봉화군에 현동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를 추진키로하자 소천면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봉화군의 입장을 조율해 지난 26일 오전 11시 소천면사무소에서 소천면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봉화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

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통해 현동교차로 구조개선과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가 인증한 공인된 교통전문기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능 여부, 회전교차로의 안전성 등의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동교차로를 설치키로 했다. 또 신설 국도31호선에서 울진방향과 소천면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현동램프-E)와 소천면 진입도로 일부구간을 확장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그 밖에도 △겨울철 빙판길 사고 방지를 위해 현동램프-E에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등), 안내표지판,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봉화군은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토록 중재했다.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간 갈등이 해소되고, 소천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동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봉화=김효윤기자 kky@daegu.co.kr



봉화군 소천면 소재 현동교차로가 국민권익위 중재로 급커브의 위험한 요소를 없게 됐다.

영남일보

2013년 07월 27일 (토)
08면 지역

급경사·급커브로 위험 현동 교차로 구조 개선

권익위원회...방안 마련

【봉화】 급경사와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많았던 봉화군 소천면 현동 교차로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일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박노옥 봉화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동교차로는 국도31호선과 국도36호선, 소천면 진입로 및 옛 국도31호선이 교차하는 곳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활처럼 휜 급커브인 데다 차선 오인으로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통사고 취약지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봉화군에 현동교차로의 구조 개선과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

해 왔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천~도계 간 국도건설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지난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설 국도31호선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소천면 진입도로 일부구간을 확장한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간 갈등이 해소되고, 소천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동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급경사와 급커브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화군 소천면 현동교차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아시아투데이

2013년 07월 29일 (월)
온라인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교차로’ 구조개선 된다



2013-07-28 11:37 김정섭 기자 (seop7555@asiatoday.co.kr)

봉화군(군수 박노옥)은 소천면 현동교차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동교차로는 국도 31호선과 국도 36호선, 소천면 진입로 및 구국도 31호선이 교차하는 평면4지 교차로로 노루재 터널 하부에 위치하여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하여 차량전복과 차선 오인으로 인한 역주행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전 11시 소천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신영기), 봉화군수,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김광덕), 주민대표(권영호)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현동교차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키로 동의하였으며, 조정서에 합의 서명 하였다.

9

국도확장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구제

민원번호 : 2BA-1305-273692 (교통도로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민원개요

국도 38호선 태백 - 도계 확장공사로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삼마아파트 1개동(‘다’동) 24세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 제한, 소음 등으로 안정된 주거 생활이 곤란하니 이 민원 건축물을 매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 아파트 3동 중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1동(24세대)에 대해 매수하고, 잔존 2개동 48세대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방음벽 및 조경시설 등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5년 이상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

1. 민원내용

- 국도가 확장되면서 용지경계(도로경계선)로부터 2.7m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생활이 곤란하다며 건축물 매수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직접 매수 보상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 입장

3. 갈등 분석

-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로 아파트 1개동(‘다’동) 24세대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건축 제한, 소음 등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곤란하다며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09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제기(원주청 4회, 위원회 2회)

- 이에 대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 민원 건축물이 접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의 신·증축의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나,
-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이므로 직접 매수 보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하여 민원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삼마아파트 ‘다’동 건축물 및 관련 부속 토지(지분)를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매수 보상해주고,
 - ‘가’동과 ‘나’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아파트 전면에 방음벽과 조경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며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합의) 결과

-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건축물 및 관련 부속 토지(지분)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고,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보상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보상하고, 철거되는 이 민원 건축물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 방음벽과 조경시설 등은 삼마아파트 가동·나동 입주민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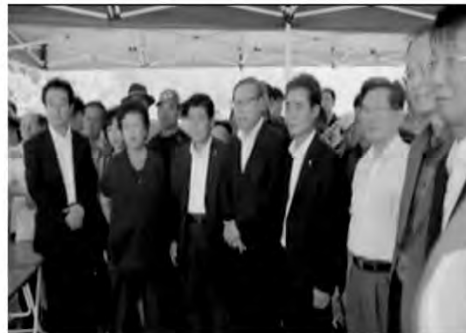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국가사업으로 인해 지난 5년여 동안 반복되어온 민원이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 마련



2013년 08월 16일 (금)
방송

[뉴스9] 공사 소음 피해 우려에 아파트 철거



2013-08-14 (20:30) 김영은 기자

<앵커멘트>

국도 확장·포장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삼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시행사가 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은 기잡니다.

<리포트>

25년 전 한 광업소 직원들의 숙소로 지어진 삼척의 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척 도계와 태백을 잇는 국도 38호선 4차로 확장공사 현장으로 내년 말에 준공됩니다. 이 도로가 들어서면 노면 경계선과 아파트 사이 거리는 최소 2.8미터까지 좁혀집니다. 입주민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벌써 5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옥순/아파트 입주민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계속 살고 싶어도 도로가 코앞에 있게 되니까 살 수가 있어야죠."

2013년 08월 16일 (금)
방송

하지만 시행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왔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3개 동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1개 동을 시행사가 사들여 철거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녹취> 박재영/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삼척시 관계자께서는 조정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음과 분진 피해 우려로 도로 건설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변중현/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설계변경, 노선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최종 노선을 찾아보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민들과 논의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나머지 2개 동 48가구 주민들을 위해 오마이강원민방 터에 주차장을 만들고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江原日報

2013년 08월 15일 (목)
16면 1면

소음에 시달리던 아파트 주민 이주 합의

삼척 삼마아파트 국도38호선 도로경계로부터 2.7m 불과
5년간 끌던 민원 국민권익위 중재로 원주국토청 매수나서

【삼척】삼척시 도계읍 삼마아파트 주민들의 국도 확포장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아파트 매수 보상으로 해결된 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성보)는 14일 오후 3시 도계읍 국도 38호선 공사현장사무소에서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재재 국회의원, 변중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삼마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태백·도계 구간 국도 38호선 4차선 확장 공사로 아파트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7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의 생활피해를 호소하며 5년째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삼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접도구역에 포함되는 아파트에 대한 매수보상이 이뤄지면서 해결되게 됐다. 또 철거되는 다동 건축물 부지에는 옆 동인 가동과 나동의 48세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동과 나동의 입주주민들과 협의해 아파트 전면에 방음벽과 조정시설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도 38호선 태백·도계 구간과 인접해 있는 삼마아파트는 25년 전 삼마관입소에서 채광작업을 하던 사원들의 숙소로 건축돼 현재 3개동에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중 1개 동인 '다'동은 용지경계로부터 2.7m 거리에 위치한 접도구역에 포함, 건축이 제한되고 소음 등으로 가주가 곤란하다며 주민들이 지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4일 삼척시 도계읍 삼마아파트 민원현장에서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5월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그동안 삼마아파트가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주거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직접 매수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도확장으로 인해 불행이 예상되는 삼마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어 만·반이 서로 협력해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철기자 cheng@kwnews.co.kr

MBC

2013년 08월 16일 (금)
방송

국도 인접 아파트 매수 조정



2013-08-14 오후 5:24:00

◀ANC▶

삼척시 도계읍의 삼마아파트는 국도 공사 현장과 인접해 주민들이 수 년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해 나서 국가가 일부 건물을 매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조규한 기잡니다.

◀VCR▶

아파트 3개동에 72세대가 살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 삼마아파트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태백-도계 간 국도 38호선 확장 공사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면 아파트 1개동은 도로 경계선과 2.7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큼니다.

국도 확장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 조사를 거친 끝에 국도와 인접한 아파트 1개동 24세대를 이주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아파트 주민을 위해 방음벽과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정해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MBC

2013년 08월 16일 (금)
방송

◀ I N T ▶ 박재영/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상대방이 민법상으로 이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발주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5년 만에 민원이 해소돼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 매수 보상액을 놓고 합의가 필요하고 이주하지 않는 나머지 주민들의 피해 구제가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 I N T ▶ 이순욱/주민 대표

'도로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갈라니까 어디로 갈 지 막막하거든요.'

◀ I N T ▶ 변종현/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민원이 해결돼서 공사를 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 성립은 삼척지역에서 첫 사례이어서 다른 도로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13년 08월 15일 (목)
10면 37면

삼척 삼마아파트 민원 5년만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원주국토관리청 다동 매수 합의

국도 38호선 태백~도계 확장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삼척 도계읍 삼마아파트 문제가 5년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4일 국도 38호선 태백~도계 현장사무실에서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지난 2007년부터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조정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원주국토관리청은 국도 38호선 접도구역에 포함된 삼마아파트 다동과 그 부속 토지를 매수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 철거되는 다동 건축물 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나동아파트 전면에 방음벽과 조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4일 태백~도계 38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국민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변종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국회의원,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원,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원 등 지역 사회 단체장과 주민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향후 이 아파트 가나동 주민들은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삼척시는 38국도 확장 사업과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도 38호선 확장으로 인한 삼마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관의

협력으로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유병호 삼척 부시장, 변종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국회의원, 박상수 강원도의회 의원,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원 등 시·도 단계장과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확장 공사 중인 국도 38호선 태백~도계 구간에 인접해 있는 삼마아파트는 25년전에 건립됐으며, 현재 37동에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아파트 다 동의 경우 접도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이 제한되고 국도 확장으로 인한 소음 등 생활 피해가 심각해 지자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삼척/홍성배

10

소사고차로 신설로 인한 피해구제

민원번호 : 2AA-1307-227429, 2BA-1308-061905 (교통도로민원과, 김경태 조사관)



민원개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웅동-장유 국도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는 소사 - 녹산 도로공사국도와 지방도 신설공사로 인해 신설되는 소사고차로 구간 내 토지가 10m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여진 교통섬으로 종전과 같이 영농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도로사업 추진 기관별 민원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분담 편입하여 우선 매수하고, 이후 도로관련 시설로 조성하여 도로의 안전기능 향상과 민·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집단민원 조정 해결

1. 민원내용

- 국도와 지방도 개설공사로 신설되는 교차로 구역 내 소재한 토지(20필지 14,200㎡)가 10m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자 토지 매수를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기관 갈등 양상으로 도로사업 추진 기관별 토지 매수 분담 비율

3 갈등 분석

- 국도와 지방도 신설공사로 인해 신설되는 소사고차로 구간 내 토지가 10m 높이의 도로로 둘러싸여진 교통섬으로 종전과 같이 영농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고 집단민원 제기

* 2012년부터 교차로 민원제기 (부산국토청 2회, 경제자유구역청 3회)

-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후행 사업인 지방도 개설로 인해 교차로가 신설되어 이 민원 토지가 램프로 둘러싸이게 되므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다.’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민원 토지는 소사교차로 구간 내에 있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암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국도개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잔여지다.’고 답변
- 기관 갈등으로 2년여 동안 미해결 고충민원

4. 갈등해결과정

- 기관 갈등으로 발생한 미해결 고충민원에 대해 현지조사, 당사자 의견청취, 이견조율, 대안제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5. 조정 (합의) 결과

- 민원이 발생한 토지를 나눠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필지 4,976㎡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8필지 9,224㎡를 분담하여 사업구역에 확장 편입시키고, 각각의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하며, 매수한 토지를 도로 관련시설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도로시설로 조성하기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사유재산의 침해가 예상되는 이곳 토지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

연말뉴스

2013년 09월 11일 (수)
포토뉴스

국민권익위, 소사고차로 민원조정 회의



(창원=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사무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따로따로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문에 영농,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소사고차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문제를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9.11 <<지방기사가참고,국민권익위원회>>

seaman@yna.co.kr

(끝)/이정훈

국제신문

창원 소사고차로 '교통섬' 지주 보상받는다

진해구 웅동지역 논밭 9224㎡
국도·지방도로 외부와 단절
권익위, 부산국토청 등과 협의
총 40억 원에 부지 매수 권고

박동필 기자

도로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창원시 진해구 웅동의 '교통섬'에 대해 도로개설 기관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이성보 권익위원장 증재로 현장을 방문, 현장조사와 민원을 청취한 뒤 17명으로 이뤄진 지주들의 토지 보상 요구 민원

이 '이유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도를 조성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도를 개설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40억 원에 달하는 주민 부지를 매수키로 했다.

국토관리청은 2006년부터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서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길이 9.26km의 국도 58호선을 건설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청은 2007년부터 진해구 소사동과 부산시 강서구 녹산을 연결하는 길이 6.81km의 지방도를 새로 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도로를 이어주는 램프가 진해구 웅동 소사마을 인근에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 논밭을 둘

2013년 09월 12일 (목)
12면 지역



러싸는 형태가 돼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 공사들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8필지·9224㎡)가 두 도로의 한 가운데에 갇혀버린 교통섬으로 전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로 개설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2년 넘게 민원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7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연암뉴스

2013년 09월 11일 (수)
지역

<도로 때문에 '섬'이 된 논밭...권익위 중재로 해결>

<도로 때문에 '섬'이 된 논밭...권익위 중재로 해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두 기관이 각각 도로를 내는 바람에 농지가 도로에 둘러싸여 쓸모없게 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풀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부터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감해시 장유면을 잇는 길이 9.26km의 국도 58호선을 건설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부터 진해구 소사동~부산시 강서구 녹산을 연결하는 길이 6.81km의 지방도를 새로 내는 공사를 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2014년 12월 말 완공예정이다.

진해구 웅동 소사마을 주변에 두 도로를 이어주는 램프가 설치된다.

공교롭게도 램프가 마을 주민 소유의 논밭 20필지(1만4천200㎡)를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램프 턱 높이가 10여m나 돼 해당 토지가 섬으로 전락해 버렸다.

땅 주인 17명은 도로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도 어렵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두 기관은 처음에는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나중에 도로공사를 시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떠넘겼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논밭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램프 밑에 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년 넘게 민원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땅주인들은 지난 7월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현지 출장조사를 벌여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재에 나섰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사무소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도로 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합의서에 사인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필지(4천97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8필지(9천224㎡)를 각각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토지는 도로관련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땅 주인들은 더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eaman@yna.co.kr
(끝)

경남연합일보

2013년 09월 12일 (목)
01면 3면

몇 년간의 다툼...창원 소사교차로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년간 이어져 온 창원 소사교차로 민원을 도로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매수 증대로 해결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해 서로 다른 두 기관이 각각 국도와 지방도를 만들다가 두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마을 토지 일부가 10m쯤 어긋나 도로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생긴 주민들의 불만민원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두 기관이 나눠서 해당 토지들을 전부 매수보상하도록 하면서 민원을 해결했다.

민원이 발생한 토지들은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소사교차로 내 20필지(1만4200㎡)로, 부산지방국도

'영농제한 토지' 도로사업자 전부 매수 합의 10m 신설도로 둘러싸인 '교통섬' 전부 보상

관리청장이 건설하고 있는 용동→장유간 국도 68호선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설하는 소사→녹산 지방도로가 겹쳐지는 지점이다.

지난해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10m 폭의 도로로 둘러싸여 고립되면서 종전같은 영농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후발 사업 추진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소사→녹산 지방도로 공사로 인해 민원이 생겼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다른 시행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토지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앞거와 진입로를 이미 설치했고, 일부 토지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건설하는 국도공사 때문에 생긴 잔여지이므로 부

산지방국도관리청장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11월 창원시 진해구 용동1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손태락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 서석승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윤한홍 경상남도부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조영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내는 데 성공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스민원이 발생한 토지들 나눠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12월지 4076㎡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8월지 9224㎡를 분담해 사업구역에 확장 편입시키고, 각각의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기관인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장과 협의해 매수한 민원 토지들 도로 관련시설로 조성해 안정적인 도로시설로 조성하며, 대신, 스민원인들은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예상되는 이곳 토지주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민·관·여 서로 협력해 국책사업을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종갑기자jakang@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1일 창원시 진해구 용동1동사무소에서 도로공사로 영농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관계기관과 매수 보상 총액을 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09.1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NEWSis()

2013년 09월 11일 (수)
종합

인사 나누는 이성보 위원장



【서울=뉴스is】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왼쪽)이 1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동1동사무소에서 도로공사로 영농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관계기관과 매수 보상 총액을 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3.09.1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11

영동고속도로 구)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민원번호 : 2AA-1305-242987 (교통도로민원과, 이용범 조사관)



민원개요

8개 마을 750여 세대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지역은 남한강을 경계로 여주시내와 떨어져 있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약 15km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1999년 시행한 영동고속도로 개량공사로 폐도가 된 구)남한강교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폐도구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멀리 우회하는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1. 민원내용

- 영동고속도로 개량공사로 폐도가 되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성능시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남한강교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향후 영동고속도로 확장 여유부지, 신 교량 관리, 하이패스 등 ITS 성능시험장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행 개방 시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 민원 구간 개방은 곤란하다는 피신청인 입장

3. 갈등 분석

- 학교, 병원 등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여주시내와 남한강을 경계로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약 15km를 우회하고 있으니 구)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강천면 19개 마을리장 등 주민 70명 연서로 고충민원 제기('13. 5. 24.)

-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등 ITS 성능시험장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통행 개방 시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 민원 구간 개방은 곤란하다’고,
- 경기도 여주시는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이 민원 구간을 관리전환 받기를 원하나, 불가할 경우 하이패스 성능시험 시간 등 최소 시간만 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개방할 경우 통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서행 야광표시, 교통시설 보완 등을 통해 통행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

4. 갈등해결과정

-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한국도로공사는 민원 구간에 설치된 하이패스 성능시험장 이전 및 여주시로 관리전환 추진 노력
 - 여주시는 민원 구간을 관리전환 해주면 주민 안전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통행 개방 적극 검토

5. 조정 (합의) 결과

- 한국도로공사는 구)남한강교 폐도구간을 조건 없이 여주시로 관리전환하고, 현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2014년 상반기 이전에 이전하며, 여주시는 관리전환 받은 폐도구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집단민원의 조정합의 이끌어 내 강천면 인근 8개 지역 주민들이 구)남한강교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멀리 우회하여야 했던 고충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NEWSis()

2013년 10월 16일 (수)
종합

여주 강천면 방문한 이성보 위원장



【서울=뉴스is】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6일 오후 교통불편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3.10.16.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경인일보

2013년 10월 17일 (목)
21면 지역

바른면 내남 상반기부터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영동고속도로 구 남한강교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오른쪽 교량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

舊남한강교 개방... 적금리 8개마을 시내가기 편해진다

일반인의 동행이 금지된 영동고속도로 구(舊) 남한강교 폐도구간이 개방된다. 이에 따라 불과 1.5km에 불과한 시내를 가기 위해 무려 15km를 우회해야 했던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16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성보)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김춘식 여주시장, 강천면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구(舊) 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현장 조정회의'를 갖

고, 개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남 상반기부터 강천면 적금리 일대 8개 마을 1천700여 주민들이 구 남한강교를 이용해 여주시내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구 남한강교 폐쇄로 인해 걸어서 5분만에 불과한 거리를 30분 넘게 걸리고 있었다며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문제의 교량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999년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바로 옆에 새로운 교량을 건

설해 폐쇄했으며, 2004년 11월부터는 하이패스 성능시험장 등으로 사용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동행이 전면 제한돼 왔다.

특히 도로공사측은 '폐도구간은 향후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대비하는 동시에 하이패스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시험장으로 활용해야 하며, 개방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김건식 적금리 이장은 "이런 합

의로 생활권의사실이 밀집한 여주시내와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며 "주민들의 10여년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올해 말까지 여주시로 이관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장을 내남 상반기까지 이전하며, 여주시는 안전·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주/백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아시아투데이

2013년 10월 16일 (수)
사회

여주시 강천면 8개 마을 15km 우회불편 해결

권익위 “영동고속도로내 舊 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현장조정



민원발생 위치도

여주/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거리상으로 1.5 km 떨어져있는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로 15km나 우회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인근 8개 지역 1,700여명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999년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를 개량하면서 기존에 있던 舊 남한강교 옆에 새 교량을 만든 다음부터는 舊 남한강교와 기존 일부 도로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기타용도(확장 여유부지, 관리 도로 등)로 사용하고자 잠정 폐쇄했다.

이에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로 15km를 우회해야 하던 주민들은 기존의 폐도 구간을 살려 인근 군도와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폐도구간을 향후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사용할 여유부지와 신교량의 관리도로, 하이패스 등 과 같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이다.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16일 오후 2시 여주시 강천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기념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김준석 경기도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영동고속도로 내 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와같이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여주시로 변경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하였으며, 해당 폐도구간의 관리를 맡게 되는 여주시는 앞으로 이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안전? 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007nmw@hanmail.net

news1

2013년 10월 16일 (수)
종합

권익위, 여주 강천면 교통불편 민원 해결

(경기 여주=뉴스1) 유인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여주시 강천면남한강교 폐도 개방 현장설명회© News1

경기 여주시 강천면 인근 8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개량으로 남한강교 옆에 새 교량을 설치하고 남한강교와 기존 일부 도로구간을 잠정 폐쇄하면서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 15km를 우회하게 되자 기존의 폐도구간을 살려 인근 군도와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폐도구간을 향후 영동고속도로 확장 때 사용할 여유부지와 신교량의 관리도로, 하이패스 등 과 같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례 결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16일 오후 2시 여주 강천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기념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김준석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영동고속도로 내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여주시로 변경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여주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폐도구간을 개방하고 관리를 맡아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여주 강천면 주민 10년 숙원 해결

2013년 10월 17일 (목)
16면 34쪽

남한강교 폐도 구간 개방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와 강천리 등 인근 8개 지역 1천700여명 주민들이 10년 동안 제기한 교통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시 등에 따르면 이날 협상을 둘러 본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과 기념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김준석 여주시장은 강천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내 구(舊) 남한강 교의 폐도 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적금리와 강천리 주민 등은 여주시내까지 거리상 15km에 불과하지만 15km를 우회해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작성된 합의서에는 구 남한강 교

의 폐도 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도로공사에서 여주시로 변경하고 여주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김준석 시장은 "10여년을 넘게 끌어온 강천면 적금리와 강천리 등 마을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와 도로공사 등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정으로 오랜기간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주=유인선기자 esuk@kookje.com

전국매일

여주시 강천면 8개 마을 15km 우회 불편 덜었다

2013년 10월 17일 (목)
16면 34쪽

옛 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거리상으로 15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도로로 15km나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강천면 적금리 인근 8개 지역 1700여 명 주민들의 교통 불편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16일 여주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988년 영동고속도로를 개량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 남한강교 옆에 새 교량을 만든 다음부터는 이 남한강교와 기존일부도로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휴게·유류부지, 관리도로 등)로 사용하고 잠정폐쇄했다.

이로 인해 여주읍에 가기 위해서는 인근도로로 15km를 우회해야 하던 주민들은 기존의 폐도구간을

살려 인근군도와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해당폐도구간을 향후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사용할 여유부지와 신교량의 관리도로, 하이패스 등과 같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해 도로공사와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례 결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16일 강천면사무소에서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영동고속도로 폐도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윤남기자

<kimsn@sejourns.co.kr>

12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

민원번호 : 2CA-1305-273596, 2CA-1305-273625, 2BA-1306-280891, 2BA-1307-058653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조사관)



민원개요

익산역(KTX) 지하차도가 4년 동안 폐쇄되어 통행 불편 및 상권 붕괴 등 피해가 심각하니 지하차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국도 27호선과 연결하여 사용가능토록 해 달라는 익산시민 3만 1,514명 집단민원에 대해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잔여구간 및 중앙지하차도 종점에서 송악현대사거리까지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전 구간의 토지·매수 보상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

1. 민원내용

- 익산역(KTX) 지하차도 확장공사로 4년 동안 지하차도를 폐쇄하여 그 동안 통행 불편 및 상권 붕괴 등 주민피해 발생
- 예산 부족 및 기관 간 이견으로 지하차도가 완성될 기미가 없고,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피해 장기화로 인한 집단 고충민원 발생

* 익산시민 3만 1,514명이 서명하여 민원 제출(2013. 5. 28.)

2. 주요 쟁점사항

-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잔여 구간에 대한 시설물 및 도로 공사 예산확보

3. 갈등 분석

- 익산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중앙지하차도는 당초 2차선이던 도로를 철도부지 내 구간과 철도부지 외 구간으로 나누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가 각각 4차선으로 확장기로 하였으나, 익산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하차도가 4년간 단절되자, 전라북도 익산시민 약 3만 2천여 명이 호남고속철도(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집단 민원 제기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단절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인근 상권의 붕괴 등 익산시민들의 피해 및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바, 익산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이 민원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익산시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차도를 완성해 달라.’고 하는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협의한 바와 같이 익산시가 지하차도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4. 갈등해결과정

-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 국무조정실 사회적 갈등 협업과제 선정, 위원회 내 조사팀 구성

5. 조정 (협의) 결과

-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중앙지하차도 잔여 구간에 대한 시설물 및 도로 공사 예산을 확보하면 익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중앙지하차도 잔여 구간에 대한 토지를 매수·보상하고, 중앙지하차도 잔여 구간 및 중앙지하차도 종점에서 송악현대사거리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조정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오늘 조정으로 4년여 동안 폐쇄되었던 익산역 중앙지하차도가 완공되고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됨으로써, 익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

MBC

2013년 10월 30일 (수)
방송

권익위, 익산 중앙지하차도 중재



권익위, 익산 중앙지하차도 중재

공사비 부족으로 4년째 폐쇄된
익산 중앙지하차도 개통 공사가 국민권익위
중재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연 조정회의에서
익산시는 지하차도 연결구간 등 5백미터 구간에 대해 용지보상비 190억원과
일부 구간 공사비 30억 등 22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9) 조정회의에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 이한수 익산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익산시는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NEWSis()

2013년 10월 29일 (화)
종합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및 도로 연결 조정회의



【서울=뉴스is】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국민권익위원회 청사에서 4년여 동안 막혔던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때문에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 지하차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에 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한 후 이한수 익산시장(왼쪽),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왼쪽 두번째), 민원인 대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0.2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내외일보

2013년 10월 30일 (수)
14면 중 13면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설공사 시작

단절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연결공사 14년 말 완공예정

4년째 폐쇄된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시민대표, 이한수 시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 재정부담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지하차도 신규 연장간 시설물과 도로공사 예산을 확보하며 ▲익산시는 이 구간 도로공사 시행과 이 구간을 포함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전체 5백여미터 도로구간 토지를 공사 시작 전 매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지하차도 종점에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도로공사도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중앙지하차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지하차도 연장구간 공사가 당초 호남

고속철도 개통시기인 14년 말에 맞춰 진행된다.

또한 지난 4년간 폐쇄된 중앙지하차도 뿐 아니라 시내 중심부 병목구간이던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총 5백여미터 전체가 8차선으로 확장돼 국도 27호선과 연결돼 교통불

편이 해소된다.

익산시는 2009년부터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수십차례 방문, 지방재정에 많은 압박과 어려움으로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하차도가 단절되어 시민 피해가 큰 점과 익산시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국토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차도를 완성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에 익산시와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과 지방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원활한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 의지, 국민권익위 증대로 4년간 막혔던 지하차도 공사에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익산/고재홍 기자
gh@naewooilbo.com

서울신문

2013년 10월 30일 (수)
12면 전국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연결사업 재개

市·철도시설공단 재정 부담 합의

4년째 폐쇄됐던 호남고속철도(KTX) 익산역 지하차도와 시내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북 익산시 등과 서울 미근동 권익위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KTX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진입로 개설 공사' 재정 부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익산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하차도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역세권 개발에 맞춰 지상 도로 293m를 지하화하겠다는 익산시의 계획을 수용하고,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해 3m 깊게 변경 설계했다. 그러나 익산시가 시내도로 구

간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의 공사가 중단됐다.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행 불편과 주변 상권 붕괴까지 일자 익산시민 3만여명이 지난 5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하차도 연장 구간에 대한 시설물과 도로 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익산시가 공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 예산으로 병목 구간인 송학현대사거리까지 전체 500m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해 국도 27호선과 연결하는 사업도 진행하면서 교통 불편을 일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익산역 공사는 당초 개통 시기인 내년 말에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전북도민일보

2013년 10월 30일 (수)
09면 지역

‘익산중앙지하차도’ 내년에 땀 뚫린다

市·국토부 개설공사 합의 4차선 확장 내년 말 완공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

〈속보〉 예산마련이 쉽지 않아 4년째 폐쇄된 채 표류하던 KTX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정부와 지자체 간 최종합의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013년 8월 3일, 4일자〉
담보상대였던 이 지하차도 연결공사는 그 동안 출가차게 정부에 예산반영을 건의했던 익산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물결이 트였다. 이로써 단절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연결공사는 내년말에 완공 예정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29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 익산시민 대표, 이한수 익산시장, 여형

구 국토교통부 차관,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 재정부담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지하차도 신규 연장 구간에 대한 시설물과 도로공사 예산을 확보하며 ▲익산시는 이 구간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과 이 구간을 포함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전체 500여 미터 도로 구간의 토지를 공사 시작 전에 매수하기로 했다.

중앙지하차도 종점에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도로공사도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수 시장은 “기존 중앙지하차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지하차도 연장구간 공사가 당초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인 내년 말에 맞춰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난 4년간 폐쇄된 중앙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부의 병목 구간이었던



4년째 표류하던 KTX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정부와 지자체간 최종합의로 조만간 재개된다. 사진은 중앙지하차도 모습. 익산=최영규 기자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총 500여미터 도로 구간 전체가 8차선으로 확장돼 국도 27호선과 연결됨으로써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09년에 당시 국토해양부 및 국회와 협의해 장신~송학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익산시계-익산역 경계간 국도 23로 교차지점까지 전체

구간 1.66km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국토해양부는 전체 1.66km 구간 중 1.16km 구간에 대해서만 약 34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470억원이 필요한 도신 주거, 상가 밀집지역의 0.5km 구간을 전액 시비부담으로 시행을 요구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서울=강성주·익산=최영규 기자

연말뉴스

2013년 10월 29일 (화)
지면

<물꼬 트인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설공사>

<물꼬 트인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설공사>재정 부담 합의...내년말 완공 예정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4년째 폐쇄된 전북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 재정 부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지하차도 신규 연장구간에 대한 시설물과 도로공사 예산을 확보한다.

익산시는 도로공사 시행과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전체 500여m 도로 구간의 토지를 공사 전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중앙지하차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지하차도 연장구간 공사가 당초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인 2014년말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병목 구간이었던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500여m 도로 전체가 8차선으로 확장돼 국도 27호선과 연결된다.

호남고속철 익산역을 지나는 중앙지하차도 4차선 확장공사는 2010년 시작해 내년엔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현재 진입도로와 기존도로의 연결이 끊긴 상태다.

예산 문제로 공사가 멈추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익산 옛도심 발전을 위해 4년간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동안 불행에 불만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KTX 서부역사가 옛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solienso@yna.co.kr
(끝)

新亞日報

2013년 10월 30일 (수)
23면 23면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설공사 물꼬

권익위 나서 재정 부담 합의... 내년말 완공 예정

4년째 폐쇄된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가 드디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29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익산시장 이한수, 익산시장, 어명구 국토교통부 차관,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진입로 개설공사 재정부담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앙지하차도 신규 연장 구간에 대한 시설물과 도로공사 예산을 확보하며 ▲익산시는 이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과 이 구간을 포함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전체 500여m 도로 구간의 토지를 공사 시작 전에 매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지하차도 종점에서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도로공사도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중앙지하차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지하차도 연장구간 공사가 당초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인 14년 말에 맞춰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왼쪽), 어명구 국토교통부 차관(왼쪽 두번째), 민원민 대표,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오른쪽 끝)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폐쇄된 중앙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부의 병목 구간이었던 송학현대 사거리까지 총 500여미터 도로 구간 전체가 8차선으로 확장돼 국도 27호선과 연결됨으로써 그동안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09년도에 당시 국토해양부와 국회와 협의해 장신-송학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 익산시계-익산역 경계간 국도 23호 교차지점까지 전체 구간 1.66km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국토해양부는 전체 1.66km 구간 중 1.16km 구간에 대해만 약 34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470여명이 필요한 도심 주거, 상가 밀집지역의 0.5km 구간을 전역 시비 부담으로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익산시는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수습하며 방분, 지방재정에 많은 압박과 어려움으로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단절돼 익산시민들의 피해가 큰 점과 익산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하차도를 완성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해 왔었다.

이에 익산시와 정치권위각의 노력과 지방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원할한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의지, 그리고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4년간 막혔던 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 시장은 "익산 원도심 발전을 위해 4년간 헌신하신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불행에 불만을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KTX 서부역사가 옛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동철 기자
kyg1541@hanmail.net

13

고등학교 철도 소음 · 진동 피해

민원번호 : 2AA-1308-113972 (교통도로민원과, 배중배 조사관)



민원개요

피신청인이 2003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일반국도 39호선 복선전철사업으로 2008년에 개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센텀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철도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정신적 불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체적인 소음 · 진동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철도 소음 · 진동으로 주민 생활 불편 및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기존 설계된 방음벽의 높이를 보강 설치해 달라.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 소음 · 진동 등 환경피해 대책 방안
- 책임성 소재 및 기관 간 이견(비용 부담 등)

3. 갈등 분석

- 철도공사의 소음 · 진동으로 인해 센텀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의 높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8. 13. 학부모 및 학생 2,960명이 소음 · 진동 방지 대책 요구

-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 및 장대레일 시공에 따른 선로일체화, 운행차량의 전철화 등을 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 관련 지자체는 ‘순간소음은 학생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방음벽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관련 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
- 방음벽 보완 등 기술적인 가능 여부와 예산확보 가능 여부 대두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방음벽 높이를 보완하고, 방음수림 및 기존 방음벽을 정비하는 등의 소음·진동 대책을 마련하고,
 -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선텐고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 (합의) 결과

- 공단은 방음벽의 총 높이를 2.5m에서 4.5m로 설치하고, 굴절형 방음벽으로 설치 완료하기로 하고, 지자체는 방음수목을 확보하여 공단이 식재하되 그 시기는 협의에 따르기로 하며, 교육청은 대책마련 후에도 소음 등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1과 협의하여 소음 등 피해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고등학교 내에 이미 설치된 방음벽의 상태에 대하여도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토록 하는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있을 철도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공공사업인 철도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연말뉴스

2013년 11월 13일 (수)
출판

<권익위, 13일 센텀고등학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중재>

권익위, 13일 센텀고등학교 철도 소음·진동 피해 중재

부산 센텀고교 옆 철길 에 높이 4.5m 굴절형 방음벽 연내 설치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철도와 인접해 있어 6년째 철도 소음과 진동피해를 겪어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센텀고등학교(2008년 개교) 학부모와 학생 약 2,900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관계기관 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이전부터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으며, 향후 2015년으로 예정된 동해남부선 복선공사가 끝나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철도 복선사업의 공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센텀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2,900여명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청서적 불안감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13일 오후 2시 센텀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이태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점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학교 철길 옆 방음벽의 총 높이를 당초 계획했던 2.5m에서 4.5m로 높이되, 현재의 기초구조로는 불가능한 터널형 대신 굴절형태의 방음벽을 올해 말까지 설치해주기로 했으며, 소음과 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음새가 없는 장대레일과 흡음재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공단이 복선전철 공사를 하는 시기에 맞춰 방음수를 확보해 철길옆으로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부산광역시가 위 공사를 시행하는데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소음 등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며, 학교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6.0m 방음벽도 전문가에게 상태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산업기 상임위원은 "오늘 열린 현장조정회를 통해 6여 년 동안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어온 센텀고교생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일보

2013년 11월 14일 (목)
10A면 사회

6년 걸린 학교 소음대책... 권익위 중재로 방음벽 등 합의

부산 센텀고교 민원 극적 해결

철길 옆에 위치한 고교의 '소음 민원'이 6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재송동 센텀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2900명이 2008년부터 제기한 소음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 해결을 위해 센텀고교에서 진행된 현장 조정회의에는 이태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김영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철길 옆 높이 4.5m 굴절형 방음벽 설치, 이음새가

없는 장대레일과 흡음재 설치, 방음수 확보, 방음림 조성 등 권익위의 중재안을 수 용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이전부터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으며, 2015년으로 예정된 동해남부선 복선공사가 끝나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 해 왔다.

그러나 철도 복선사업의 공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의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14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민원번호 : 2CA-1310-281194 (교통도로민원과, 이용범 조사관)



민원개요

전북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교차로는 국도 24호선과 국도 27호선이 교차하는 도로로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상 내리막 굽은 길로 학교 앞 횡단보도 통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니 현재의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우선 교차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와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교통환경 변화추이에 대응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전북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

1. 민원내용

- 학교 앞 교차로가 기형적인 도로구조와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 등으로 학생 등하교길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니 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 개선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 불충족 및 예산부족으로 회전교차로와 무인단속 장비 설치곤란

3. 갈등 분석

- 학교 앞 교차로의 기형적인 구조와 지속적인 이용 차량 증가로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빈번하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주민 및 운전자 모두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자, 제일고 학생회가 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10. 28.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에서 고충민원 제기

- 이에 대해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학교 앞 도로환경이 도로의 경사와, 최소 회전공간 부족, 기형적 도로접속 구조 등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곤란하다.'고

-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은 ‘관할 전체구역에 1년에 약 10여 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는데 현재 학교 앞 교차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교통사고 발생율이 낮아 학생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

4. 갈등해결과정

-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순창경찰서 및 전북지방경찰청, 순창군, 신청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 － 회전교차로는 설치 곤란하나,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적극 검토
 - －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완 등을 통한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 방안 및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회전교차로 설치를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5. 조정 (합의) 결과

- 향후 통행량 및 도로여건 변경 시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회전교차로 설치의 대안으로 2014년 6월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도로·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 보행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단기적으로 이 민원 교차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교통환경 변화추이에 대응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방안 마련
- 그간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 통행을 하던 학생 및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NEWSis()

2013년 11월 21일 (목)
종합

순창제일고 학생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성보 위원장



【서울=뉴스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전라북도 순창군 소재 순창제일고 교앞 진입로와 국도 2개가 얹혀있는 기형적인 학교 교차로에 내년 상반기까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토록 중재한 후 민원을 냈던 제일고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3.11.2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전북매일신문

2013년 11월 22일 (금)
10면 지역

순창제일고 앞 교통사고 위험 사라진다

고충민원 조정회의...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협의

21일 순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등 설치 요구' 건에 대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조정회의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진관 순창경찰서장, 한병용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창제일고 강덕희 학부모 회장, 권소정 부학생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제일고등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에서 학교앞 회전 교차로 등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남

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순창경찰서, 순창군, 신청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입장을 조율해 이날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의 필요성을 다 같이 인식한 가운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 6월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20일간 시범운영한 후 조건없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 관리전환기로 하고, 또 순창군은 도로 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학생 보행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써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돼 순창군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그간 교통사고의 위험속에 등하교를 하던 학생 및 학교 앞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조정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행사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제일고 주변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충민원을 해결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순창=정봉철 기자(kjn2472@)

NEWSis()

2013년 11월 21일 (목)
본라민

순창제일고교 앞 교통민원 현장 방문한 이성보 위원장



순창제일고교 앞 교통민원 현장 방문한 이성보 위원장

【서울=뉴스is】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진입로와 국도 2개가 얹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라북도 순창군 소재 순창제일고교 앞 교차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민원 현황을 듣고 있다. 2013.11.2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주매일

2013년 11월 22일 (금)
11면 지역

학생들 교통사고 위험 없앤다

권익위, 순창제일고 앞 통학로 보행안전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키로

21일 순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순창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등 설치 요구' 건에 대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조정회의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진관 순창경찰서장, 한병용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창제일고 강덕희 학부모 회장, 권소정 부학생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제일고등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에서 학교앞 회전 교차로 등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순창경찰서, 순창군, 신청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입장을 조율해 이날 조정회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의 필요성을 다 같이 인식한 가운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내



지난 21일 '순창 제일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등 설치'에 대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년 6월까지 다지는 무인단속장비를 20일간 시범운영한 후 조건없이 전복지방경찰청으로 관리전환기로 하고, 또 순창군은 도로 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학생 보행안전도를 도모

키로 했다.

이로써 순창제일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 순창군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순창=김수향 기자

뉴스에듀

2013년 11월 22일 (금)
온라인

권익위 “학교진입로-국도 2개 뒤텁킨 교차로 안전책” 중재

【뉴스에듀】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제일고교 앞에 학교 진입로와 국도 24호선, 27호선 등이 기형적으로 엉켜있던 교차로가 제일고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 재개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나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향후 통행량과 도로여건 변경 시 회전교차로 설치까지 검토하기로 관계기관간 합의되면서 일단락되게 됐다.

순창제일고교 앞 교차로는 국도가 두 개나 지나가면서 이용차량이 많고 내리막의 굽은 도로까지 겹치면서 대형화물차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자주 발생해 사고위험이 높아 통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주민과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교통불편을 겪는 곳이었다.

제일고교 학생회는 순창군청을 통해 회전교차로와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들에 전달하였으나 관계기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경사가 급하고 최소 회전 공간이 부족해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전북지방경찰청은 예산 문제를 들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21일 오전 10시 30분 순창군 순창읍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인 대표인 순창제일고 권소창 부학생회장과 강덕희 학부모대표 등 학생·학부모들과 한병용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정진관 순창경찰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에 따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기관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시형운영을 한 다음 전북지방경찰청에 관리권을 넘기기로 했으며, 향후 통행량과 도로여건이 바뀌면 회전교차로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다기능 무인단속장비의 관리권을 설치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을 때 통상 2년간의 정기검사비 및 통신, 전기 사용료 등을 부담지우지만 이번에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다른 부담을 지우지 않고 관리권만 그대로 넘겨받기로 했다.

순창군도 도로·교통 시설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그간 교통사고 위험속에서 동행하던 학생 및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시설이 보충되는 만큼 학교 앞 교차로를 이용하는 학생 과 주민들 모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15

남원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민원번호 : 2AA-1305-261581, 2BA-1308-169381 (교통도로민원과, 최용환 조사관)



민원개요

지난 30년 가까이 88고속도로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와 미로와 같은 마을진입도로 인해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 통로박스 확장, 중매마을 연결로 설치, 천사천 정비방안을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남원IC 확장공사로 재설치하는 통로박스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중매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마을연결로를 설치하며, 집중강우 시 남원IC 옆 천사천(상류구간)이 범람하니 정비해 달라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남원IC 주변마을 접근환경 개선 및 천사천 정비방안
-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및 비용 부담

3. 갈등 분석

-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와 미로와 같은 마을진입도로 인해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민원 제기

* 2013. 5. 28., 8. 19. 지역주민 374명 통행불편 해소 등 요구

- 이에 대해 남원시는 남원IC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고, 해당지역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도시확장가능성이 크에도 고속도로 때문에 마을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불편을 겪어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의 경우 전·후구간의 도로 폭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중매마을 연결로 설치나 천사천 정비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무관하므로 도로 및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 남원시장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으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 통로박스 및 마을 연결로는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비용분담, 천사천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회용가도 설치구간까지 정비, 나머지는 남원시에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 정비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

5. 조정(합의) 결과

-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통로박스(폭 4.5m) 존치·연장 및 신설 통로박스(폭 4.5m) 추가 설치하고, 남원IC 공사구간의 천사천 80m 정비
- 남원시장은 남원IC 확장공사 완료 시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고, 천사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남원IC 주변마을 주민들이 지난 30년 간 겪은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상호 간의 양보와 협조를 기반으로, 통로박스 확장, 중매마을 연결로 설치, 천사천 정비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news1

2013년 11월 21일 (목)
종합

88고속도로 남원IC 주변 교통민원 해소



전북 남원시 월락동을 가로지르는 도로망 © News1

권익위, 통로박스 확장 등 남원시-도로공사 합의 중재

(남원=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남원시 월락동을 가로지르는 88고속도로 때문에 주변 마

news1

2013년 11월 21일 (목)
종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남원시 도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락동 민원인 대표와 이환주 남원시장,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해결 중재안을 제시해 남원시와 도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월락동 민원은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88고속도로 남원IC 확장공사로 교통 불편 등이 발생했다'며 마을 주민들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에 통로박스 확장과 마을 연결로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마을 주민들은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면서 마을 주민들과 남원시, 도로공사의 입장을 조율해온 끝에 이날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통로박스도 확장하기로 했다.

남원IC 접속부 서쪽 도로 하부 수로박스에서 우회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는 약 80m 구간도 정비한다.

남원시는 도로공사 정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난 뒤에는 도로공사로부터 도로관리권을 넘겨받아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남원IC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주민들과 남원시, 한국도로공사 모두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ellotron@

금북日報

2013년 11월 21일 (목)
10월 11일

권익위, 주민 교통불편 민원 해결 '눈에 띄네'

88고속도로 남원IC 마을 연결로·통로박스 확장

시·도로공사 합의안 중재

남원시 월락동을 가로지르는 88고속도로 때문에 30년동안 주변 마을주민들이 겪었던 통행 불편 민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남원시 도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락동 민원인 대표, 이환주 남원시장,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통로박스를 존치 및 연장하고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며, 여기에 드는 추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남원시는 통로박스 구간에 상하수관을 매설하는 등 부대시설 비용과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남원IC 접속부 서쪽으로 하부 수로박스에서 우회용 가설도로가 설치되는 약 80m 구간까지 정비한다 △남원시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확장공사가 끝

나면 도로관리권을 이관받아 중매마을 연결로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남원IC 확장공사가 실시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남원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 미로와 같은 중매마을 진입로로 인해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었고 마을발전도 가로막혔다'며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에 통로박스 확장과 마을 연결로 설치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주민들은 올해 두 차례(5월28일과 8월19일)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면서 마을 주민들과 남원시, 도로공사의 입장을 조율해 이날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성보 위원장은 "남원IC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마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중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남원=홍성오기자 ohhappyman@

16

전주 두현마을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등

민원번호 : 2AA-1308-107275 (교통도로민원과, 유택종 조사관)



민원개요

전북혁신도시사업으로 이전되는 버스정류장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현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와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버스 운행계획 수립시 교통량 및 유동 인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만성지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현 69번, 70번 버스)의 증차계획을 수립하고, 두현교차로를 통과한 곳(만성지구 방향)과 좌회전한 곳(지방행정연수원 방향), 도로 건너편 횡단보도 인근에 버스정류장 3개소를 각 설치하며,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조명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두현교차로에 한해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버스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조속히 이관 받아 관리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 버스정류장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현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와 교통 안전시설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 운영 주체
- 버스 정류장 위치에 따른 이용자의 편리성

3. 갈등 분석

- 전북혁신도시사업으로 이전되는 버스정류장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현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해 주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와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 제기

* 2013. 8. 13. : ○○○ 외 118명 집단 민원신청

- 전주시장은 ‘버스가 두현마을 전에 정차한 후 지방행정연수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하므로 최소 20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기존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버스정류장은 전주시와 신청인이 협의한 위치에 설치할 예정이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는 관련법에 따라 전주덕진경찰서장이나 전주시장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이다’고 답변
-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 이전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필요

4.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 · 중재안 도출
 - 주민 및 피신청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조정안 확정

5. 조정(합의) 결과

-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전북혁신도시의 버스 운행계획 수립시 버스 증차계획 수립
-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즉시 이관 ·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두현교차로 주변에 버스정류장 3개소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조명등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며, 두현교차로에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전북혁신도시 적기 진공 및 신청인 요구 반영으로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2014. 3. 현재 조정서와 같이 버스정류장 및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전주일보

2013년 11월 29일 (금)
04면 사회

전주 두현마을 교통불편 해소

권익위, 마을에 가까운 새 정류장 설치·버스 운행 횟수 늘리도록 권고

전주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백미터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덕진구 두현마을 180명(50세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두현마을서 조정회의를 갖고 새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마을을 지나는 버스의 횟수를 늘리도록 권고했다.

두현마을 주민들은 올해 말 전북혁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가 완료되면 마을을 지나는 버스의 노선 수가 늘어 이전보다는 더 편리하게 전주 시내로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선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마을에서 멀리 이전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게 되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백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니 버스정류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시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좌회전을 앞둔 교차로에 정류장을 만들 때는 교차

로(3지교차로)에서 최소 200m는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 안전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 118명은 지난 8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이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민원인 대표,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 박유성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조봉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중재안에 따라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버스가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후 안전하게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되, 만성지구 방향과 지방행정연수원 방향, 전주시내 방향 등 세 방향으로 뻗은 교차로이니 만큼 총 3개의 정류장을 원래 계획보

다 마을에서 더 가깝게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또 ▲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의 버스 운행계획 수립시 교통량과 유동 인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만성지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현 69번, 70번 버스)의 횟수를 늘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 덕진경찰서는 버스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속카메라(신호위반 및 과속)를 설치하면 조속히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신영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두현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釜北日報

2013년 11월 29일 (금)
02면 중판

전주 두현마을 교통불편 민원 해결

권익위, 버스 운행 횟수 늘리고 버스정류장 설치 중재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하게 돼 교통불편이 우려됐던 전주시 덕진구 두현마을 주민(180명, 50세대)들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두현마을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버스 노선수가 늘어 교통이 편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버스정류장이 마을에서 멀

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게 되자 시행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주시 등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좌회전을 앞둔 교차로에 정류장을 만들 때는 교차로에서 최소 200m는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차례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친 국민권익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민원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 전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버스가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되, 세 방향으로 뻗은 교차로이니 만큼 총 3개의 정류장을 원래 계획보다 마을에서 더 가깝게 새로 설치키로 했다.

김준호기자 kimjh@

전북매일신문

2013년 11월 29일 (금)
02면 종합

권익위, 전주 두현마을 교통불편 해결

버스 운행횟수 늘이고 정류장 가깝게 설치 합의

전주 덕진구 두현마을 180명(50세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민원인 대표를 비롯해 장삼진 전주시 부시장, 조동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관계기관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두현마을 주민들은 올해 말 전북혁신도시가 완료되면 마을을 경유하는 시내 버스 노선 횟수가 늘어나 더 편리하게 전주 시내로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버스정류장이 마을에서 멀리 이전하면서 불편이 가중됐었다.

이에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시 등에 요청했으나 관계기관들은 좌회전을 앞둔 교차로에 정류장을 만들 때는 교차로(3지교차로)에서 최소 200m는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 안전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버스가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후 안전하게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되, 만성지구 방향과 지방행정연수원 방향, 전주시내 방향

등 세 방향으로 뻗은 교차로이니만큼 총 3개의 정류장을 원래 계획보다 마을에서 더 가깝게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조별 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의 버스 운행 계획 수립시 교통량과 유동 인구 등을 면밀히 분석, 만성지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현 69번, 70번 버스)의 횟수를 늘이는 계획을 수립했다.

덕진경찰서는 버스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로 인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속카메라(신호위반 및 과속)를 설치하면 조속히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나연식 기자(meg75@)

새만금일보

2013년 11월 29일 (금)
04면 사회

덕진구 두현마을 교통불편 걱정 끝!

권익위, 버스 증차 운행·정류장 추가 설치 등 교통갈등 중재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전주 덕진구 두현마을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주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 100m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두현마을 180명(50세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새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마을을 지나는 버스의 횟수를 늘리도록 중재함으로써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두현마을 주민들은 오는 12월 말 전북혁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가 완료되면 마을을 지나는 버스의 노선 수가 늘어 이전보다는 더 편리하게 전주시내로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선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은 마을에서 멀리 이전하게 돼 오히려 더 불편해지게 된 것.

이에 마을 주민들은 노약자

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백 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니 버스정류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시 등에 요청했으나 관계기관들은 좌회전을 앞둔 교차로에 정류장을 만들 때는 교차로(3지 교차로)에서 최소 200m는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 안전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 118명은 지난 8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28일 오후 2시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민원인 대표, 장삼진 부시장, 박휴성 덕진경비교통과장, 조동호 전북혁신도시사업단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버스가 두현마을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후 안전하게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되 만성지구 방향과 지방행정연수원 방향, 전주시내 방향 등 세 방향으로 뻗은 교차로인 만큼 총 3개의 정류장을 원래 계획보다 마을에서 더 가깝게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의 버스 운행계획 수립시 교통량과 유동 인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만성지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현 69번, 70번 버스)의 횟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세형기자

/chosh6474@hanmail.net

2013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고충민원특별조사

1.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1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변경 요구

민원번호 : 2BA-1310-013747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정덕양 조사관)



민원개요

한국전력공사와 군산시가 MOU를 체결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의 농지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가격 하락, 건강위해 등 주민피해가 심각하므로 ‘당초노선’ 대신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건설용지 및 공유수면을 따라 송전탑이 설치되는 ‘대안노선’(미군전투비행단 옆으로 우회)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주체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권익위가 미군전투비행단에 대안노선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모든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대안노선을 추진하거나 당초노선을 계속 진행하는 합의를 마련함으로써 6년간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집단갈등 해결

1. 민원내용

- 농지를 경유하여 토지가격 하락, 건강위해 등 지역 주민피해가 심각한 ‘당초 송전탑 노선’ 대신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건설용지 및 공유수면을 따라 송전탑이 설치되는 ‘대안노선’으로 송전탑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송전탑 건설 필요 여부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토지가격 하락 및 건강권 침해 정도
- 대안노선의 경우 미군전투비행단 전투기 등의 비행 및 이착륙 저해 여부

3. 갈등 분석

- 한전은 군산지역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대규모 기업 유치에 따른 전력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대안노선으로 가는 경우 당초 노선보다 2,095억원의 추가 비용 소요되며, 각종 암 발생 등 건강상의 피해는 의학적으로 검증 안됨

- 주민들은 전력공급이 시급하지 않으며, 계획 노선대로 건설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백혈병과 각종 암 유발→ 대안노선 공사시 628억원의 사업비만 추가
- 대안노선의 송전탑이 미군부대 비행안전 저촉 여부에 대해 한전은 저촉됨을 주장하나, 주민들은 한전이 미군측에 조회 시, 철탑높이와 전류값을 부풀려 인정불가

4. 갈등해결과정

- 군산 새만금 송전탑 선로 변경 민원은 밀양 송전탑 민원과 유사하게 송전탑 경유지 마을주민과 한전이 6년여 동안 양보나 타협 없이 대치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상호 간 불신의 벽이 높고, 감정의 골이 깊어 협상 자체가 지난한 상황
 - ‘12. 4. 한전 용역업체와 주민 간 충돌로 8명 부상, 주민들 현장감시소 운영(6개소)
- 주민들 의견 경청에 주력, 현지에 14차례 출장하여 주민들과 한전 간 신뢰회복과 함께 갈등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끝까지 중재안과 대안을 제시

5. 조정(합의) 결과

-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미터’로 일괄 설정하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 방해여부’ ‘미군측 용인 최대 가능높이’ 등에 대한 질의서를 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부대에 질의,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며, 대안노선 가능 시 대안노선으로, 불가 시 당초 노선대로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합의

6. 이행여부 및 시사점

- 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형성된 당사자 간 신뢰회복 및 양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차단
 - 이러한 극한 대립의 공공갈등 집단민원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미군측의 질의회신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경우든 공사재개 가능

朝鮮日報

새만금 주민들 “送電塔, 국가와 지역에 꼭 필요”

‘송전탑 합의’ 시면에서 계속

협상과 시위가 이어지던 올해 초 대책위는 종교·환경단체의 제의를 받았다.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대책위는 그러나 공사를 멈춘 현전과의 약속을 지켰다.

대책위원들은 “전기와 송전선로는 국민 생활과 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투쟁의 강도가 아무리 높아도, 명분과 실득력이 없으면 힘을 잃는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전은 주민을 믿게 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기로 했다. 주민 요구대로만 경강 하구와 새만금 방수제(내부둑) 및 도로를 따라 선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민 요구는 마지막 단계에서 벽에 부딪혔다. 새만금 남북도로를 따라 세워질 송전선로가 내륙의 미(美) 공군 비행장 전투기 이착륙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안보와 국가기관이 걸린 문제에 국민권익위가 나섰다. 한편과 주민들은 그 중재 아래 머리를 맞대고 높이 60~70m인 이 구간 송전선로를 높이 30.4m까지 낮추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되면 전선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감안해, 한전

은 송전탑 사이 거리를 450m에서 250m로 줄여야 한다. 당연히 비용도 더 든다.

양측은 이같이 낮은 선로도 비행장 운영에 장애를 주지 않을지 미공군의 기술 검토를 거쳐기로 했다. 주민들은 미 공군이 “이 높이도 어렵다”고 밝혀오면 우회 노선을 포기하고 당초 노선대로 건설해줘, 적절한 피해 보상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끝까지 믿고 협상

주민들은 “명분 있는 투쟁”

韓電은 “비용 더 들더라도...”

美軍비행장이 변수

우회노선 주장하는 주민들

“비행기 이착륙에 장애 준다고

최종 결론 나면 우리가 양보”

새만금 송전선로 가운데 주민들이 우회를 요구해 온 구간은 회현면-새만금 변전소 구간으로, 80여 마을에 13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마을은 송전선로가 마을 앞 30~50m를 지난다. 주민 300여 가구는 선로에서 50m 거리 안에서 산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선로가 2



개로 제한 송전이 이뤄지고 있는 군 산산업단지의 전력 사정을 원활히 하고 새만금에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됐다. 새만금은 산업단지 일부가 완성되면서 최근 2개 공장이 착공됐지만 아직 전력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 밀양에선 일부 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경비 속에 송전탑 10여기의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때 상주했던 외부 세력은 철수했고, 간간히 ‘힐만버스’가 내려가 주민 집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보(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옥서면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 노선 예정지를 찾아 현장 상항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군산시청에서 조영 회의를 열고 새만금 송전선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KBS

[뉴스9] 새만금 송전선로 6년 갈등 '종지부'



[뉴스9] 새만금 송전선로 6년 갈등 '종지부'

<앵커멘트>

새만금 송전선로를 둘러싼 주민과 한전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공사 시작 6년 만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송전선로 예정지역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민들과 한전은 주민들이 주장해온 대안 노선의 송전탑 높이와 반사파 등이 전투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군에 질의한 뒤, 미군의 회신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녹취> 고윤석/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장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녹취> 박규호/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상협약과 말씀해주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권익위는 조정안이 합의된 만큼 곧바로 미군과 합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미군이 전투기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새만금 방수제를 지나는 대안노선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이 오면 원래 노선대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녹취>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사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 문제에 관한 집단민원에 관해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6년 넘게 계속돼 온 갈등이 꾸준한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결국 해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기자

입력시간 : 2013-12-12 (18:10)

朝鮮日報

‘송전탑 합의’ 群山은 밀양과 달랐다

새만금 주민들, 올해초 외부세력의 연대 제의에
“투쟁 강도 높아도 명분 잃으면 안된다”며 거절
韓電과 협상... 5년만에 타협·양보로 분쟁 해결

새만금 송전선로를 반대해온 전북 군산 주민들에게도 경남 밀양처럼 연대 투쟁하지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 대책위는 상대인 한전을 믿고 그 유혹을 뿌리치며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12일 국민권익위의 중재 속에 한전, 반대 대책위의 타협과 양보로 5년 만에 타결을 봤다. 주민들은 당초 주장대로 송전선로 우회를 추진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

고 판명되면 우회 주장을 포기하고 당초 노선대로 건설하는 방안이 동의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군산시 임피면 군산 변전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345kV의 전력을 보내는 선로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군산시와 한전이 협약하면서 착수했다.

그날 주민들은 군산시청을 찾아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전체 송전선로 30.4km 가운데 마을과 농경지를 지나 는 송전선로 16km의 우회를 요구했다. 권

강과 마을 조망을 해치고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주민들은 60차례 이상 전북도청과 서울 한전 본사, 과천 정부청사까지 찾아 집회를 열었다. 경비인들과의 충돌로 20여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전은 군산 변전소~화현면 사이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한 뒤 작년 7월 공정률 68%에서 공사를 멈췄지만,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됐다.

군산=김창곤 기자 A2면에 계속

“외부세력과 연대 투쟁했다면 문제 안 풀렸을 것”

반대투 고윤석 위원장 인터뷰

새만금 송전선로 반대대책위는 외부 세력을 뿌리쳤다. 고윤석(60·사진) 위원장은 “투쟁도 법률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면 투쟁 강도는 높아졌겠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부 세력의 제의를 왜 거절했나.

“투쟁에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협상의 바탕은 신뢰다. (비행장 운영 등) 안보에 문제가 없다



장에게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 투쟁 강도를 높이면 더 많은 것을 얻지 않나.

“우리는 보상에 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투쟁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게 아니었다. 보상을 말하면 본질이

면 주민 요구를 최선으로 대해 검토하겠다는 조한익 한전 사장의 구두 약속을 믿었다. 대신 대책위는 조 사

왜곡된다. 전기는 국민 생활과 산업에 꼭 필요하다. 연대에 찬성하는 대책위원도 있었지만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 밀양 사태에서 뭘 느꼈나.

“안타깝다. 밀양은 외부 단체의 주장을 따르며 처음 입장을 번복했고 국기와 국민 모두 피해를 당했다. 우리도 밀양과 비슷한 시기에 외부 연대 제의를 받았다. 전국에 우리 말고도 송전선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 김창곤 기자

東亞日報

밀양과 다른 군산... 권익위 중재로 '새만금 송전탑 5년 갈등' 해결

외부세력 개입 막고 주민-한전 대화로 풀었다

미군 수용엔 '대안 송전선로' 건설
거부엔 기존대로 공사계개 합의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및 전북 군산시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극한 갈등이 12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5년간 갈등을 빚어온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약 6개월 뒤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현정인 새만금산업단지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0.4km 구간에서 걸쳐 송전탑 88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km 구간에서 송전탑 42개를 설치했으나 군산시 화면

면 옥구읍 마성동 구간의 46기는 주민들이 △평균의 130 원 이상 하락 △백열병과 암 발생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인가가 없는 새만금 전설용지(한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를 지난해 '대안 송전선로'로 제시했지만 이 구간에 주둔 중인 미군(제8전투비행단) 측이 전투기 운항에 방해가 된다고 '수용 불가' 의사로 밝혔다. 주민들은 "한전과 군산시가 미군 측에 무조건 안 된다고 단호하고 했을 것이다. 한전과 군산시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하려 했

지만 주민들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립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달 11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전 조환이 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고은석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군산 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오랜 갈등을 끝내는 조정사에 합의했다.

권익위가 미군 측에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이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뒤 미군 측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행정과 군산시, 주민들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미군이 받아들이면 '대안 송전선로' 공사가 재개된다. 미군이 거부하면 기존 구간에 도로 공사를 재개하고 한전 군산시 전보도가 법에 따

른 보성과 함께 지역사업을 지원한다. 권익위는 늦어도 6개월 뒤 미군으로부터 답을 올 것으로 보고 있다.

9월까지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오랜 갈등이 돌파구를 찾게 된 비결은 결국 '대화'와 '경청'이었다. 주민대책위가 10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와 주민들은 이달까지 14차례 만났다. 처음 서너 차례는 권익위가 5시간 이상씩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기만 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자비 5000만 원을 들어 전복대의 한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 '대안 송전선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공사 강행 논리만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권익위 측은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뒤 한전 고위관계자를 대화에 참여시켰고 한전 측은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윤한준 기자 yunhan@donga.com

▶A2면에 계속

東亞日報

권익위, 주민 주장 경청 한전, 송전탑 낮춰 양보 주민들, 마음 열고 수용

밀양과 다른 군산 ▶A1면서 계속

주민대책위 법률 간사를 맡고 있는 강경식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은 차차 권익위가 미군에 보내는 객관적인 질의라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납득하겠더라며 양보하는 태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전도 미군 측에 제의할 송전탑의 건설 높이를 한계선까지 낮췄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자기 집 부동산을 계약하는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기만 했어도 진짜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와 주민들은 경남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달리 새만금에서 갈등이 해결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민들이 막은 점을 꼽았다. 강 씨는 "외부 단체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주민들이 거부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지 사회 갈등으로 만드는 운동권이 아니다. 외부 단체가 개입했다면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해소

국민권익위 조정안 주민-한전 수용 합의... 집단민원 해결 본보기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첨예한 갈등으로 6년간 지연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고 계기운행 시 정자파의 방해 여부,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 세 가지를 군산 미군 공군부대에 질의, 그 결과를 한전과 주민이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km)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해 8월까지 임파·대야·화현면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지만 나머지 화현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왼쪽) 위원장이 12일 집단민원이 발생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현장을 돌고 있다.

면, 옥유곡,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 전체 공정률은 68%대에 그쳤다.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토지 경유 노선으로 공사하면 땅값 폭락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산권과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며 "새만금 건

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으로 건설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미군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기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대책위도 한전이 대안노선을 고

의로 회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최저 50m·최대 75m)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대안노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미군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에 대해선 검토 불가 화신이 와도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양보했다. 미군의 질의회신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미군이 대안노선을 받아들이면 대안노선을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불가 화신이 오면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조정은 대화와 신뢰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서울신문

새만금 송전탑 갈등 6년 만에 타결

권익위, 한전·주민 현장 중재
송전탑 최저 높이 39.4m 조정
합의안 검토 후 6개월 뒤 착공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서 이견과 갈등이 얹혔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한국전력,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고, 주변 미군 비행장의 계기운행 전파 방해 여부와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를 미군부대에 질의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전과 주민대책위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합의안에 대한 미 항공표준국의 검토를 거치면 6개월 후쯤 본격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08년 12월 추진계획을 세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산업단지

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까지 임파·대야·화현면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화현면~미성동 구간에 송전탑 46기를 세우는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전답을 경유해 재산 손실을 보고, 일부 송전탑은 마을과 가까이 각종 질병이 우려된다면서 대안(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내놔다. 그러나 이 노선은 미군 측이 군산비행장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면서 불가 답변을 냈다. 주민대책위는 한전이 대

안을 회피하려고 송전탑 높이와 전류값을 부풀려 미군에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뽀빠옴과 소송전이 이어졌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현장 조사를 벌여 합의에 다다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한 사례"라면서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한겨레

새만금 송전탑, 주민-한전 6년 갈등끝 '조건부 합의' 새 국면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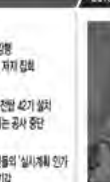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 대표들과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미군 건설'에 따라 우회선로 건설 여부를 확정하는 데 합의했다. 주민미군과 태도에 따라 주민 반발 등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군산 시민들과 중재로 조건부 합의를 맺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새만금 송전탑 관련 현상 조정화해를 열어 인근 공공비행장을 운영하는 주한미군 쪽이 송전탑 높이를 30.4m까지 낮추는 데 동의할 경우, 한전은 우회선로를 건설한다는 조항안을 붙여 냈다. 반면 주한미군 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불복시켜 기존 선로 건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미군 측은 최선으로 6개월가량 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예초제방금 산입단지 전역 공금을 위해 군산발전소-새만금발전소 구간 60.6km에 35.5m 송전탑 85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설 기업들에 전력 공급을 위해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한전은 2008년 12월 군산외곽역까지를 세제 한도, 지난해 4월까지 일부 구간에 송전탑 40기를 설치했으나 주민 반발로 나머지 46기를 세우지 못했다. 현재 공진율은 60%에 그쳤다.

주민들은 '한전 개입'에 눈발 퍼붓고 송전탑 건설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지난 15일 남는 예산 파행을 보며, 일부 송전탑은 마을과 300m로 가워 주민 전부를 해칠 수 있다는 송전

송전탑 높이 30.4m로 낮추는데 주민미군이 동의해 우회로 건설' 등의 안하면 기존 선로 그대로 주민들 '미군이 송전탑 높이 문제 제대로 조사해 결과에 깨끗이 승복'

선로로 재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지 중파를 하면 30.4m에 달하는 송전탑이 방생 할터라 거부했다.

주민들은 제1차 3월 30.4m로 30.4m를 줄여 주민미군에 '마을과 논밭을 우회하는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 주민 피해가 없고 공사가 지장이 크지 않다고 나왔다. 그러나 한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회노선은 37.5km에 달할 13기를 세워야 해 비용이 600여만 원에 달해 2500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중단된 2012년 4월, 한전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도 감시초소를 세워 저항했다. 주민 8명이 다치고 25차에 달하는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일방 송전탑 건설 못지않게 격렬하게 대항했다. 이때까지 조고

일 송전탑 건설 문제로 격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전탑과 비슷한 양상이다. 일방 폭과 달리 군산 쪽이 조건부 합의에 이른 것은 일단 자립자단체의 중재 시도에서



전북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왼쪽)과 고충민원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조건부 우회노선 건설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자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군산시청은 '주민과 한전이 극한 대립을 했을 때 대화를 이끌었고 주민 참여도 여러 차례 됐다. 주민들이 송전탑 높이 30.4m를 제안했을 때도 한전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수용과 도와 강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군산시 등은 주한미군 쪽에 '우회선로 건설 때 송전탑 높이를 34.3~35m로 할 경우, 일방적으로 30m로 할 경우 비합리적 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군 측은 둘 다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

했다. 주민 100명은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이제삼 달간 10.8%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도 선을 두고 안전과 협상을 하는 등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한전 편을 들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무시했다. 많았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전 때문에 주민들의 대안은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많은 송전탑은 수도권 전역 공금을 위한 초 고압 송전선로이고, 새만금 송전탑은 저압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압 선로라는 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강도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의 역전과 따라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 주민이 반대하는 종전 노선을 채택하게 되면 보상 문제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주민 전문성(2013)은 '미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하면 그때 가서 투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대 30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일방 송전탑 보상 수준에 순응해 지역협력사업 및 개발 지구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군산시·군에서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 상황실에서는 '부정적 합의와 하면 결국 모두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으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주민 전체가 합의했고, 주민들이 받을 보상이다. 미군 쪽이 구체적인 조항적인 조항이 제대로 하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전력산업지사 윤근화 실장은 '주민이 원하는 우회선로로 가면 헬륨을 더 채워야 해 부담이 크지만, 서민과 결과 수복을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삼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회화'와 '선화'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산 송전탑 반대 최후판 기지 ok07@hanmail.net

경향신문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6년 갈등' 일단락

한전·대책위, 권익위 조정안 조건 없이 수용 합의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갈등으로 6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타결국면으로 전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시청에서 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 군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미군부대에 집의한 담판결과에 관계없이 한전과 대책위가 권익위의 조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한전과 주민대책위는 이날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송전탑 높이가 35~39.4m 이내에 가능하다고' 답신이 올 경우 한전이 양보해 새로운 노선의 송전탑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또 미군 측으로부터 '검토불가' 회신이 올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과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 높이의 송전탑 건설, 계기운행 시 전자파 방해 여부, 미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 3개 질의서를 미군 측에 보내기로 했다. 미군 측의 질의 회신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미군 측의 회신이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불가입장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경우든 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km)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

를 체결한 후 지난해 8월까지 임파·대야·회현면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다. 나머지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공정률은 68%대에 그쳤다.

새만금송전선로 갈등이 봉합국면에 접어들면서 극심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주목되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밀양의 경우 보상과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해 법률 등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금으로선 권익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 | 박용근·김정훈 기자
yk21@kyunghyang.com

중양일보

군산 송전탑 갈등 박수치며 해결 뒤엔
“싸움 대신 협상” 평화 멘토들 있었다

목사 10명의 소통 리더십

“사회 지지 중요” 주민 설득

주민들은 외부 세력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몸싸움과 시위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5년간 끌어온 지역 갈등을 해결했다.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주민과 한전 측의 박수 속에 타결된 전북 군산 새만금송전선로 건설 얘기다.

경남 밀양 등지에서 송전탑 문제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과 달리 군산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 대는 숨은 10명의 리더가 있었다.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회 목사들이다.

군산 송전탑은 2008년 12월 군산시장과 한국전력 사장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일부에선 공사가 진행됐지만 일부에선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초엔 군산시 회현면 등지와 한전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수시로 몸싸움이 생겼고, 이로



군산 수산교회(사진) 목사가 주축이었다. “폭력은 답이 아니다”는 생각에서였다. 윤갑식(63·월연교회) 목사는 “경남 밀양처럼 극단으로 치닫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주민들이 다칠까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원색적이고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만과 분노를 그대로 분출할 게 아니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동시에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 주민들이 때를 쓴다”는 오해 풀이에도 나섰다.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10만 부를 목사들이

자비로 만들어 군산 시내에 뿌렸다.

대화의 마당 또한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민 대표와 한전, 군산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송전탑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체 유해 논란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목사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다. 한전과 주민은 대화의 상대가 됐다. 지난 7월엔 조환익 한전 사장이 주민 대표들을 서울로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그 직후 일부의 부 단체가 “연대 투쟁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했다. 새만금 송전선로건설 반대대책위원회의 정성 간사는 “우리끼리 잘해 나가는데 외부 세력과 힘을 합쳐 공연한 난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12월 한전과 “마음을 우회하는 송전선로를 만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군산과 달리 밀양은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13일에는 주민 권모(41·여)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수만대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지금까지 주민 2명이 “내 땅에 송전탑은 안 된다”며 목숨을 끊었다. 주민들은 암·백혈병 발생 등 건강 위협,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외부 세력도 개입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군산시 임피면 군산 변전소에서 군산시 산북동 새만금 변전소까지 총 30.4km 구간에 345kV급의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밀양 새만금송전선로 가운데 회현면~새만금 변전소 구간의 우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날 권익위가 미군 측에 송전탑 높이를 건설이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은 뒤 그 결과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기로 했다. 주한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선로 건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황선승·권철양 기자
kwon6914@joongang.co.kr

2013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발행일	2014. 04
인 쇄	2014. 04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조사기획과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전 화	02-360-2794
팩 스	02-360-3535

제작 · 인쇄 초이스디자인 02-2275-2633

